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	생산·이관·수집
혁신과제	1-1	대통령기록물 생산지원 및 분류/평가 체계 개선
과제성격	법령개정, 업무개선, 기준마련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생산지원단	

<추진계획>

- 대통령기록물 분류 체계 및 선별·평가 정책 마련(~'20.12월)
 - 분류·평가 체계 관련 시행령 개정안('19.6월) 및 분류·평가 체계 초안 마련('19.12월)
 - 대통령기록물 분류 체계 확정, 선별·평가 기준 및 세부지침 마련 등 정책 마련('20.12월)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1	2	3	4	1	2	3	4
대통령보좌기록물 업무기능 및 기록유형 분석								
대통령자문기관 단위과제 보존기간 재설계 지원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 초안 마련								
대통령기록물 선별·평가 정책 초안 마련								
분류체계 및 선별·평가 정책 최종안 마련								

<추진실적>

1/4 분기	○ 대통령기록물 분류 및 보존기간 개선 추진 계획(안) 보고(2.21) ○ 대통령자문기관 분류체계 관리 -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보존기간 재설계(4개 기관) ○ 19대 대통령기록물 선별, 평가 정책 수립 추진 계획(안) 보고(2.27) ○ 대통령기록물 분류 및 평가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신설 : 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 별도 운영 제안
2/4 분기	○ 대통령기록물 분류 및 평가 체계 개선 - 대통령기록관 혁신토론회(5차) 내부 의견수렴 및 추진현황 보고(5.7) - 대통령기록물 분류·평가 체계 개선 전문가 회의(6.21) 및 상반기 추진 결과 보고(6.26) - 대통령보좌기관 조직·업무기능 조사 및 기록유형 분석(계속) ○ 19대 대통령기록물 선별, 평가 정책 수립 - 해외 아카이브즈의 영구보존 대상 평가전략 분석 보고(5.3) ○ 대통령기록물 선별, 평가 정책 수립 관련 해외사례 검토 관내 세미나(5회) ○ 대통령기록물 분류 및 평가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 보존기간 별도 운영 관련 본원 협의(5.20) 및 보고(5.30)
3/4 분기	○ 대통령기록물 분류 및 평가 체계 개선 -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 이슈페이퍼 작성(9.30) - 대통령보좌기관 조직·업무기능 조사 및 기록유형 분석(계속) ○ 대통령기록물 분류 및 평가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 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 별도 운영 관련 개정안 마련
4/4 분기	○ 대통령기록물 분류 및 평가 체계 개선 - 대통령보좌기관 조직·업무기능 조사 및 기록유형 분석(계속) - 대통령비서실 분류체계(경제분야 등) 초안 보고(12.26) -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방안 초안 보고(12.31) - 대통령자문기관 신설 단위과제 보존기간 검토(~12월)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	생산·이관·수집									
혁신과제	1-2	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재설계									
과제성격	시스템개선					추진완료시기		2022			
담당부서	보존복원과										
<추진계획>											
○ 차세대 대통령기록관리체계 모델 설계('19.8월) 및 시스템 고도화(~'20.12월) -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PAMS ISP) 수립 완료(~'19.8월) - 예산 확보 및 고도화 추진계획 수립(~'19.12월),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22년)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2021		2022	
		1	2	3	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ISP 사업 추진											
시스템 고도화 예산 확보											
시스템 고도화 계획 수립											
시스템 고도화	PAMS, 데이터세트										
	포털 및 웹기록										
	SNS 등 신규 유형										
<추진실적>											
1/4 분기	○ 생산기관 정보화전략계획 및 PAMS ISP 정보 공유(제2차 내부토론회) ○ PAMS ISP 사업 계약절차 진행 및 사업자 선정·계약('19.3.7.) ○ PAMS ISP 사업 업무협의회 운영 계획 수립 및 보고('19.3.19.) ○ PAMS ISP 사업 착수보고회 및 제1차 업무협의회 운영('19.3.29. 관장외 26명)										
2/4 분기	○ PAMS ISP 관련 현황분석을 위한 내·외부 인터뷰 추진('19.3.26.~4.18.) * (대관) 4개과 14개팀, (기록원) 전자기록관리과, (외부) 서울기록원 ○ PAMS ISP 사업 제2차 업무협의회(환경·현황 분석결과 공유) 운영('19.4.30.) ○ 20년 시스템 고도화 소요예산 설명(본부 '19.4.25./'19.5.17./ 기재부 '19.5.30.) ○ 중간보고회 및 제3차 업무협의회(목표모델 개선방향 공유) 운영('19.6.5. 관장외 41명)										
3/4 분기	○ PAMS ISP 사업 제4차 업무협의회(목표모델, 이행계획 보고·논의) 운영('19.7.16.~17.) * 부서별 집중 토론(대관 업무별 12개팀 참여) → 4개 분야 42개 요구사항 도출 → 최종보고서 반영 ○ PAMS ISP 사업 검수·종료(8.4.) 및 최종보고회 개최(8.21.) ○ '20년도 차세대 PAMS 구축 예산 대응 → 정부(안) 37.6억 확정 ○ '20년도 차세대 PAMS 구축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검토 추진(9월) *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 등 SW 기술검토, 예산확정에 따른 사업범위 검토 등										
4/4 분기	○ '20년도 차세대 PAMS 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조달청 발주 추진 - (내용) ISP*기반 차세대 PAMS 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산출내역 등 작성 ※ 사업계획 수립(11~12월) → 일상감사·사전협의(12.20.) → 적정 사업기간 산출(12.24.~27.) → 계약의뢰('20.1월초 예정) ○ '20년도 차세대 PAMS 구축을 위한 구축 추진단 구성 및 1차 회의개최(12.23.) - (구성) 시스템구축팀(5), 프로세스검증팀(19), 정책지원팀(3)으로 구성, - (역할) 각 분야별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여 사업 단계별 산출물 검토, 해당 업무 프로세스, 기능 구성 및 결과 검수 등 수행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Ⅱ	등록·재분류·지정 등											
혁신과제	2-1	다양한 기록유형별 등록 메타데이터 정의 및 업무방식 개선											
과제성격	업무개선, 기준마련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기록관리과												
<추진계획>													
○ 비전자기록물 등록 메타데이터 및 업무방식 개선(~'19.12월) - 현황조사·분석 및 메타데이터 개선방안 마련(~'19.9월) - 정리·등록 업무방식 개선방안 마련(~'19.12월)													
○ 전자문서·데이터세트·웹기록 등 정리·등록 체계 수립(~'20.12월)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1	2	3	4	1	2	3	4	
비전자 기록물 메타데이터 현황 조사 및 분석													
비전자 기록물 메타데이터 개선(안) 수립													
정리·등록 업무방식 개선(안) 수립													
전자문서 등록 체계 수립													
웹기록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기록정보자료 등록 체계 수립													
<추진실적>													
1/4 분기	○ 역대 대통령 행정박물 전수조사 및 형태별 현황 분석(3.18., 메모보고) ○ 관리전환 대통령 시청각 기록물 현황 및 등록 항목 분석(2.28., 메모보고)												
2/4 분기	○ 행정박물 등록 메타데이터 개선방안 초안 마련 및 의견수렴(제4차 내부토론회*) * 일시/장소/참석 : '19.4.26.(금) 10:00 ~ 11:00, 중회의실, 대통령기록관장 외 26명(* 발표: 이승민) ○ 대통령 시청각 기록물 등록 메타 및 업로드 항목 검토(내부 자문회의*) * 일시/장소/참석 : '19.5.16.(목) 14:00 ~ 15:30, 중회의실, 기록서비스과 팀장 외 15명(* 발표: 김성겸) ○ 시청각 등록 메타데이터 개선방안 초안 마련 및 의견수렴(제8차 내부토론회*) * 일시/장소/참석 : '19.6.18(화) 15:00 ~ 16:00, 중회의실, 대통령기록관장 외 20여 명(* 발표: 김성겸) ○ 역대 대통령 미등록 간행물 등록전 폐기 대상 선별 및 정리 추진(~7월*) * 내외부 자문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 심의 완료												
3/4 분기	○ 공공기록 유형별 메타데이터 설계안 내용 검토(원내 검토회의*) * 일시/장소/참석 : '19.8.8.(목) 14:00 ~ 16:00, 대전스마트워크센터, 업무협의회 11명(* 참석: 임근혜, 이승민) ○ 공공기록 시청각 메타데이터(안) 검토·보완(원내 검토회의*) * 일시/장소/참석 : '19.9.5.(목) 14:00 ~ 16:00, 대전청사 2동 505호, 업무협의회 5명(* 참석: 김성겸)												
4/4 분기	○ 역대대통령 비전자기록물 등록오류 분석 및 PAMS 반영 * 비실명화 처리 결과(8.26.), 역대 대통령 비전자기록물 등록오류 분석 결과 보고(12.19.) ○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행정박물 처리방안 보고 * 행정박물 용도별 유형분류 및 건별 검토의견, 처리방안 등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 보고(12.26.)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I	등록·재분류·지정 등
혁신과제	2-2	대통령 지정기록물 관리 업무 개선
과제성격	법령개정, 업무개선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기록관리과	

<추진계획>

- 관계 법령개정 및 관리업무기능 시스템 반영(~'20.12월)
 - 시행령 개정안 마련(~'19.3월)
 - 해제된 지정기록물 전자적 인계 및 데이터 전수조사(~'19.12월)
 - 미등록 지정기록물 등록 및 관리업무기능 시스템 반영 (~'20.12월)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1	2	3	4	1	2	3	4
시행령 개정안 마련								
지정기록물 전자적 인계 추진								
지정PAMS 데이터 전수조사 및 현행화								
미등록지정기록물 정리 및 시스템 등록								
지정기록물 관리수행 업무 시스템 추가 반영								

<추진실적>

1/4 분기	○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4항, 제10조의2 개정 및 제10조의5, 제10조의6 신설 : 전직대통령 열람, 지정절차 투명화, 해제 절차 추가, 열람대리인 선정 등 * 경과 : 개정과제 수요조사(~1.14.) → 1차 검토회의(3.6.) → 2차 검토회의(4.9.)
2/4 분기	○ '18년 해제 지정기록물 인계 계획 보고(내부결재) - 비전자 일반 2,352건, 비밀 568건 인계완료(5.13, 5.16 메모보고), 전자 진행중 ○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취합본 완성 및 의견수렴(~4.29.)
3/4 분기	○ 지정PAMS 내 지정해제 기록물 현황 및 인계방안 검토보고(내부결재, 7.29) - 지정해제 그룹별 프로세스 진행상황 점검 및 인계·미인계 대상 선별, 오류해결 ○ 지정PAMS 데이터 전수조사 및 현행화 추진 - 인수년도 오류 수정, 시스템 등록누락 데이터 확인 및 인계방안 마련 ○ 대통령기록정보시스템 고도화 ISP에 지정기록물 관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반영 - 인계그룹설정, 인계 후 데이터 삭제기능, 제16대~제18대 암호호화 연계 필요성 등
4/4 분기	○ 지정해제된 전자기록물 인계처리 및 일반/비밀 PAMS 반영(39,910건, 11.21) ○ 지정해제 기록물 관리 프로세스 보완사항 정리 및 개선방안 마련·보고(11.21) - 개선사항은 차세대 PAMS개발 제안요청서에 반영(지정PAMS는 '21년 개발예정)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Ⅱ	등록·재분류·지정 등						
혁신과제	2-3	대통령기록물 평가·폐기 추진						
과제성격	법령개정, 업무개선, 기준마련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기록관리과							

<추진계획>

○ 관계 법령개정, 운영규정·기준 마련 및 평가·폐기 추진(~20.12월)

- 시행령 개정안 마련(~'19.3월), 운영규정 마련(~'19.6월)

- 대통령기록물 평가·폐기 기준 마련(~'19.12월)

- 평가·폐기 계획 마련 및 추진(~'20.12월)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1	2	3	4	1	2	3	4
평가대상 조사								
'19년 기록물 평가폐기 계획수립								
자문회의 운영규정 제정 및 평가회의 구성								
'19년 폐기 대상 선정 및 검토회의								
한시기록물 분석 및 평가 폐기 기준 마련, 집행								
대통령기록물 평가·폐기 계획 수립								
평가 폐기대상 선정 및 폐기 추진								

<'19년도 추진실적>

1/4 분기	○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시행령 제7조제1항 개정 및 신설 : 평가 및 폐기 절차 등 개선 * 경과 : 개정과제 수요조사(~1.14.) → 1차 검토회의(3.6.) → 2차 검토회의(4.9.)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보존대상 선별 검토(제2차 내부토론회*) * 일시/장소/참석 : '19.3.19. 14:00 ~ 16:00, 중회의실, 대통령기록관장의 26명(* 발표: 기록관리과장)
2/4 분기	○ 한시기록물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내부 검토회의(4.17.) ○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취합본 완성 및 의견수렴(~4.29.) ○ 대통령기록관 기록관리 자문회의 운영규정 보고(5.2.) 및 구성(5.20.) ○ 19년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및 간행물 평가·폐기 계획 보고(6.20.) ○ 대통령기록관리 자문회의 개최(6.21.) : (안전)데이터세트 및 간행물 폐기
3/4 분기	○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 심의(7.3.) : (안전)데이터세트 및 간행물 폐기 ○ 폐기 결정 대상 기록물 후속조치 계획보고(7.11.) 및 고시(7.15.~7.26.) ○ 폐기 결정 대상 간행물 10,795권 폐기 집행(8.27.) 및 결과보고(9.3.)
4/4 분기	○ '19년 보존기간 만료 한시기록물(4,612책) 분석 추진(9월~10월) * 향후 대통령기록물 분류 및 평가제도 정비와 연계하여 추진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Ⅱ	등록·재분류·지정 등						
혁신과제	2-4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체계 개선						
과제성격	법령개정, 업무개선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기록관리과							

<추진계획>

○ 공개재분류 자체수행, 세부기준 정비 및 절차간소화로 공개 강화(~'20.12월)

- 공무원 인력 확보 및 자체추진 여건 마련(~'19.4월)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의견 수렴 및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19.7~12월)

- 공개재분류 세부기준 정비('19.9~11월)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1	2	3	4	1	2	3	4
공개재분류 자체전환								
세부기준정비								
작업절차 간소화								
공개재분류공개강화								

<추진실적>

1/4 분기	○ '19년도 공개재분류 추진계획('19.1.29., 내부결재) ○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개선 방안 보고('19.3.6., 메모보고/ '19.3.22., 전문위원회 보고)
2/4 분기	○ 공무원인력확보, 교육 및 업무 투입('19. 5월) ○ 공개재분류 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서식 개선('19. 7월)
3/4 분기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계획 수립('19.8.20.) ○ 공개재분류 업무 강화 및 대내외 공개를 위한 정책문 작성
4/4 분기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80개⇒62개), 전문위원회 보고('19.12.20.) ○ 대통령기록관 공개재분류 정책문 자문회의 개최 및 혁신과제 발표('19.10.) ○ 공개재분류 실무회의 2회 개최('19.11.15/12.18.)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Ⅱ	등록·재분류·지정 등		
혁신과제	2-5	수집기록물(구술·기증 등) 관리 체계 개선		
과제성격	법령개정, 업무개선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기록관리과			

<추진계획>

○ 구술 아카이브 체계 구축 및 기증기록물 관리체계 개선(~'20.12월)

- 대통령기록관 구술 아카이브 구축 용역 및 방안 마련(~'19.10월)

- 공개기준 마련 및 업무절차 개선(~'19.12월)

- 대통령기록관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20.12월, PAMS 고도화사업과 연계)

- 비공개 기증기록물 단계적 재분류('20년 이후) 및 디지털방식 구술채록('21년 이후)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1	2	3	4	1	2	3	4
아카이브 구축 방안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기증기록 공개재분류								
구술기록 데이터 전환								

<추진실적>

1/4 분기	○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보고('19.1.26., 메모보고) ○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사업계획('19.2.27., 내부결재) ○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조달의뢰('19.3.04., 발송)
2/4 분기	○ 기술협상 결과 통보 및 계약요청('19.4.22., 발송) ○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사업자선정 결과 보고('19.4.23., 메모보고) ○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계약체결(4.29.) 통보('19.5.2., 접수) ○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5.23.) 및 결과보고(5.24.메모보고)
3/4 분기	○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연구 추진현황 및 워크숍 계획보고(7.22., 메모보고) ○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수립 워크숍 개최(8.8.) 및 결과보고(8.14.메모보고) ○ 구술기록 분류체계 개선 관련 자문회의 안건 보고(9.18., 메모보고)
4/4 분기	○ 구술기록 분류체계 개선 관련 자문회의 개최(10.4.) ※ 디지털중심의 구술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정립, 분류체계 설계, 시스템 개선방안 등 ○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연구사업 완료보고(11.13.) 및 개최결과 보고(11.22.)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Ⅲ	보존·복원·시스템
혁신과제	3-1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체계 개선
세부과제	3-1-1	전자매체 관리원칙 마련 및 이관·보존프로세스 재정립
과제성격	업무개선, 지침마련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보존복원과	

<추진계획>

- 전자매체 관리원칙 마련 및 이관·보존프로세스 재정립
 - 표준·비표준(비전자 등록) 전자기록물 이관용 전자매체 이관·보존처리절차 관련 지침 초안 마련('19.10.) 및 유관부서 의견수렴 및 확정('19.12.)
 -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도구(S/W) 고도화 사업 지원 및 이관도구 기능 고도화 관련 TF 참여, 결과보고 및 시연('19.12.)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9			
	1	2	3	4
전자매체 이관·보존 절차관련 지침 마련				
전자기록물 절차 개선				
이관도구 고도화				

<추진실적>

1/4분기	○ 16대 대통령기록물 행정데이터세트(인계인수시스템 등) 분석(~3월/등록 현황, 일치여부 등) ○ 전자기록 이관도구 고도화 R&D 과제 추진(복원관리과 협업) - 디지털포렌식 기반 현장용 이관도구 고도화·대용량 전자기록 이관·분석 시스템 개발 등
2/4분기	○ 대통령기록물 행정데이터세트 분석 결과 보고('19.5.9., 메모보고) - 첨부파일 중복(5,335중 13,781파일)·해시값 불일치·분류오류 확인 ○ 비전자 대통령기록물 전자매체 현황점검 결과 보고('19.6.20., 메모보고) - 비전자로 등록된 전자매체(시청각 제외) 451점(443철) 실물 확인 ○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매체 상태점검 결과 보고('19.6.25., 내부결재) - 16·17대 이관매체(전자문서, 행정데이터세트) 120점 실물현황·열람가능여부 등 확인
3/4분기	○ 대통령 전자기록물 손상유무 시범점검 결과 보고('19.7.12., 내부결재) - 첨부파일 중복(5,335중 13,781파일)·해시값 불일치·분류오류 확인 ○ 디지털매체·포렌식실운영 기본계획(안) 보고('19.9.3., 내부결재)
4/4분기	○ 비전자 대통령기록물 전자매체 상태점검 결과 보고('19.10.16., 내부결재) - 현황점검 완료된 전자매체 451점 열람가능여부, 철·건 정보 일치여부 등 확인 * 경과 : 1차 점검(8.1.~9.6.) → 2차 검토(~9.18./오류분석) → 결과 보고(10.16.) ○ 디지털포렌식실 업무처리 유형별 공간 개선 완료('19.12.24.) - 기본계획(안) 반영된 업무처리 유형별 디지털포렌식실 업무 공간 개선 * 경과 : 계획보고(12.3.) → 공간 개선(12.4.~12.23.) → 결과 보고(12.24.) ○ 고도화 완료된 전자기록 이관도구 배포 및 사용자 교육('19.12.19.) - 이관도구 고도화 기능 설명 및 실제 이관기록물 활용 사용자 교육 * 대통령경호처 전자기록물 이관에 시범적용 예정('20.1.中) ○ 대통령기록물 전자매체 보존관리체계 개선 방안 결과 보고('19.12.24., 내부결재) - 이관용 전자매체 관리 지양 및 수록기록물(전자파일) 중심의 기록관리체계 확립 * 업무처리별 표준운영절차(SOP) 지침 마련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Ⅲ	보존·복원·시스템
혁신과제	3-1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체계 개선
세부과제	3-1-2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공간 정비 및 효율화
과제성격	업무개선, 매뉴얼 마련	추진완료시기 2020. 6.
담당부서	보존복원과	

<추진계획>

-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공간 정비 및 효율화(~'20.6.)
 - 기록유형별 서고배치 현황분석(~'19.10.) 및 매뉴얼 마련(~'19.12.)
 - 원본기록물 보존 원칙(복본 간행물 분리) 확립 및 분리 재배치(~'19.12.)
 - 보존서고 공간 수요량 예측에 따른 공간활용 장기계획 수립('20.1.~6.)
- * 행정박물·선물류 유형별 현황분석을 통한 보존서고 공간 효율화 및 19대 이관 대비 공간 정비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9				2020			
	1	2	3	4	1	2	3	4
기록유형별 서고배치 매뉴얼 마련								
원본기록물의 보존 원칙 확립								
보존서고 장기계획 수립								

<추진실적>

1/4 분기	○ 문서류 정수점검 추진 계획 수립('19.1.31., 내부결재) - 원본 외 관리물품(생산기관 황화일 등) 분리(151,636철 중 17,000장) ○ 보존서고 공간정비 및 효율화추진 : 대형 액자류 해포 및 재배치(~3월)
2/4 분기	○ 보존서고 내 복본 간행물 및 관리물품 분리·폐기 검토('19.4.11., 관내회의) ○ 행정박물·선물(훼손방지 포함) 상자제작 및 격납 : 343상자 ○ 간행물·시청각 및 박물류 기록물 정수점검 계획 수립('19.6.12., 내부결재)
3/4 분기	○ 시청각기록물 보관상자 개선 추진계획 수립('19.7.11., 내부결재) - 매체별 보존상자 제작 및 보존상태 개선(자기·전자매체류 9,382철/1,245상자) ○ 간행물 납본 외 복본기록물 현황파악 및 분리(정수점검 병행)
4/4 분기	○ 시청각기록물 보존상자 개선 완료 - 시청각매체(자기·전자류) 보존상자 개선(9,382철/1,245상자) 완료(메모, '19.10.1.) ○ 원본기록물의 보존 원칙 확립 - 대통령기록물 관리물품(노후황화일 등) 파기 추진 계획수립('19.11.12.) 및 완료(총 2,696박스, 32,516철/'19.11.21.) * 간행물 3권이상 현황 파악(1,977철, 3,259권) 및 추진방안 검토·협의(관리과 '19.11.13.) ○ 기록유형별 서고배치 매뉴얼 마련 및 보존서고 공간정비 - 행정박물·선물류에 대한 유형·규격정보 전수 조사 실시(8,305철) - 유형별 배치 방안 기준 등 매뉴얼 보고('20년 1분기/예정)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Ⅲ	보존·복원·시스템
혁신과제	3-1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체계 개선
세부과제	3-1-3	대통령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PAMS) 데이터 품질 개선
과제성격	업무개선, 표준마련	추진완료시기 2020. 6.
담당부서	보존복원과	

<추진계획>

- 대통령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PAMS) 데이터 품질 개선(~'20.12.)
 - 데이터 검증기준에 따른 데이터 추출 및 분석('19.3.)
 - 오류, 누락 데이터 정비 추진(~'19.12.)
 - 데이터 연계 기술규격 표준(안) 마련('20.1~6.)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9				2020			
	1	2	3	4	1	2	3	4
데이터 추출 및 분석								
데이터 정비								
연계 기술규격 마련								

<추진실적>

1/4 분기	○ 데이터 검증 기준에 따른 데이터 추출 및 분석(2월~3월) ○ PAMS 데이터 오류 현황분석 수립 및 오류 유형(89개 유형/약 2천3백만개) 분류 ○ 오류유형 분석에 따른 처리방안 검토협의(기록관리과) - 단기처리 가능대상*(전자기록여부 코드, 날짜형식 오류 등, '19.3.27. 방침협의) * 자체정비 처리가능한 대상량은 오류데이터 전체 약2천3백만개 중 33%인 7,795,812개 - 장기처리 가능대상*(비공개호수 오류, 첨부개수 오류, 생산부서명 누락 등) *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오류 및 누락 데이터(66%, 약1천5백만개)는 협의(기록관리) 후 추진예정
2/4 분기	○ PAMS 데이터 정비 추진계획('19.4.16., 메모보고/ '19.4.18., 내부결재) ○ PAMS 오류 데이터 중 날짜형식 오류 등 8개 유형 1차 정비 추진(5.7.~) - PAMS 데이터 정비 추진 현황 보고('19.6.12., 메모보고) * 처리현황 843,715개/7,795,812개, 처리누계10.8% / 건 전자기록여부 등 4개유형 정비 ○ 데이터 정비 관련 이력관리 기능개선 - 변경이력보기 기능추가('19.5.17. 완료) - 감사증적 기능 신설에 따른 검토(항목, 데이터 구조 등) ○ PAMS 데이터베이스 진단(구조, 성능) 실시('19.5.21.~6.8.)
3/4 분기	○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정·시행('19.9.6.) ○ 오류데이터 정비 관련 감사증적 기능 마련 - 감사증적 기능 마련 관련 PAMS 화면 구현 1차* 완료('19.9.25.), 2차** 구현('19.10.30.) * 1차 : 인수, 품질검사, 서고배치 등 기록철 관련 9개 항목, 기록건 관련 14개 항목 ** 2차 : 상태검사, 탈산, 디지털화 등 6개 항목 ○ PAMS 오류 데이터 정비 완료('19.9.30.) * 정비현황 7,795,306개/7,795,812개(99.9%) 완료(생산일자 오류 471개, 기록유형구분 오류 27개 미처리)
4/4 분기	○ 오류데이터 정비 관련 PAMS 내 감사증적 기능 구현 완료('19.12.13.)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V	서비스(콘텐츠, 전시 등) 활용			
혁신과제	4-1	대통령기록정보 서비스 개선			
세부과제	4-1-1	목록·원문서비스 강화 및 포털 정비			
과제성격	법령개정	규정마련	업무개선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기록서비스과				

<추진계획>

○ 이용자 중심의 대통령기록포털 서비스 강화(~'19.12월)

○ 소장기록물 목록 서비스 프로세스 구축 및 비실명화(~'19.12월)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1	2	3	4	1	2	3	4
목록 및 원문서비스 강화								
포털 정비								

<추진실적>

1/4 분기	○ 2019년 대통령기록포털 및 콘텐츠 개선계획 수립(3.22) - 주요 국가정책 기록물 조사, 기존 콘텐츠 보완, 검색 편의 제고 등 포털 기능 강화 * 내부 검토회의(1월 1회, 4월 4회), 전문가 자문(2월), 사례조사(2월) ○ 대통령기록 목록 비실명화 및 포털서비스 추진계획 수립(1월) 및 추진 - 기 작업분(13~16년) 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비실명화 및 포털 반영 ○ 웹로그 분석도구를 활용한 대통령기록포털 이용자 현황조사
2/4 분기	○ 2019년 역대 대통령 국가정책 기록물 조사사업 추진계획 수립(4.10) 및 추진 ○ 2019년 대통령기록포털 서비스 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4.23) 및 추진 * 관내 오류 및 개선사항 제안 이벤트(4월), 검색기능 고도화 자문회의(4.29) ○ 대통령기록 목록 비실명화 및 포털서비스 추진 - 10대~14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비실명화 및 포털 반영 ○ 「국가재건최고회의 컬렉션」(자체 콘텐츠) 구축(5.2)
3/4 분기	○ 역대 대통령 국가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 착수(7.17) ○ 대통령기록포털 서비스 강화사업 착수(8.12) 및 감리계획 수립(9.10) ○ 대통령기록 목록 비실명화 및 포털 서비스 추진 - 15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비실명화 포털 반영 ○ 하반기 자체 콘텐츠(동백림 사건) 구축 계획 수립(9.5)
4/4 분기	○ 역대대통령 국가정책 기록물 조사사업 완료(11.16) 및 포털 콘텐츠 구축(12.24) ○ 해외 기록관리기관(NARA, TNA, 케네디기록관 등 5개) 포털 벤치마킹 결과보고(11.22) ○ 대통령기록포털 고도화 완료 및 오픈(12.24) * 메뉴 통합, 검색기능 개선, 콘텐츠 보완(기증, 대통령 연설문, 편지, 기획전시 등) ○ 대통령기록 목록 비실명화 및 포털 서비스 추진 * 16대~18대 대통령기록, 시청각, 간행물, 행정박물 비실명화 처리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V	서비스(콘텐츠, 전시 등) 활용			
혁신과제	4-1	대통령기록정보 서비스 개선			
세부과제	4-1-2	전시기본계획 마련 및 교육·체험 강화			
과제성격	법령개정	규정마련	업무개선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기록서비스과				

<추진계획>

○ 전시기본계획 마련 및 교육·체험 강화(~'19.12월)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1	2	3	4	1	2	3	4
전시기본계획 마련								
대통령기록 교육·체험 강화								

<추진실적>

1/4 분기	○ 대통령기록전시관 개편 내·외부 자문회의(3회) ○ 대통령기록물 자원봉사자 8명 위촉(2.22) ○ 대통령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점 이전(2층→1층, 3월) ○ 2019년 견학·체험프로그램 운영 기본계획 수립(2.13) * 유관기관 간담회(1월)
2/4 분기	○ 대통령기록전시관 개편 기본계획 수립(4.26) ○ 2019년 대통령기록전시관 전시연출 용역사업 추진계획 수립(5.8) 및 추진 ○ 2019년 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계획 수립(6.21) 및 추진 ○ 「대통령 의전 이야기」 프로그램 계획 개발(4.25) ○ 「2019년 대통령기록관 견학·체험 수기 공모전」 계획 수립(6.12)
3/4 분기	○ 대통령기록전시관 개편 전시대상 기록물 선정 추진 * 서화류 해제사업(전북대, 8.9~), 문서류 내부회의(9.10), 가구류 전문가 간담회(8.22) 등 ○ 2019년 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기록물 선정(회화류 40점, 9.24) * 전문가 자문회의(8.8), 회화류 해제사업(한국미술연구소, 8.21~) 등 ○ 대통령기록전시관 견학·체험 프로그램 운영(83회 1,796명) * 초등 기록문화 41회 834명, 중고등 진로탐색 23회 528명, 초청프로그램 19회 435명
4/4 분기	○ 대통령기록전시관 개편 및 보완사업 완료(12.20) ○ 2019년 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개막(대통령의 미술품, 12.24.) ○ 대통령기록전시관 견학·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38회 852명) * 초등 기록문화 23회 517명, 중고등 진로탐색 14회 322명, 초청프로그램 1회 13명 ○ 대통령기록관 견학·체험 수기 공모 접수(~11.20) 및 시상(12.19) * 최우수 3, 우수 9, 장려15명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V	서비스(콘텐츠, 전시 등) 활용							
혁신과제	4-1	대통령기록정보 서비스 개선							
세부과제	4-1-3	대통령기록연구 지원 확대							
과제성격	법령개정 규정마련 업무개선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기록서비스과								
<추진계획> ○ 연구지원센터 운영규정(~'19.12월)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1	2	3	4	1	2	3	4
연구지원 확대									
<추진실적>									
1/4 분기	○ 대통령기록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등 연구활동 조사(1~2월) - (국내)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14개 기관 - (외국) 클린턴재단, 버락 오바마 도서관 등 10개 기관								
2/4 분기	○ 국내 대통령 관련 연구자 현황 조사(4월) ○ 연구자 간담회 개최(정일준 교수외 4명, 5.23) ○ 2019년 대통령기록물 활용 연구지원 방안 수립(6.13) - 공개결정 기록물 DB 구축·제공, 학생 모의학술경연대회 개최, 연구활동 지원 창구 운영 등								
3/4 분기	○ 대통령기록물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추진계획 수립(7.1) - 개인연구자 상담신청 접수 및 처리 등 연구지원 승인 절차 마련 - 공개기록물 열람 및 시설이용 편의 제공 등 학술연구 지원 ○ 대통령기록물 활용을 위한 교사간담회 개최(충청권 소재 고교교사 5명, 7.31) -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학생 모의학술토론대회' 관련 의견수렴 ○ 대통령기록관 공개결정 기록물 DB(엑셀목록 + PDF 사본) 구축 - 공개결정 대통령기록물 분류·정리 및 내용 검토(약 100건)								
4/4 분기	○ 대통령기록 전문가 강연회(대통령기록관 소장 서화에 담긴 이야기) 개최(10.31) ○ 학술연구지원 서비스(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11.13) ○ 대통령기록관 소장 미술품(회화류) 해제사업 결과보고(11.18) ○ 대통령기록관 소장 대통령 선물(장신구) 감정평가 결과보고(12.19) ○ 대통령기록관 시민강좌(대통령의 미술품) 개최(12.24)								

총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No.	생산일자	자 료 명	페이지
1	2018. 04. 30.	혁신과제 검토의견	573
2	2018. 08. 27.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혁신과제 발굴	592
3	2019. 04. 02.	20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세부이행계획	616

주관

기록제도과

세부과제
번호[1-1]

정치중립화, 기록전문성에 기반한 지정 재분류· 해제 권한 법제화 및 업무절차 개발

□ 과제개요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정기록물의 오분류, 과다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해제·재분류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효율성 도모

□ 추진방안

<제도 개선>

- 지정기록물의 오분류, 과다지정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지정대상 각 호별 세부기준 마련 및 지정기록 선정과정의 대국민 공개
- 지정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부직원 접근절차 추가
 - 지정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지정기록물의 목록작업(추가등록) 등
- 지정기록물의 열람절차 명확화 및 조기해제 권한 부여 방안 마련
 - 지정기록물의 사본 관리절차 및 지정권자에 의한 조기해제 방안

<업무 개선>

-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분석을 통한 지정 세부유형 보완
 - 각 호별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 과지정 사례 분석
-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절차 등에 대한 생산기관 교육 정례화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처리과 담당자 교육 시, 지정기록물 관리절차 및 지정요건 등 교육 실시

〈불수용 과제〉

- 지정제도 악용 및 지정기록물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형사처벌의 경우 죄의 구성요건과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보호기간 지정은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지정대상 각 호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곤란
 - 국가권력/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 관련 민사소송 시 판사가 지정기록물 열람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형사재판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며, 형사소송 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 제2호에 의해 열람 가능
 - 민사소송 시 민사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어 ‘국회 2/3 의결’ 및 ‘고등법원 영장발부’의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 ※ 지정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경우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

□ 협조부서 및 관련기관

- (관련기관) 대통령비서실

□ 추진일정

구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단기	~'18.9.	지정기록물의 관리 제도개선(안) 마련	
	~'18.12.	해제된 지정기록물의 목록분석을 통한 지정 세부기준(안) 마련	
중기	'19년	지정기록물 지정요건(제17조 제1항 각 호) 명확화 여부 검토	
장기	매년	지정기록물의 관리절차 등 교육	

주관

기록제도과

세부과제
번호[1-2]**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지정기록 지정·관리·
해제·열람 권한 및 절차**☐ **과제개요**

- 대통령 유고·탄핵 시 사회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기록 지정, 재분류 권한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추진방안**

- 대통령 궐위 시 보호기간 지정권한 부여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관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방안 등

☐ **협조부서 및 관련기관**

- (관련기관) 대통령비서실

☐ **추진일정**

구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단기	~'18.9.	지정기록물의 관리 제도개선(안) 마련	

☐ **기타의견**

- 장기적으로 지정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의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적인 지위 부여 검토 필요
- 헌법 제71조에서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순으로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장이 해당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검토

주관

기록제도과

세부과제
번호[1-3]**대통령과 관련한 그룹의 소셜미디어 기록
지정보호 여부 및 제도화 여부 검토**☐ 과제개요

- 대통령이 보좌기관 등 제한된 인원들이 참여하는 소셜네트워크, 인스턴트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한 사항 중 지정대상을 선별·지정할 것인지 검토

☐ 검토내용 : 불수용

- 현행 법령상 소셜네트워크 및 메신저 등은 기록물의 범위에 불포함
 - SNS 및 메신저 등을 기록물의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 우선 검토 필요
-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업무관리시스템의 지시사항카드 등으로 작성되어 기록물로 보존하고 있으며
 - 기록물로 생산되기 전의 대화내용 등까지 기록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

세부과제
번호(2-1)

기록생산 및 관리절차 개선

□ 과제개요

- 대통령의 민주적 통치를 증명하고, 디지털 기반의 업무환경에 부합하며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보호를 보장하는 기록생산 및 관리절차 마련

□ 추진방안

- 다양한 업무처리 방식을 수용하는 디지털 기반 생산환경의 구축
 - 다양하고 새로운 기록유형의 효율적 보존·활용을 위한 모델 제시를 위해 「디지털 기반 대통령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용역」 추진
 - ⇒ 생산환경 자원 분석, 디지털 아카이브 우수사례 조사, 대통령기록 생산 및 관리절차 개선안 마련(~'18.9.)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선을 통한 이관방식 다양화 근거 마련
 - 디지털 기록 생산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양한 대통령기록의 특성을 수용·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방식을 다양화
 -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1조(이관)에 필요 시 보존포맷 등 이관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 협조부서 및 관련기관

- 대통령비서실 기록관,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 추진일정

구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중기	'18년 말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생산 및 관리절차 개선안 마련	
장기	~'19년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이관방식의 다양화 근거 마련	

주관

기록수집과

세부과제
번호(2-2)

기록평가제도 개선

□ 과제개요

- 현행 『대통령기록법』에는 평가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미비하여 당대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국정기록의 선별·보존이 어려움
- 대통령 국정 활동의 증거와 국민의 대응을 사회적 기록으로 남기는 ‘거시평가론’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선별 방법론 개발 필요

□ 추진방안

- 대통령기록 관리에 적합한 ‘기록관리기준표’ 재설계 추진
 - 생산기관의 업무 기능, 단위과제, 기록유형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주요공약, 핵심 정책 관련 기록이 이관·관리되도록 설계
 - ※ (공공기록물법 개정방향) ① BRM 관리권한 가져오거나, ② 단위과제 사전검토 권한 신설 ③ 특수유형기록(웹기록, 테이터셋, SNS, 이메일 등) 적용 기록관리기준표 별도 개발 검토
- 대통령기록 특성을 반영한 현 보존기간 체계의 유연화
 - 현재 7종으로 되어있는 보존기간(공공기록물법)을 간소화 하여 대통령기록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준 마련
- 특정 주제, 유형,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한 ‘처분동결지침’ 도입
 - 기록폐기중지 제도 도입 후, 처분동결제도로 확대 검토(공공기록물법)
 - ※ (처분동결제도) 처분일정표상의 처분(이관, 폐기)을 중지하고, 향후 생산 기록까지 제어
- 개선된 평가제도를 반영한 『대통령기록법』의 근거 조항 신설·정비 검토

□ 협조부서 및 관련기관

- 업무기능 및 생산 기록 조사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 법령개정 등 : 기록제도과, 수집기획과, 정부혁신조직실(BRM 담당)

□ 추진일정

구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단기	'18년	(기록처분동결지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공공기록물법 검토
중기	'19년	(기록관리기준표 설계 및 보존기간 유연화) · 생산기관의 업무 기능(단위과제) 및 기록유형, 시스템 등 분석·조사→ 기록관리기준표, 보존기간 책정기준 재설계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 협의
장기	매년	· 기록관리기준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정·반영	- 상시 운용 지원 체계 필요

주관

기록수집과

세부과제
번호(2-3)

기록이관제도 개선

□ 과제개요

-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에 적합한 기록이관 방식 정립, 책임과 권한, 절차가 명확한 이관제도 확립

□ 추진방안

- 이관주체, 대상기록, 포맷, 암호화 범위 등 제반 이관절차 개선
 - 이관주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에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개선
 - 이관대상 기록물의 사전 확정, 생산현황 관리 및 누락 없는 이관
 - 전자기록 이관 포맷을 각 시스템 운영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 현행 비밀, 지정기록에 대한 암호화 절차를 비밀기록으로 한정 검토
- 이관 연장 대상기관 확대 및 이관 연장 기록에 대한 관리방안 개선
 - 현행 대통령 경호 관련기록물 외, 상설 자문기관도 업무 필요시 이관 연장이 가능토록 개선
 - 이관 연장 한도 설정(2회 미만), 생산기관 교육·컨설팅 시 이관연장 기록물의 관리상태 확인 등 주기적인 점검 실시

□ 협조부서 및 관련기관

- 대통령비서실 기록관,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 추진일정

구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중기	~'18년 말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이관관련 제도 개선	

주관

기록수집과

세부과제
번호[2-4]**생산기관-대통령비서실 기록관-대통령기록관
업무체계 재정립**☐ **과제개요**

- 대통령의 민주적 통치를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 기록관 정립, 대통령기록 업무체계 순환 사이클의 재정립

☐ **추진방안**

- 기록관을 운영하지 못하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리 개선
 - 대통령비서실이 아닌 대통령기록관이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
 -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조직된 상설 대통령자문기관은 공공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 분리
- ⇒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에 부관된 기록관 미설치 자문기관에 대한 기록 관리 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대통령기록관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리 지원체제 개선
 - 대통령기록관 직제 개정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상시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대통령 임기 중 생산기관 기록관리 강화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리 상시·직접 기록관리 체계 구축

☐ **협조부서 및 관련기관**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 **추진일정**

구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중기	~'18년 말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이관관련 제도 개선	

주관

기록수집과

세부과제
번호[2-5]**대통령 유고 시 생산, 유지, 이관 등의 절차 규정****□ 과제개요**

- 대통령 서거, 탄핵 등 비상상황에서 증거 인멸을 위한 기록폐기, 기록유출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대통령기록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대통령기록의 안전한 관리 도모

□ 추진방안

- 권위시 대통령기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긴급관리제도 마련
 - 권위 상황 발생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긴급관리 조치를 통해 발생 시점에서 보유 중인 일체 기록에 대한 재분류, 폐기 등 일체의 기록원형 훼손 행위 금지
 - 긴급조치와 함께 조사, 감독 등 실효적 조치 근거 마련
- 권위시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이관을 위한 절차 마련
 - 대통령 권위 시 권위로 인한 선거로 후임자가 60일 이내에 결정되므로 대통령 기록물 이관준비 기간이 매우 짧아 정상적인 이관이 어려움
 - 대통령 권위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를 권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개시 후 30일 전까지로 하여 이관 준비 기간 확보

□ 협조부서 및 관련기관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 추진일정

구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중기	~'18년 말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이관관련 제도 개선	

주관

보존복원과

세부과제
번호(3-1)**개별 대통령기록관 · 통합대통령기록관 공존을
임두에 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전략****□ 과제개요**

-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은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개발 후 10년 경과, 개별프레임워크 등으로 새로운 요구사항 충족 어려움
- 다양한 디지털 기록유형(웹소셜, 웹기록 등) 이관 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 요구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필요

□ 추진방안

- 「디지털 기반 대통령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 용역 추진('18년)
 - 우수 사례조사, 현 시스템 진단, 모델 제시 및 ISP 사전 연구
- 「대통령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용역 추진('19년)
 - 다양한 전자기록 수용, 보존-서비스간 기록정보의 효율적 연계가 가능한 대통령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설계
- 「대통령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추진('20~'21년)

□ 협조부서 및 관련기관

- (대통령비서실) BH 기록관리시스템 ISP 사업과 연계 추진
- (국가기록원 전자기록관리과) 차세대 ISP 사업에서 제시하는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 및 다양한 기록유형 보존포맷 정책 수용
- (서울시 서울기록원) 오픈소스 마이크로서비스체계 구축 선행사례 공유

□ 추진일정

구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즉시	'18. 4. ~ 9.	디지털 기반 모델 재설계 연구 용역	
단기	'19. 6. ~ 11.	대통령 디지털 아카이브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중기	'20. 6. ~ '21. 6.	대통령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장기	'21. 7. ~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서비스 대응	

□ 기타의견

- 대통령기록관 5개 부서 관련 사업이므로 주요회의(착수·중간·결과보고, 월간회의 및 자문회의 등) 참석 및 적극적 의견 개진 요청
- 과제3(디지털 기반의 대통령기록관 모델 정립)의 세부과제 추가 건의
 - 정책연구(기록제도과)와 시스템 개선 연구(보존복원과) 구분 필요

주관

기획지원과

세부과제
번호(4-1)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조직화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 지향

□ 과제개요

- 대통령기록관은 그간 낮은 기관 위상과 권한 미비로 대통령기록의 유출과 정치적 악용 등에 대처가 미흡하고, 중립적인 업무 추진 불가
- 독립 조직으로의 개편을 통해 특정 부처로부터의 업무 감독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직구조 마련 필요

□ 추진방안

- 대통령기록관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 조직으로 개편
 - 다양한 사안(조직 형태, 개별기록관) 검토 및 전문가(기록·조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중립성 및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 추진
 - * (예시) 합의제 행정기관(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안부 소속의 외청(경찰청) 또는 책임운영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 ⇒ 조직 형태 및 기능 등 검토(~'18.6.), 관련 전문가(기록, 조직) 의견수렴 추진(~'18.8.), 조직 관련 유관기관(행안부 조직실 등) 협의 추진(~'18.12.)
- 대통령기록관리 업무 관할 체계 정비를 통한 중립성·책임성 강화
 - 실제 수행되는 집행업무는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조정* 필요
 - * 기록관리 정책결정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집행적 기록관리 업무(수집, 연구활동지원, 위원회심의 등)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수행
 - ⇒ 대통령기록물 및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 정비 추진(~'18.12.)

□ 협조부서 및 관련기관

- 독립조직 개편 협의 : 창조행정조직실, 사회조직과
- 공공 및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 기록제도과

□ 추진일정

구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중기	'18년 말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업무 조정	
장기	~'19년 말	조직부서와 협의를 통해 대통령기록관 독립 추진	

주관

기록제도과

세부과제
번호[4-2]**대통령기록관의 고유 전문업무를 강화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개편**☐ **과제개요**

-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통령기록관 의사결정 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에 기반한 조직으로 개편, 기관 본연의 고유업무 강화 및 이용 증진에 기여
 - 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개별 위원회들로 재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 지원
- * 평가·선별, 공개, 디지털아카이브 등 상이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위원회 구성 필요

☐ **추진방안**

- (법령개정) 전문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산하 전문·특별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법령 제5조 ‘전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
 - ‘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위원회 운영)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선별전문위원회, 공개관리전문위원회, 디지털아카이브 전문위원회 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주기적 운영

☐ **협조부서 및 관련기관 : 없음**☐ **추진일정**

구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즉시	~'18.12.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상강화 및 산하 전문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단기	~'19.12.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관

기록제도과

세부과제
번호[4-3]

대통령기록관장 인사 및 대통령기록관리 전문 자문위원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 과제개요

- 대통령기록관장과 대통령기록관리 자문위원을 선정하는 전문자격과 절차를 공정하게 확립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중립적, 전문적 운영 보장
 - * 대통령기록관장은 인사추천위 등을 경유하여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필요
- 자문위원의 자격과 평가 기준을 확립하여 전문 업무분야별 자문위원회의 기능·역할 강화

□ 추진방안

- (대통령기록관장) 대통령기록관장 임명기준 및 절차 명확화
 -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행정을 위하여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으로 하고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 임용 가능하도록 개방형 직위로 임명
 - * 대통령기록관 조직을 독립시켜 정치적 중립성 우선 확보 필요
- (자문위원) 자문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명시, 구체화
 - 자문위원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전문성·중립성 논란 방지
 - * 『대통령기록물법』 제5조 제3항의 전문위원회 위원구성 자격을 시행령에 보다 구체화

□ 협조부서 및 관련기관

- 대통령기록관 기획지원과

□ 추진일정

구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단기	~'19.12.	자문위원 자격 및 선정기준 논의 및 시행령 반영	
중장기	'19.12.~	대통령기록관장의 임명절차 및 기준 논의, 법령 반영 여부 결정	

주관

기록제도과

세부과제
번호(5-1)**전자적 업무환경에 부합하고 대통령 국정의 설명
책임성을 담보하는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 과제개요**

- 대통령기록의 법률적 정의가 고정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상급자의 결재를 받거나 시스템에 등록된 기록만을 대통령기록으로 인정*(‘15.2.)
-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15.2월)
-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행정업무환경에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산·관리되는 다양한 포맷의 대통령기록정보를 반영하지 못함
- 중요한 정보·기록을 대통령기록으로 획득·관리하지 못하는 상태 초래

□ 추진방안

- 전자적 업무환경에 부합하고 대통령 국정운영의 설명책임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를 재정립
- 직무를 설명하는 모든 ‘기록’이 ‘대통령기록’으로 관리되도록 현행 ‘기록물’ 및 ‘대통령기록물’의 개념과 범주 재정의
- 특히, 이메일·소셜미디어 기록을 선별적으로 획득할 수 있음을 명시
- 대통령·비서실 주요직위자(비서관급) 이메일로 한정, 공식 소셜미디어 수집
- ※ 호주는 업무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록으로 포함(호주국가표준 AS 4390-1966)하였고, 미국연방정부는 이메일과 SNS기록을 연방기록으로 규정한다고 기관지침에 명시
- (검토의견) 『공공기록물법』의 기록물 정의와 관련되어 있어, 그 개정 내용(법은 포괄적으로 규정, 유형은 시행령에서 제시 예정)을 위임 받아 개정 추진

□ 협조부서 및 관련기관

- 기록수집과, 정책기획과(제도팀)

□ 추진일정

구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즉시	‘18년	대통령기록법 개정(안) 추진	공공기록물법 협의 필요
단기	‘18년 하반기 ~ ‘19년	대통령기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주관

기록제도과

세부과제
번호(5-2)**대통령기록의 성립요건을 규정하여 대통령기록
관리의 대상을 확정****□ 과제개요**

- 남북대화록 논란(초본·수정본·결재본 등) 등 생산(획득) 시점 논란 발생
- 다양한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정보를 엄밀하게 평가하여 대통령기록으로 식별하지 않고, 비기록으로 처리

□ 추진방안

- 대통령기록법에 디지털 정보의 생산 완료 선언 시점 및 송수신 시점을 대통령기록의 성립 요건으로 하는 법 조항 신설
- 기록으로 생산(획득)되는 시점을 법적으로 명백하게 제시하여 대통령기록의 관리대상을 식별하고 확정시킬 수 있게 함
 - ① 생산자의 작성 완료 선언 시점, ② 디지털 기록이 이메일시스템과 기록시스템을 포함한 정보매체 전달수단에 송수신되는 시점으로 명시
 - (검토의견) 대통령기록물의 생산시점에 대한 과제로, 신중 검토 필요
- 업무활동의 증거 또는 역사적 보존가치를 갖는 정보일 경우 대통령기록으로 식별·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시스템의 하이퍼 정보 링크 역량 강화
 - (검토의견)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범위 등에 관한 과제로, 신중 검토 필요
- 생산기관에서 '가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에 대해 대통령기록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규정하도록 허용
 - (검토의견) 현 법령상에도 가치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어 등록·관리할 수 있어 별도 제도개선 불필요
- 업무담당자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정보 중에서 식별하여 대통령기록으로 획득·보존할 수 있게 업무절차 개발 및 시스템 기능 보완
 - (검토의견) 디지털정보가 다양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협조부서 및 관련기관

- 기록수집과

□ 추진일정

구분	추진 시기	추진 내용	비고
단기	'19년	- 대통령기록의 성립요건 범조항 신설 - 업무절차 개발 및 시스템 기능 보완	

주관

세부과제
번호(6-1)**통합 전산자원 운용기반 대통령기록·정보·
데이터 생산·관리 고도화****□ 과제개요**

- (문제점) 누락되는 기록에 대한 생산 및 관리 필요
 - 미생산, 관리 대상에 미포함, 업무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간 연계 부족 등으로 기록화 부실 문제 발생
 - * 수기 생산, 대면보고 후 미등록, 개인 PC 기록 등
- (해결방안) 정보 객체에 대한 다중 관점을 통합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중요 대통령 기록을 생산 시점부터 중앙 스토리지에 저장
 - 기록·정보·데이터 통합 관리
- (쟁점사항) 대통령 보좌기관별 정보화 환경의 격차
 - 전용망 사용여부, 클라우드 사용가능성, 업무시스템 종류 상이

□ 기타의견

- 주(主)담당자 지정 필요
 - 기록의 생산, 저장, 관리에 관련된 주제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모호
 - 실행방안 수립 및 추진 위해 유관부서 간 협의를 통해 주담당자 지정

주관

세부과제
번호[6-2]

대통령 소셜미디어 기록 아카이브 및 기관 내외 접근보장 체계 설계

□ 과제개요

- **(현황)** 국정 운영에서 소셜미디어 기록의 중요성 부각
 - 현 정부*는 소셜미디어 통한 대국민 소통 강조
 - * 현재 트위터 비롯 5개 유형의 소셜미디어 기록 생산 중
- **(문제점)** 소셜미디어 기록에 대한 수집·관리 체계 미흡
 - 소셜미디어가 민간 운영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공공기록 관리 어려움
 - 생산 확정 기록과 달리 지속 생성되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연속성' 개념 반영한 시스템 요청
 - 소셜미디어 기록 기준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규범 미비
- **(해결방안1)** 퇴임 전-후를 구분하여 상이한 기록 관리 방식 구현
 - 퇴임 전, 소셜미디어 서비스사와의 협력을 통한 아카이빙
 - 퇴임 후,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반의 중앙 저장체제로 기록 이관 및 지속형 아카이빙체계의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해결방안2)** 소셜미디어 기록 기준 개인정보 보호 규범 마련
 - '잊힐 권리' 등 새로운 규범(GDPR)* 준용한 개인정보보호 절차 구현
 -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18.5.25.부터 시행되는 EU의 개인정보보호 통합 규정으로, 삭제 요청 권리(the right to erasure) 등 포함

□ 기타의견

- 주(主)담당자 지정 필요
 - 기록 수집, 관리, 제도에 관련된 주제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모호
 - 실행방안 수립 및 추진 위해 유관부서 간 협의를 통해 주담당자 지정

세부과제
번호(7-1)

대통령기록관리법 처벌조항의 보완

□ 과제개요

- 대통령기록관리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 대통령기록을 유출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의혹 발생
 - 기록접근 추적시스템의 작동 미비, 대통령기록을 공공기록으로 재생산하여 악용했다는 의혹 등
- 법조항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법적용을 하면,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에 해당할 수 있음
 - ‘무단’이라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

□ 추진방안

-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의 보완을 통해 처벌기준 명확화
 - (검토의견) 법 조항을 개선하여 법령에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
- 비공개 대통령기록의 사본 유출에 관한 처벌 조항을 삽입하여 대통령기록의 정치적 악용을 예방
 - (검토의견) 비공개 대통령기록의 사본 유출에 관한 처벌 조항을 삽입하여 대통령기록의 정치적 악용을 예방

□ 협조부서 및 관련기관

- 기록수집과

□ 추진일정

구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즉시	18년	처벌기준 명확화 및 사본유출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제14조 및 제30조)	

주관

기록제도과

세부과제
번호[7-2]

엄밀한 ‘기록 정의’ 와 기록식별을 통한 정치적 악용방지

□ 과제개요

- 현재 대통령기록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록, 청와대에서 생산해서 넘겨준 비전자기록, 대통령상징물·선물 등으로 국한
- 비서진 수첩메모, 시스템 미등록 문서(캐비닛 기록), 대통령 통화 녹음기록, 이메일, 소셜미디어 기록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

□ 추진방안

- 대통령기록 생산·접수기관에서의 전산기록 무단 폐기를 시스템적으로 원천적으로 방지할 방안 검토
 - (검토의견) 현 법령상에도 전산시스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 없음
- 공공기관이 접수한 대통령기록 시행문, 사본 등의 지정보호, 보존 기간 일치 확인 및 그에 준하는 관리, 대통령기록관 이관 제도화
- 대통령기록을 접수한 공공기관·민간의 전자기록 사본의 처분 및 유실, 고아 전자기록의 회수 절차 및 공개 권한 법에 명시
 - (검토의견) 공공기관 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지정기록물 등 다양한 기록물을 확인해야하므로 행정력 낭비 우려 등 신중 검토 필요
- 기록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대통령기록의 임의 폐기·공개 금지, 보존 기간 미책정된 기록의 경우 처분 중지 명령제도 도입
 - (검토의견) 대통령 궐위 시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기록물의 무단 폐기·과기 등을 금지하는 긴급관리제도 도입 검토 중
-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대상 및 등록 여부 검토
 - * 비서진 수첩메모, 대통령 통화녹음 기록, 소셜미디어 기록, 캐비닛 기록 및 공유폴더 기록 등
 - (검토의견) 공공기록물법 제21조에 따라 수첩메모 등 관리대상으로 포함 가능하여 별도 제도개선 불필요

□ 협조부서 및 관련기관

- 기록수집과

□ 추진일정

구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즉시	18년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혁신과제 발굴

생 산, 수집·이 관

1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범위 조정	비고
2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정적 이관 체계 확립	
3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리기준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4	대통령기록물 평가·폐기 제도 개선	
5	대통령기록물 등록 메타데이터 개선 방안	
6	시청각기록물 소장 현황 및 등록방식 개선	
7	간행물 유형에 따른 정리·등록 개선방안	
8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제도 개선	
9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10	구술기록물 수집 현황과 개선방안	

공개재분류

11	공개재분류 업무 효율화	
----	--------------	--

서비스·콘텐츠

12	대통령기록정보 서비스 개선 방안	
13	대통령기록전시관 전시 개편	
14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체제 개선	

1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범위 조정

(기록수집과 지원컨설팅1팀)

□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 자문기관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제2조 제1호 나목)으로 규정하였으나, 자문기관의 범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음
 - ※ 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관리 부서(경제조직과)에서는 정부위원회를 단순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로만 분류함. 집행성격의 경우에도 자문위원회로 분류
 -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대통령 자문기능 수행 여부에 따른 자문기관 분류 필요
- 부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개별법으로 설치되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자문 보다 부처 사무 지원 성격이 강함
 - 또한 위 위원회들은 대통령의 임기와 무관하게 존속하며, 5년 단위 전량 이관에 따른 업무 연속성 문제 지속적 발생함

□ 개선 방향

- 법률에 근거한 부처의 고유 사무 지원 성격이 강한 자문위원회*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 제외하여 공공기록으로 관리하되,
 - 대통령 자문기관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고용노동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국가우주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적자원위원회(교육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자치분권위원회(행정안전부), 저출산·고령화위원회(보건복지부)

□ 쟁점 사항

- 국가기록원 수집 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2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정적 이관 체계 확립

(기록수집과 지원컨설팅1팀)

□ 검토 배경

- 제19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선제적 기록물 관리 및 제반환경의 개선 필요

□ 논의 사항

- (전자문서) 기관 공동형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 기록관리
 - 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요건 및 운영환경(주체·방식) 검토 필요

▶ (환경부재) 자문기관 기록관리 환경 부재로 생산시스템 직접 이관

* 생산시스템 설치장소(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오프라인 방식(외장HDD)으로 이관

▶ (상태확인) 파일손상, 암호설정, 확장자 이상 등 전자파일 신뢰성 검증 곤란

▶ (환경개선) 기관 공동형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RMS) 구축 및 운영 지원

*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과의 온라인 이관체계 구축 및 문제 발생 시 반려

▶ (기계검증) 전자파일 기계적 상태 검증으로 문제파일 탐지 및 후속조치 가능

- (웹 기록) 홈페이지(SNS포함) 주기적 수집으로 변동사항 기록화
 - 웹기록 수집시점 및 방법론 연구 및 수집도구 기술분석 필요

▶ (최종이관) 임기 말 생산기관 홈페이지 일괄 이관으로 최종 모습만 재현

* 가상머신을 이용한 완전형 이관방식 채택으로 재현품질 ↑, 구축비용 ↑

▶ (주기이관) 임기 중 생산기관 홈페이지 개편 등에 대비 주기적 원격 수집

* 표면·심층 웹기록 수집도구 병합 사용으로 재현품질 ↑, 구축비용 ↓

- (데이터셋) 데이터셋 이관·보존단위 추출 및 관련포맷 구조 제시
 - 데이터셋 유형별 논리구조 파악 및 장기보존포맷 설계 필요

▶ (구조변형) 시스템 등록·검색을 위한 임의 범용 구조화 문제 발생

* 철·건 분류로 생산 당시 맥락구조 파악 곤란

▶ (환경개선) 단위기능 추출 및 생산환경 독립적인 장기보존포맷 설계 및 이관

* 스위스 SIARD 포맷 등 선진사례 연구 필요

□ 협조 사항

- 연구개발(보존복원과) 및 cRMS 구축(기록정보기반과) 업무와 협업

3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위원회 중심) 기록관리기준표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기록수집과 지원컨설팅1팀)

□ 현황

- (대상기관) 대통령비서실 등 23개 기관
 - ※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국가안전보장회의 BRM 미사용, 자체 분류체계 적용(대외비로 관리)
- (검토대상) 전년도 신설 단위과제 또는 보존기간 변경 단위과제
- (관련법령)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26조(보존기간)
 -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1(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 (적용기준) (공통)공통업무보존기간표/(고유)보존기간 책정기준표
 -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 및 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 선별기준 참고

□ 문제점

-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국민안전보장회의의 분류체계 현황 파악 불가
- 법령상, 기록관리기준표 검토가 '보존기간'에 한정
- 단위과제 보존기간 협의 운영상 한계
 - 단위과제 보존기간 협의 내역을 실제 운영에 미반영
 - 정부기능분류시스템과 PAMS 미연동에 따른 관리절차 한계

□ 개선 방향

- (법령) BRM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요청하는 사항 준수
- (시스템) BRM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승인절차 또는 RMS 이관 허용
- (절차) 위원회 처리과 공통, 기관 공통, 고유 단위과제 대표 가이드라인 제시

□ 쟁점 사항

- 조직실 시스템 연동 협의 및 협조 필요

4

대통령기록물의 평가·폐기 제도 개선

(기록수집과 지원컨설팅2팀)

□ 현황 및 문제점

1. 대통령기록관의 평가·폐기

- 대통령기록물의 현황 및 특징
 - 소장 기록물 분석 : 기관별/단위과제별/보존기간별/기록물유형별
- 대통령기록관의 재평가
 - 그간의 재평가 현황 : 평가 수량, 평가심의회 개최 및 평가 결과
 - 폐기 시행 현황, 평가 전담 인력(담당자 1인이 소장 기록물 전체 평가), 평가심의회위원회 운영(구성) 등

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평가·폐기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의 기록물 생산 현황
 - 기록물 편철, 기록관리기준표(업무 분류, 보존기간) 운영 등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의 평가 및 폐기
 - 생산기관에서의 평가 및 폐기 절차

□ 개선 방안

1. 대통령기록관의 평가 정책

- 대통령기록관의 평가 정책 수립(이관 대상 기록물의 유형 및 범주, 주제 등)
-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기준 및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방안

2. 대통령기록물의 평가·폐기 절차 및 제도개선

- 생산단계에서의 평가·폐기
- 대통령기록관에서의 평가·폐기

5

대통령기록물 등록 메타데이터 개선 방안

(기록수집과 등록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PAMS 상의 등록 메타데이터 정리
- 문제점 및 쟁점사항 분석

□ 국내외 사례 조사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개괄
 - KS X ISO 23081-1, KS X ISO 23081-2, NAK_S 8 2012(v2.0) 등
-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조사·분석
 - 국가기록원(CAMS), 국회기록보존소, 법원기록보존소 등
 - ※ 필요시, 도서관 등 유사기관 메타데이터 조사·분석 실시
- 해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조사·분석
 - 영국, 미국, 호주 등 선진 사례 중심

□ 개선 방향

- 기본 방향 설정
- 필수 메타데이터 정의
 - 공통 필수, 기록물 유형별 필수 등을 선정, 각 메타데이터별 정의·요건 작성
- 기록물 유형별 메타데이터 개선(안)
 - 전자(규격, 텍스트·이미지·동영상 등 비규격), 비전자(종이, 시청각, 행정박물 등)
- 등록 메타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검수 자동화 방안
 - PAMS 등록단계에 필수 데이터 검수 기능, 기 등록 메타데이터 자동 필터 검증 기능 등

□ 협조 필요사항

- PAMS 메타데이터 개선 사항 분석·적용을 위해 보존복원과 협조 필요

6

시청각기록물 소장현황 및 등록방식 개선

(기록수집과 등록팀)

□ 검토 배경

- 다종·다양한 유형·매체 및 다량의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효율적인 이관 및 등록 방안 검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시청각기록물 현황
 - 대통령별, 세부유형별 등록 현황
- 현재 등록 방식 및 법령·지침·매뉴얼 검토
- 이관 시 문제점
 - 무선별, 중복본, 매체 내 문서 수록 등
 - 기관마다 상이한 방식·기준의 이관(대통령, 생산시기, 보존기간 등 혼재)
- 등록 시 문제점
 - 생산현황 통보는 전자, 이관 및 등록·관리는 비전자
 - PAMS 등록 방식 및 애로사항
 - 대통령별 철·건 기준 상이
 - 선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전량 등록
 - 매체 관리 등
 - 미등록 현황(관리전환, 임시서고)

□ 개선 방향

- 이관 방식 개선
- 등록 방식 개선
 - 선별 등록 방안
 - PAMS 개선 필요사항

7

간행물 유형에 따른 정리·등록 개선방안

(기록수집과 등록팀)

□ 검토 배경

- 공공기관에서 생산 또는 접수되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간행물 유형의 대한 효율적인 이관 및 정리·등록 방안 검토 필요

□ 현황

- PAMS 등록 현황
 - 유형(간행물+문서(종이, CD))
- 이관 현황
 - 간행물만
 - 간행물+문서(종이, CD)

□ 유형별 등록방안 문제점

- 간행물만
- 간행물+문서
 - 발간등록번호 생략 대상 등록의 문제점
 - 목록 작성 시 메타항목에 대한 설명 및 조정 필요
 - 간행물형태(하) 명칭(18개) : 분류기준(내용, 제목) 제시
 - 쪽수 마지막페이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
 - PAMS 업로드시 메타항목(수량)과 PAMS 실제 책 수량 차이
 - 기관에서 이관된 간행물 중복여부에 대한 등록

□ 개선 방향

- 이관 방식 개선
- 등록 방식 개선
 - 선별 등록 방안
 - PAMS 개선 필요사항

9

민간 기록물 수집 및 관리 체계 개선 방안

(기록수집과 수집관리팀)

□ 검토배경

- 대통령기록물의 결락 보완을 목적으로 다년간('09~'18년) 민간 소장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발굴·수집해 온 바, 대통령기록물의 범주 및 운영방식 개선 필요
- 기술, 보존기간 평가, 공개재분류 등 기록관리 프로세스 미수행으로 인한 체계적인 기록관리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1. 수집단계

- (대상) 총 136,608건.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 주요 부처 및 정당 생산 기록, 개인 기록으로 문서, 시청각, 간행물, 행정박물, 기타(업무수첩 등) - 대통령 관련 주요인사 기록물의 일괄 수집으로 공공기록물 및 개인 기록물의 혼재로 대통령기록물의 범주 모호
- (심의) 주요인사의 기록물 기증 시, 기록물수집심의회 절차 생략으로 수집기록물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미흡
- (공개 여부) 공개 관련 관리조건이 기증자 입장을 과도하게 반영, 비공개 기간의 장기화 및 기록물의 활용 미약
- (보존기간 여부) 일괄 영구 지정. 기록물 보존기간 평가 절차 생략으로 기록물 폐기 절차 후속 적용 곤란
- (관리조건 협의) 기초목록에 근거, 공개 및 활용 위주의 협의 수준. 보존기간 및 비공개기간의 경우 호수에 대한 상세 협의 미흡

2. 등록단계

- (공개값 지정) 총 129,843건 등록.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미분류로 구분하며, 비공개(미분류 포함)가 62%(80,361건) 차지. 공개값 판단이 모호할 경우 '미분류'로 처리. 공개 검토 및 전환 후속조치 부재
- (비밀기록물 관리) 대외비, 비밀기록물 등록 시 일반 기록물과 동일하게 비공개로 적용, 별도의 등록 및 처리 기준 미비

3. 활용단계

- (포털 운영) '기증기록 컬렉션' 내에 '09~'17년 기증 현황 및 기증안내·절차 소개, 기증자 1명(곽지용)의 사진기록물 15건 게시 불과
- (전시 운영) '기증자 전당' 내 10여 점 상설 전시로 환경 열악. 기획전시도 10여 점 미만의 기록물 활용 수준으로 비활성화
- (기술 여부) '11~'13년 일부 수행(11,363건)한 후, 담당인력 부재로 다년간 중단. 기록물의 기록정보화 및 콘텐츠 개발

□ 개선 방향

-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수집·선별 강화
 - 주요 정책 관련 소장 기록물의 유형 분석을 통한 결락여부 파악
 - 수집심의회 운영을 통한 기록물의 가치평가 및 수집 타당성 검토
- 비공개 상한 시기의 적용 근거 마련
 - 대통령기록물법 제정('07년) 이전 시기 생산 기록물의 공개 상한선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대통령기록관 훈령 제19호)'에 명시·적용 ※ 공개 시기 명시로 민간 소장 기록물의 원활한 기증 유도
-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전환 절차 마련
 - 기증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절차를 수행하되, 추진 주체,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처리절차 마련
- 기증컬렉션의 대국민서비스 활성화
 - 기증자별, 유형별, 주제별 등 콘텐츠 개발을 통한 내실있는 운영
 - ※ 온라인 서비스 설계(기록콘텐츠과 협의 추진)
 - 旣 전시 이외의 기록물을 상시 및 기획 전시에 활용하여 기록물 기증 문화 분위기 확산
 - ※ 기록전시관 기증자전당 전시 기록물 반기별 교체
 - 기록물 기술(記述)을 통한 기록정보자원화 및 콘텐츠 개발 촉진
-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활용

10

구술기록물 수집 현황과 개선방안

(기록수집과 수집관리팀)

□ 검토배경

- 대통령기록관 개관 이후 매년 역대 대통령 및 관련인사 구술채록 사업을 진행, 216명 1190.5시간('08~'17)의 구술기록물 생산 및 PAMS 등록(87%완료) 추진
- 그간의 구술채록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못한 구술기록물의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개선방안

1. 구술기록물 생산·등록 단계

- 주로 엘리트 구술로, 구술자 생애 전반에 대한 구술채록으로 불필요한 내용도 기록화
 - 대통령의 국정수행 핵심 정보 외에 구술자 개인사 등의 구술로 면담 내용이 일부 산만
- ➡ (개선방안) 인물 생애사에서 정책 주제별(예: 남북정상회담) 중심의 구술
- 그간 구술기록 생산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서비스용 구술 산출물 부재
 - 구술사업 추진 시 구술 서비스 방안(공개 기준 및 서비스 방식) 부재로 산출물은 '원본' 동영상 및 녹취록 등→서비스용 영상 제작물 등 없음
- ➡ (개선방안) 서비스 정책 수립 후, 기 생산 구술기록물에 대한 서비스용 영상물 제작 사업(인트로·음원 삽입, 비공개 편집, 영상 분할, 자막 제작 등)을 별도 추진하고 향후 구술사업 시 과업 범위에 서비스용 제작까지 포함

- 구술 촬영 시 아날로그 6mm테이프 사용 등으로 산출물 제작·관리 비효율화 초래
 - 촬영 환경이 디지털화 되었으나 디지털 캠코더 촬영 시의 위험요소(파일 깨짐, 삭제 등)로 테이프 사용→PC 재생 및 원본 손실에 대비해 테이프를 디지털 파일(MP4 등)로 변환→제작시간 및 비용 소요, 등록관리 복잡
 - ➡ (개선방안) 전문가·보존복원과 협의 등을 통해 테이프 사용 중단 등 산출물 재정비

2. 구술기록물 활용 단계

- 구술기록물 공개·열람 정책 및 세부 지침 마련
 - 「구술기록 수집·관리 지침」 제14조(열람)·제15조(비공개)는 기본원칙만 작성됨
 - ➡ (개선방안) 구술자 공개동의,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 검토, 구술기록공개심의회(혹은 자문단) 구성·심의 제도 마련 등 단계별 프로세스 구체화
- 구술기록물 서비스체계 구축 기본 방안 설계
 - 국내외 구술기록 서비스 사례 분석 및 적용 방안 모색
 - ※ '17년 구술사업 용역 참고
 - 서비스 대상(연구자, 학생, 일반인 등) 분석 및 단계별 서비스 추진 방법 마련
 - ※ 책자 발간, 대통령기록포털 활용 온라인 서비스, 별도의 구술 아카이브 구축 등
 - 서비스를 고려한 생산부터 보존까지의 업무프로세스 분석·개선
 - ※ 구술 산출물 적합성 검토 및 재정비, 메타데이터 재설계 등

11

공개재분류 업무 효율화

(기록제도와 공개관리팀)

□ 현황 및 문제점

1.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 과다로 인한 재분류 지연문제

○ 대통령임기 종료 후 대량이관으로 연간 100만 여건 처리

- * '16년 114만건, '17년 260만건, '18년 116만건 재분류 수행(위탁사업 포함)
- 18대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18~'22년, 372만건)
- 생산 30년경과 및 지정·비밀해제 기록물 공개재분류(연 3만 여건)
- 전직 대통령별 추가 이관기록물 발생

○ 현실적 문제로 공개재분류가 지연되는 기록물 발생

- 인력부족으로 최초재분류 실시 이후 2년 주기 재분류 불가
- 지정·비밀해제 이후 PAMS 미등록으로 인한 재분류 지연

2. 공개재분류 수행 인력의 구성 및 문제점

○ 내부적 환경: 전담인력 충원 미비와 위탁사업 운영

- 업무성격상 대상량은 계속 증가하나 처리인력(직원)은 10년간 동일
 - * '08년, 2만6천건/ 4명 → '18년, 116만건/ 4명('18년 하반기 기록연구사 1명 신규채용)
 - * '17.5~7월 지정기록물 이관·검수 투입, '18.3월부터 1명 지원근무로 업무공백 발생
- 부족인력 충원을 위해 계약직, 기록실무원, 위탁사업으로 보완
 - * '08~14년 실무원 2~4명·계약직(사안별), '15~17년 계약직 2~3명→'18년 실무원 3명 신규채용

○ 외부로부터의 지적사항: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직접 수행 추진(국회)

- '19년도 예산편성에 위탁사업 대신 기록실무원 15명 채용 추진
- 신규채용 모두 가능할 시 전담인력 23명 확보(직원5명+실무원18명)
 - * 23명×연평균 작업량(14,746건) = 339,158건(연간 평균 목표량 100만 여건 대비 33.9%)
- 원활한 18대 재분류 수행에 향후 44명 추가확보 필요('19년 필요인력 67.8명)

3. 비정상적 대통령기록물 관리 프로세스와 공개재분류 업무과중

○ 이관·등록 작업이 공개재분류에 미치는 영향

- 공개여부 미분류 기록물을 비공개기록물로 간주
 - * 16대 재분류 1,078,690건 중 미분류는 489,493건(45.4%) [참고2]
- 한시기록물은 PAMS 등록 이후 재분류 대상으로 간주
- 추가 이관분의 수시 등록으로 재분류 대상량 변동

○ PAMS 운영이 공개재분류에 미치는 영향

- PAMS 기능구축 이전 철 단위로 재분류한 비전자 기록물 다량 발생
 - * 16대 철 단위 재분류 기록물의 건 공개값 현행화('26년까지 추진계획)
- 비전자 기록물 전자화, 시청각기록물 등록(사진, 음성, 동영상 등 디지털 화 및 MAM 등록)에 따른 재분류 편의성 증대

4. 공개재분류 법정시한과 입법 미비사항

○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공개)

- 이관 후 최초 재분류시기에 대한 법 개정 실시('10.2.)
 - : 2년주기 재분류→ 5년경과 후 1년 내 재분류 + 2년주기 재분류
- 비공개대상정보 6호에 대한 재분류 보류 규정(제16조제3항) 신설 추진중

○ 대통령기록물법 또는 시행령 입법 미비 사항

- 생산 30년경과 재분류 이후 주기적 재분류 여하(현재 공공법에 따라 5년주기)
- 지정비밀해제 기록물의 재분류 시기(현재 관행상 1년 이내)

5. 공개재분류 대상기록 선정과 작업공정의 검토사항

○ 공개재분류 대상기록 선정의 문제점

- 개별업무시스템과 시청각기록물(사진·음성·동영상)의 재분류
 - : 열람수요가 적은 다량 기록물의 재분류를 위한 위탁사업 수행
 - * 17대 재분류 대상 약 443만건 중 개별업무시스템(행정정보데이터세트) 약 396만건(89%)
 - * '15,16,18년 17대 위탁사업 시 시청각기록물 약 12.3만건 재분류 수행

－ 미분류 기록물과 한시기록물의 재분류

：실제적인 공개기록물 또는 폐기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수행

○ 공개재분류 수행과정 상의 검토사항

－ 정리기술의 분류계층을 활용한 작업그룹 선정방식 채용

：건별 공개값 검토를 수행하므로 작업시간 단축효과 미미

* 공공기록물법시행령 제72조제1항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

6. 공개재분류와 정보공개제도의 관련성

○ 공개관련 법률 자문 추진

－ 대통령기록물도 정보공개법(제2조)에 의한 ‘정보’에 해당됨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됨(‘08.4.)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리 현황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109개) 수립(‘08.4.)

－ 행안부 정보공개매뉴얼, 서울시 공개재분류 기준서, 국방부·외교
통상부·통일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등 참조

* 현재 PAMS내 활용 세부기준은 132개로 매년 일부 개정 실시

－ 목록별검토서 기술규칙·유형별검토서 기술규칙 수립(‘09.4.)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리 현황

－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업무매뉴얼 개정 미비

－ 비정형적 기록물(정보부존재, 가독불가)의 공개값 처리 기준 모호

12

대통령기록정보 서비스 개선 방안

(기록콘텐츠과 콘텐츠팀)

□ 추진 배경

- 역대 대통령의 소장기록물을 대통령기록 포털에 공개하고, 검색도구를 개발하여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제고
- 대통령 기록물의 원문 등을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민간영역의 연구기능 활성화 기대

< 기록물 관리 절차 >

과정	생산단계	정리등록단계	보존단계	서비스단계
업무 내용	정보공개포털 (open.go.kr) 생산기록물 공개	▶ PAMS 등록 시 비실명화 프로세스 추가	▶ (공개외 목록·원문) 공개재분류시 공개 결정 비실명화 프로세스 추가	▶ (목록·원문) 업로드 ▶ 주기적인 업데이트 ※ 검색도구 고도화
담당 기관/부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수집과	기록제도과	기록콘텐츠과 보존복원과

□ 문제점

- 대통령기록 포털검색은 단순한 키워드 중심이고, 다양한 주제어 등의 검색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정리·기술이 이명박·노무현 대통령 일부만 되어 있고 대부분 되어 있지 않아 검색 도구 간 연계가 되지 않고 있음

<유관기관의 기록물(목록 및 원문) 검색 서비스 현황>

- ▶ (TNA 포털) 목록 및 원문(가장 인기 있는 기록 전체 소장량 기준 5%이상) 공개
- ▶ (NAK, 국가기록포털) 비 전자 기록물에 대한 목록 및 원문 공개
-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목록 및 원문 공개('13.1월부터 생산기록)
- ▶ (MOIS, 정보공개포털) 목록 및 국장급이상 결재한 공개기록의 원문 공개

- 대통령 기록포털에서 기록물 목록 및 원문 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들의 대통령기록에 대한 관심 저하

□ 주요 선진국의 검색 서비스 동향

○ 영국(TNA) 검색 서비스

- 상단에 다양한 온라인 검색지원을 위한 검색 가이드 등 검색도구들을 집중 배치하여 이용자들의 기록물 활용과 재이용을 적극 지원함
- 기록물 검색 중심의 메뉴 구성 및 메뉴 화면 단순화
- 정보 제공 방식은 기관 홈페이지와 온라인 검색도구(검색 가이드, 디스커버리(카탈로그), 온라인 디지털 컬렉션 등)의 2중 웹사이트로 구성

○ 미국(NARA) 검색 서비스

- 일반적으로 '키워드 · 기술서 · 주제별 · 기록정보콘텐츠' 검색 방법으로 원하는 기록정보를 찾음
- 특히, Refine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마이크로필름, PDF, Text 파일' 등 기록매체유형으로 검색 가능
- 온라인 검색가이드 중 특정주제별 검색 가이드(Research a Specific Topic) 제공
 -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제인 '미국의 건국문서, 외교정책·군사기록·수사기록, 인물, 장소, 연방정부, 해양·항공·과학기술, 이벤트·백년단위·국경일, 예술·문화'의 8개 대주제와 41개 중주제로 구성

○ 호주(NAA) 검색 서비스

- NAA는 주제가 중요하면서 소장 기록물의 규모가 큰 경우 단행본 형식의 가이드를 제공
- Fact Sheet는 주제나 기록유형별로 기록을 찾고 해당기록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용에 관한 다양한 안내를 지원하는 기록이용안내서
- A-Z For Research Guide는 NAA가 제공하는 다양한 검색도구와 다양한 정보원을 주제별로 모아서 보여주는 포괄적인 가이드

□ 추진방안

○ 대통령기록 포털의 전면적 개선

- 기록물 검색 중심의 메뉴 구성 및 메뉴 화면 단순화
- 기록물 검색·활용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와 온라인 검색가이드를 웹 사이트로 분리하여 운영하여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시스템 차원(연계규격 정의 및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차원(기록물 선별 및 비실명화 작업)에서 포털과 PAMS의 연동방안도 함께 추진

○ 기록물의 검색 편의를 위한 검색 도구 개발·제공

- 일반적으로 키워드 검색, 기술서 검색, 주제별 검색, 기록정보콘텐츠 검색 방법으로 기록 정보 가능하도록 보완
-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검색서비스 가이드 (Research guide) 제공
- 기록물 기술서(Description Catalog) 중심의 검색체계 제공
- 기존 기록정보콘텐츠 및 가이드, 시소러스 등 효과적 상호연계

○ 대통령기록 목록 및 원문 원칙적 공개추진

- 목록 및 원문의 공개 범위, 절차, 방법, 비실명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프로세스 마련

- (범위) 목록은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 원문은 30년 이상만
- (절차) 목록은 등록 시 공개, 원문은 보존 완료 시 공개
- (비실명화) 비실명화 기준 등을 정하여 각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단계별*로 해당 과에서 추진

* ① 이관 PAMS 등록시, ②공개재분류 시, ③기술 시 비실명화 프로세스 PAMS내 추가 구현

- (기존 기록물) 순위를 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처리

※ 본원(국가기록포털), 서울시(정보소통광장), 행안부(정보공개포털) 등의 원문공개 절차 등 벤치마킹

- (필요시) 목록 및 원문공개 업무절차 규정 제정

□ 향후 추진계획

- 선진 외국 포털(기술 및 검색 도구관련) 비교 분석 : ~ '18. 9
- 대통령기록포털 개선을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 ~ '18. 12
- 우선 순위에 따른 목록 및 원문서비스 추진 : ~ '19. 1
- 이용자 검색 도구 개발 : '19. 7 ~
- 차세대 대통령기록정보 서비스 방향 및 프로세스 수립(연구용역) : '20. 1 ~

13

대통령기록전시관의 전시 개편

(기록콘텐츠와 전시팀)

□ 추진 배경

- 대통령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중점에서 전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 기관의 비전, 역할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민주주의 발전기여
- 정치에 중립적이고 개관적인 전시컨셉으로 관람객에게 무미건조한 전시에서 생동감과 감동을 주는 대통령 기록 체험장으로 전환
- 5년 임기를 마친 시점에 전시관 개편을 지양하고, 매년 시기적절하게 상설전시관 전시콘텐츠 보완 필요

< '16년 개관 당시 상설 전시구축계획(안) >

- 장기간 내용변경이 없도록 **중립적·개관적** 전시
 - 대통령제도, 취임식 등 공통사항 위주, **역대 대통령 치적은 지양**
- 개별전시관 청남대 등과 **전시내용 중복방지**
-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감성적·체험적 전시**

□ 문제점

- 상설전시관은 대통령 임기인 5년* 주기별로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시의성 있는 전시에 어려움
 - * D-1년 예산편성 ⇒ D년 콘텐츠 설치
- 대통령 권한과 역할 소개에 중점을 둔 전시콘텐츠 구성으로 인하여 각 대통령별 특성·성과·정책이 드러날 수 있는 기록물 부족
- 대통령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적절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 전시 공간 역할 미흡

□ 추진방안

- 상설전시관 연도별 계획에 의거 매년 개편
 -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1개 층씩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관람객의 만족도 제고
 - * '19년도 상설전시관 1층 개편 예산 3억 반영(정부안), 국회대응 필요

- 연도별 개편 계획(안)

연도	개편 주요내용	비고
2018	2층 : 남북회담 관련 자료 전시	기록물 철거
2019	▶ 1층 : 대통령별 업적 전시 ▶ 로비 : 의전차량 체험용으로 전환	대통령 상징조형물 철거
2020	4층 : 대통령별 특색 있는 기록물로 대체	보완
2021	3층 : IT를 결합한 체험형으로 개편	보완

○ 시의성 및 대통령별 업적·특색이 살아 있는 전시공간으로 전환

- 전시물의 대통령별 형평성도 고려하되, 전시물 중에 관람객의 관심과 흥미가 낮은 전시물은 점차 대통령별 업적과 특색이 있는 전시물로 대체

<전시표현수단에 따른 전시형태 구분>

전시형태	전시표현 수단
실물 모형전시	실물, 복제품, 모형, 디오라마 연출 등 일체매체를 이용한 전시
패널전시	사진, 설명판, 해설패널, 그래픽패널 등의 평면매체를 이용한 전시
영상·음향전시	영상·음향·오디오, 컴퓨터영상 등의 영상·음성매체를 이용한 전시
실연전시	관람자의 신체, 의지, 동력 등에 의해 전시물을 움직여 보는 전시
실험·이벤트 전시	해설자, 전문가 등의 시범 또는 설명 후 실험에 직접참여 하는 전시

○ 아카이브 기능에 맞는 기록물의 발굴 및 활용

-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한 자료 중에서 역사성, 희소성, 대표성이 있는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시에 활용

○ 전시매체 및 기법, 전시디자인의 현대화 추진

- 디지털 기술을 전시에 도입하여 스토리텔링과 상호 소통적 전시, 체험형 전시, 몰입형 전시 등을 개발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경험 제공
- 관람에 적합하도록 전시 동선과 관람자 체험을 고려한 공간 디자인, 시각디자인, 영상디자인 측면에서 전면적 전시 현대화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정상회담 기획전을 2층 자료관에 상설전시로 활용 : '18. 11~
- 대통령별 업적과 정책 위주로 1층 전면개편 : '19.1~
- 상설 및 특별전시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19.2.

14

교육 · 체험 프로그램 운영체제 개선

(기록콘텐츠와 교육체험팀)

□ 검토 배경

- 대통령 기록물을 단순히 서고에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민주주주의 발전 및 차세대 공공지도자 육성
- 학생, 일반인 등 대상별 등에 맞는 질 높은 기록문화 체험활동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올바른 기록문화 확립
- 대통령 기록물 활용으로 기관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보고 싶어 할 기록관 구축

□ 운영현황

- 견학 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상	내 용	소요시간
대통령기록문화 체험교실	초등	① 영상관(기록관 소개 및 홍보 영상)	○ 2시간 : ①~③
자유학기제 및 특별활동 연계 진로탐색 프로그램	중.고등	② 대통령기록전시관 견학	
선거관리위원회 연계 체험 프로그램	일반	③ 견학 체험실(특강 및 체험 ¹⁾)	○ 6시간 : ①~⑤
문화소외계층 초청 프로그램	학생.일반	④ 오찬 후 이동 ⑤ 충청북도 청남대 견학	

- 견학 체험 참석자 현황

(단위 : 회/명)

연 도	계		초		중.고		일반		문화소외		비 고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계	348	9,403	183	4,749	113	3,140	20	673	32	841	
2018	171	4,560	104	2,770	51	1,386	4	105	12	299	상반기 : 72회 1,879명
2017	117	3,015	59	1,424	42	1,187	4	112	12	292	
2016	60	1,828	20	555	20	567	12	456	8	250	

1) 특강 및 체험 :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 & 기록관 모형만들기 / 보존과학자 & 보존처리 / 한지의 우수성 & 한지공예 / 인쇄술의 역사 & 인쇄판 만들기 / 적자생존 이야기 & 옛책 만들기 / 민주주의 선거교실 & 공약문 작성

□ 문제점

- 기록관련 단순 강의 형식의 특강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식전달 수준의 교육방식과 일방적인 강의 형식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효과 저하
- 대통령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부족
 - 대통령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미활용으로 기관의 아카이브 특성을 반영한 교육효과 반감
- 초등학생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대상 지역의 제한
 - 자유학기제 확산에 따른 정부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충청권을 제외한 타 지역의 교육수요 미 충족으로 기관의 홍보효과 미흡
- 민주주의 등 리더십 교육훈련 프로그램 미비
 - 대통령 기록관의 미션인 민주주의,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부족으로 건전한 국민문화 정책부실

□ 개선방안

- 이용자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 : 학교 학습과 연계된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 성인 : 평생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 대통령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NIE(Newspaper In Education) 기반 프로그램 개발
 - 집단탐구(GI, Group Investigation) 학습모형 기반 프로그램 개발
 - 대통령기록물을 가공한 토론 및 역할연기 등 프로그램 개발
- 민주 리더십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 및 대통령의 리더십이 가미된 프로그램 개발
- 초중고별 균등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대상 지역 확대 운영
 -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홍보 및 교육대상지역의 순차적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참여형 프로그램 신규개발을 위한 교육전문가 배치 : ~ '18. 10
- 타 지역·기관의 벤치마킹 추진 : ~ '18. 11
- 프로그램 개발 계획 수립 및 특강·체험 프로그램 정리 : ~ '19. 01
- 사회복지요원 등 보조인력 확보 검토 : ~ '18. 11
- 신규 프로그램 및 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 '19. 02~

[국내외 견학 체험 프로그램 사례]

구분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내용	대상
	견학	시청		
트루먼기념관	1시 15분	45분	▶ 견학 ▶ 다큐멘터리 상영	▶ 인원 : 15명이상 ▶ 초, 중, 고, 성인
케네디기념관	2-3시간		▶ 케네디는누구인가 ▶ 대선운동과 선거 ▶ 모두를 위한 권리 ▶ 자유를 위한 노래	▶ 그룹방문 ▶ 학교방문
존슨기념관	1시간 30분		▶ 스파이 딜레마 ▶ 대통령 결정 ▶ 인권문제	▶ 인원 10-60명 초, 중, 고, 성인
후버기념관	2시간 (사적 1)	1시간	▶ 후버 생애 스케치 ▶ 영부인생애 스케치 ▶ 나는 스파이 ▶ 정치만화를 이용한 역사적 사건 이해	▶ 초, 중, 고, 성인
김대중 기념관	1시간	1시간	▶ 도슨트 프로그램 - 관람 및 전문해설 ▶ 청소년 역사프로그램 ▶ 셀프견학 PDA 제공	▶ 인원 10-30명 ▶ 초, 중, 고, 성인
외교부 사료관	▶ 주 5일, 10회 ▶ 1시간		▶ 사료관 소개 ▶ 영상상영 ▶ 사료관체험 학습 ▶ 외교관 임용장 체험	▶ 인원 15-80명 ▶ 초, 중, 고, 성인
국립도서관	▶ 주 5일, 12회 ▶ 40분, 1시간 30분		▶ 역사 및 연혁 ▶ 도서관 이용방법 ▶ 홍보 동영상 ▶ 시설 관람	▶ 인원 5-20명 ▶ 기관, 단체, 개인 ▶ 초, 중, 고, 성인

20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세부이행계획

2019. 3.



❏ 목 차 ❏

I. 추진개요	1
II. 추진성과 및 보완할 점	2
III.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3
IV. 혁신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5
1. 대통령기록물 생산지원 및 분류/평가 체계 개선	5
2. 디지털 기반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재설계	10
3. 기록유형별 등록 메타데이터 정의 및 업무방식 개선 ..	16
4. 대통령 지정기록물 관리 업무 개선	21
5. 대통령기록물 평가·폐기 추진	31
6.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체계 개선	40
7. 구술·기증 등 수집기록물 관리 체계 개선	45
8.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체계 개선	52
9. 대통령기록정보 서비스 개선	65

20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세부이행계획(안)

19대 정부 국정과제 및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의 지속적인 실행을 위한 19년도 혁신 과제별 세부이행계획을 보고 드림.

I.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국정과제 8-1) 혁신적인 열린 정부('17. 7.)
 - '18년까지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권고)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방안('17. 12.)
 - 대통령기록관리 제도적 미비점 개선으로 대통령기록 보호·활용 증진
 - 기록관리 시스템 개편을 통한 중요 국정기록을 역사기록으로 보존

2 추진경과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권고사항 검토·분석('18. 4.)
 - 혁신을 제도와 업무로 분리, 제도개선은 '18.12월 방안 마련·업무개선 과제는 프로세스 분석이후 세부과제 확정을 각각 목표로 설정
-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내·외부 의견 청취('18. 5~6.)
 - 제6차 기록관리혁신 자문위원회의 발제 및 자문위 의견 청취(5.25.)
 -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간담회 개최(6.21.)
- 대통령기록관리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18. 7~9.)
 - 현안과제 발굴을 위한 관내토론회 진행
 - 업무 단위별 분석을 통한 혁신 과제 20개 확정
- 혁신 과제별 토론회* 및 업무 프로세스 혁신 초안 마련('18. 10~12.)
 - * 공개재분류(10.15.), 이관·수집(10.17., 10.23.), 보존·복원(10.22.), 지정기록(10.30.)

Ⅱ. 추진성과 및 보완할 점

1 추진성과

-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 지정기록물 보호, 대통령 궐위 시 관리 및 전직 대통령 열람제도 등 입법미비사항 개선
-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제 선정) “조직 전문성 강화 위해 기록과 함께 일하는 프로세스로의 전환” 외주용역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전환*
 - * 공개재분류 용역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 용역 사업은 '18년 종료, '19년부터 자체 추진
 - 대통령 기록관리 **쏠 영역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혁신 과제 20개*** 발굴
 - * 생산 및 이관·수집(7개), 등록·재분류·지정 등(6개), 보존·복원 및 시스템(3개), 전시·활용 및 교육·체험(3개), 조직 운영(1개)
- (생산기관 지원 체계 구축) 생산기관 지원 추진단(단장2팀, 5명) 출범·운영*
 - *지침마련 배포, 처리과 담당자 교육 및 책임자 간담회 등 추진
- (다양한 전자기록유형 수용을 위한 시스템 개편 기반 마련)
 - 연구용역을 통한 SNS·웹기록물 등 수용을 위한 디지털기반 대통령 기록관리 모델 마련 및 PAMS ISP 사업예산(3억) 확보
 - 전자기록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4개 기관* 협의체 참여를 통한 사업내용 공유 및 현안 논의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 * 대통령비서실-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서울시 전자기록관련 부서

2 보완할 점

-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제에 대한 낮은 성과 체감
 - 과제 광범위, 일부 부서 편중*, 목표달성 방안 구체화 미흡, 과제별 추진편차 상이, 본원과 병행 필요과제 공동논의 부족 등 개선 필요
 - * 총 20개 과제 중, 생산지원단 6개, 기록관리과 7개
 - ⇒ 과제 재조정, 핵심과제 선정 등 ‘선택과 집중’, 진단 내실화 및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필요
- 대통령기록관의 비전·미션·전략의 중·장기적 정책 마련을 위한 깊이 있는 고민 부족
 - ⇒ 정책마련의 근간이 되는 통계관리, 지정·재분류·폐기·열람 관련 신규 정책 개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등 정책적·제도적 측면 보완

Ⅲ.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1 정책여건

- (제도 정비) 혁신을 위한 법령 정비 및 관련표준 제·개정('19.2.~)
- (생산환경 변화) BH 생산(업무관리)시스템 구축('18.4.) 및 기록관리 시스템(RMS) ISP('18.12.), BH RMS 개발('19.4.~, 현재 조달계약의뢰)
- (시스템 개편) CAMS BPR/ISP 완료('18.12.), PAMS ISP 추진('19.2.~)
- (국가기록관리 혁신 지속) 유사과제 추진상황 분석 필요('19.2.~)

2 추진방향

□ 기본방향

- ‘핵심과제’ 선정 및 역량 집중으로 성과 체감형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 표준화·기준 마련 등 전문성 강화 중심으로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 가치 있는 대통령기록문화 확산을 구현하는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 추진목표

비 전

“우리나라 역사를 보존하고 교육·활용을 통한 사회 공헌”

목 표

전문성, 독립성을 기반으로 대통령기록문화 확산

전 략

① 기록생산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다양한 기록유형 이관·수집

② 가치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관리역량을 집중하는 기록관리 내실화

③ 대통령기록물 보존 전문성 제고 및 대통령기록정보 서비스 역량 강화

□ '19년 혁신 과제 조정 및 핵심과제 선정 ⇒ 2년내 완료 목표 설정

구분	AS-IS(2018년)	TO-BE(★핵심과제)
생산 이관 수집	1. 대통령 자문위원회 현황 및 개선방향 (과제에서 제외 검토)	1. 대통령기록물 생산지원 및 분류/평가 체계 개선★ ①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제도 개선 ②생산기관 기록물 분류체계 개선 ③생산기관 기록물 선별/평가체계 개선 ※협업부서 : 기록관리과
	2.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 및 활용 체계 개선(변경2로 조정)	
	3.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제도 개선 (3~6번 통합, 변경1로 조정)	
	4.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리 기준표 현황 분석(※18대 중심)	
	5. 대통령기록물 평가 및 보존기간 책정 체계 개선	
	6. 대통령기록물 폐기 제도 개선	
등록 재분류 지정	7. 대통령기록물 등록 메타데이터 개선 방안 (7~9번 통합, 변경3로 조정)	2. 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재설계★ ①기록유형별 이관규격·보존포맷 재설계 등 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협업부서 : PAMS ISP 업무협의회 대상 부서 ②이관절차 등 이관프로세스 개선 ※협업부서 : 보존복원과
	8. 시청각기록물의 등록방식 개선 방안	3. 다양한 기록유형별 등록 메타데이터 정의 및 업무방식 개선★ ※협업부서 : 생산지원단(이관규격), 보존복원과(보존), 기록서비스과(활용)
	9. 대통령기록관 이관 간행물 등록 개선 방안	4. 대통령 지정기록물 관리 업무 개선★
	10.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업무 개선 (변경4로 조정)	5. 대통령기록물 평가·폐기 추진 ※협업부서 : 생산지원단, 보존복원과
	11. 공개재분류 체계 개선(변경6로 조정)	6.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체계 개선
	12. 구술기록물 수집 현황과 개선방안 (12~13번 통합, 변경7로 조정)	7. 수집기록(구술·기증 등)을 관리 체계 개선
	13. 기증 기록물 수집 및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보존 복원 시스템	14.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체계 개선	8.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체계 개선★ ①전자매체 관리기준 및 보존 절차 마련 ※협업부서 : 생산지원단, 기록관리과 ②보존공간 정비 등 보존환경 개선 ※협업부서 : 기록관리과(폐기) ③데이터 품질 개선 및 안정적 시스템 운용 ※협업부서 : 생산지원단(이관), 기록관리과(메타)
	15. 대통령기록물 보존관리업무 개선	
	16.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체계 개선	
서비스 전시 교육	17. 대통령기록정보 서비스 개선 방안	9. 대통령기록정보 서비스 개선★ ①목록·원문 서비스 강화 및 포털 정비 ※협업부서 : 기록관리과, 보존복원과 ②전시기본계획 마련 및 교육·체험 강화 ③대통령기록연구 지원 확대
	18. 대통령기록전시관 전시 개편	
	19.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체제 개선	
운영	20. 전문적이고 안전한 대통령기록관 관리·운영	검토는 하되, 인사 등 개인정보영역을 포함하므로 비공개자료로 내부관리

IV. 혁신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1 대통령기록물 분류 평가 체계 개선

주관부서	대통령기록물 생산지원단	국가기록관리T/F 혁신 보고서 관련	세부과제 2-2, 2-4
담당자		관계 기관 관련 부서/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본원 지원기준과

□ 추진 배경

- 현재 BRM 기능분류 체계와 보존기간 7종 분류체계는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 존재
- 임기 종료 후, 전량 이관되는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에 따라, 보존가치가 낮은 기록물 이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록관리 업무 비효율 초래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SNS 등 다양한 생산 환경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유형과 내용을 고려한 선별 및 세부 이관 지침 필요

※ 국가기록혁신 T/F 보고서 관련내용

- (세부과제 2-2) 기록평가제도 개선(p.147)
- (세부과제 2-4) 생산기관-대통령비서실 기록관-대통령기록관 업무체계 재정립(p.150)
⇒ 대통령기록물 기록관리기준표 마련 및 생산지원체계 마련

□ 그간 추진경과

- (업무개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단위과제 신설·변경 지원
 - (기존)생산기관에서 단위과제 신설·변경 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보존기간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정 의견 제시
 - (개선)생산기관*의 업무분석을 통해 기관의 단위과제 범위 및 보존기간을 先제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재정비 할 수 있도록 지원
- * '18년 대통령 자문기관 단위과제 재설계 추진 : 총 18개 기관
- (현황분석)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업무 및 기록물유형 분석
 - 대통령보좌기관 업무, 단위과제, 생산기록물 유형, 보존기간 분석*을 통해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 *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내 이관, 등록된 기록물 등 분석

□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가.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 개선

- 기록물 분류의 핵심 계층인 단위과제가 체계적인 업무분석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통제 및 관리 권한 부재로 인해 관리 부실 심각
 - 단위과제 범위 설정 부적절, 고유업무 과제 부재 및 보존기간 하향책정 등
 - 업무 분류와 기록물 분류가 일치되지 않는 한계 존재
 - * 회의개최계획부터 회의 결과, 회의 운영 지원 업무 등이 회의명으로 하나의 과제로 분류될 경우, 보존기간이 '영구'인 기록과 '3년'인 기록이 하나로 편철
- (개선방향) 대통령기록물 특성에 맞는 별도의 분류체계 재설계 필요

※ 기록물 분류체계 재설계 참고사례

- (서울시) 2013년 서울시 BRM 및 기록관리기준표 정비사업
 - (대통령기록관) 2013년 대통령기록물 주제분류 체계 연구용역
 - (호주) RA(Records Authority), (영국) OSP(Operational Selection Policy) 등
- ⇒ 호주, 영국 사례 및 대통령기록관 연구용역 결과 참조

나. 대통령기록물 선별·평가 정책 수립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대상이며, 종별 구분과 책정기준이 임기종료 후, 전량 이관되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관리 및 보존가치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미흡
 - 보존기간이 1, 3, 5년인 경우에도 생산기관 폐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실상 무의미하며,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보존가치를 달리 책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음*
- * 대통령비서실 민원 청사관리(청와대 시설) 주요현안보고 기록 등 보존가치 상향 필요
- (개선방향) 대통령기록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생산기록물에 대한 선별·평가 세부기준과 현 보존기간 체계 개선 필요

※ 선별·평가 기준 참고사례

- (호주) RA(Records Authority), (영국) OSP(Operational Selection Policy) 등
- ⇒ 호주, 영국 사례 및 대통령기록관 연구용역 결과 참조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분류) 공공기록물법 법률 제18조 준용 ○ (보존기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 26조 준용 ○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 미비 ○ 대통령기록물 선별·평가 기준 미비	○ 법률 제7조 1항에 따른 시행령 개정 ○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 ○ 대통령기록물 선별·평가 기준 및 세부지침 마련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공공기록물 분류/평가 방식을 준용 ○ 대통령기록물 생산, 관리 기반 미흡	○ 생산단계에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적합한 체계적인 분류/평가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이관 이후 대통령기록물 관리 효율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추진 내용(개선 방안)

[혁신과제 1 추진내용 총괄표]

목표	세세부 과제	추진방법	비고
단기 (‘18년)	①대통령보좌기관 업무 및 기록물유형 분석	현황분석	‘18년 완료* * 내부보고
	②대통령자문기관 업무분석 및 단위과제 보존기간 재설계	업무개선	‘18년 18개 기관 재설계 지원
중기 (‘19년)	①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 개선 초안 마련	법령개정	‘19년 상반기(시행령 반영*) *대통령기록관 별도의 분류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할 수 있음을 명문화
		업무개선	‘19년 하반기(업무절차 개선)
	②대통령기록물 선별·평가 기준 및 세부 지침 초안 마련	기준마련	‘19년 하반기(세부기준마련)
		업무개선	‘19년 하반기(업무절차 개선)
장기 (‘20년~)	①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 개선 최종안 마련	업무개선	‘20년 상반기(업무절차 개선)
	②대통령기록물 선별·평가 기준 및 세부 지침 최종안 마련	업무개선	‘20년 하반기(업무절차 개선)

※ 단기 ①, ② 과제는 ‘18년도 종료

① (중기)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 대통령 보좌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기능'과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특정 사건 등의 '주제'를 고려한 대통령기록물의 기본 분류체계 마련
- 기존 대통령기록물 주제분류 연구 결과 및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기록관 소장 보좌기관 기록물의 업무 및 단위과제 현황, 기록물 건 등을 맵핑하여 분류체계 초안 마련

* 대통령기록물 주제분류체계 연구 용역('13) 등 활용

→ 기록물 건 맵핑에 따른 귀납적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체계(초안) 도출

② (중기) 대통령기록물 선별·평가 정책 수립

- 관내 직원 및 관련기관 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선별·평가 관련 국내·외 사례 및 방법론, 기준 서식 등 추진 기본 방향 검토
- 전자 또는 비전자 환경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이관 유형 및 소장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유형 분석을 통해 이관대상 기록물 범위, 보존기간, 폐기 기준 등에 대한 초안 마련

→ 내·외부 전문가 검토, 자문을 거친 후, 정책(기준 및 지침)(초안) 마련

③ (장기)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 및 선별·평가 정책 최종안 마련

-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초안) 및 선별·평가 기준 및 세부지침(초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보완 및 최종안 마련

→ 필요시, 시행규칙 반영 또는 지침(매뉴얼) 발간

□ 추진일정

[혁신과제 1 추진일정 총괄표]

세부과제명		2018		2019				2020				비고
		3	4	1	2	3	4	1	2	3	4	
단기	대통령보좌기록물 업무 및 기록물 유형 분석											
	대통령기록관 단위과제 보존기간 재설계 지원											
중기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 초안 마련											
	대통령기록물 선별평가 정책 초안 마련											
장기	분류체계 및 선별평가 정책 최종안 마련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

- (중기)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초안) 마련(~'19.12월)
 - 분류체계(초안) 마련 및 관내·외 전문가 의견수렴('19.6월)
 - 분류체계(초안) 수정·보완 및 시스템 등 적용방안 협의('19.12월)
- (중기) 대통령기록물 선별·평가 정책(초안) 수립(~'19. 12월)
 - 선별·평가 관련 국내·외 사례 및 소장 기록물 분석 등 관내 토론 및 의견 수렴('19.10월)
 -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세부 유형별 보존기간, 이관 범위 등 선별·평가 기준 및 세부 지침 초안 마련('19.12월)
 - * 필요시, 관내·외 전문가 자문 및 생산기관 의견 수렴 실시
- (장기)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 및 선별·평가 기준 및 세부지침 최종안 마련('20.12월)
 - 분류체계 등 시스템 적용 및 매뉴얼 마련 등('20.12월)

< 소요예산 집행일정 >

- 전문가 및 생산기관 의견수렴 간담회(~'19.12월) : 약 6백만원(일반수용비)

□ 관계기관·부서 협조사항

- (기록제도과) 법령 개정사항 검토의견 제출('19. 3월)
- (기록관리과) 선별·평가 기준 및 세부지침 관련 검토·협의('19.12월)
- (기록서비스과) 분류체계 재설계 관련 검토·협의('19.12월)
- (대통령비서실) 분류체계 및 선별·평가 정책 수립 관련 검토·협의(~'19.12월)

2

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재설계

주관부서	대통령기록물생산지원단	국가기록관리T/F 혁신 보고서 관련	과제 3
담당자		관계 기관 관련 부서/팀	대통령기록관 전부서 국가기록원, 생산기관 등

□ 추진 배경

- ICT 기술발전 및 대통령기록 생산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기반의 대통령기록관리체계로 전면 재설계 추진
 - 국정과제 관련 전면적 법제도 개정 예정('19년)이며, BH 업무관리 시스템('18.4.) 및 기록관리시스템 변경('19년)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
 - ICT 기술 발전에 따른 기록관리 업무 도입·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대통령기록관리 개선사항 반영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이행전략 필요

※ 국가기록혁신 T/F 보고서 관련내용

■ (과제 3) 디지털기반의 대통령기록관 모델 정립(p.154)

- ⇒ 통합대통령기록관과 개별대통령기록관 각각에 필요한 기능과 상호간에 연계되어야 할 기능에 관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
- ⇒ 최근 대통령기록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생산됨에 따라 디지털아카이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디지털 역량을 확대 강화
- ⇒ 통합대통령기록관에서는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를 지속적으로 구축

□ 그간 추진경과

- (예산확보) 중장기 정보화 이행전략(ISP) 추진을 위한 예산(3억) 확보
- (용역추진) 「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사업」 계획수립 및 계약
 - 추진내용 : 현행시스템 진단 및 생산환경 변화를 반영한 차세대 시스템 설계, 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 서비스 모델 설계 등
 - *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 및 메모보고 등 추진
 - 추진경과 : 사업계획 수립('18.11.) → 조달청 공고('18.12.26. ~ '19.2.8.) → 제안서 기술평가('19.2.12.) → 기술협상·계약완료('19.3.7.)

□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가. 대통령기록 생산환경 변화에 따른 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모델 재설계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변경으로 현행 이관 규격 및 보존포맷 형식, 시스템 구조에서는 기록물 이관 불가
- 법·제도의 개정으로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불가피
- 정부 업무의 클라우드 환경 전환, 빅데이터 처리업무 증가 등 최신 ICT 기술 발전에 따른 기록 생산·관리 업무 환경의 변화

→ (개선방향)

- 생산기관 시스템 및 법령 변경 사항을 분석하여, 원활한 이관과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관 규격 및 절차, 기준, 기능 등 반영
- NEOX, Siard 등의 신규 보존포맷 처리를 위한 장기보존전략 다양화 및 상이한 형태의 입수포맷 운영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 설계
-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전환 방안 마련

나. 현행 PAMS의 구조적·기능적인 문제 및 비효율성 제거

- 여러 생산시스템에서 이관된 데이터가 단일 맵핑툴(MMO)로 일부 항목만 DB에 저장되고, 일부 생산시스템의 경우 기록물 파일이 XML(NEO)에 포함 저장되어, 이관 데이터 및 파일의 활용률 저하
- 이관된 전자기록의 파일단위 무결성 검증이 곤란하고, 오류 확인을 육안검사로 수행하여 검수에 과다 시간 소요
- 전자기록으로 이관된 문서의 출력본이 비전자로 이관되어 PAMS에 이중 등록되는 문제 발생
- 시스템 보안을 위한 폐쇄망 운영으로 이관 및 데이터 동기화 등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과도한 처리시간 소요 및 업무 비효율 초래
- 비표준 프레임워크로 개발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비효율적이고, 웹표준, 시큐어코딩 등 개발 표준 적용 미비로 보안 이슈 내제

→ (개선방향)

- 다양한 생산시스템의 이관규격 및 형태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유연한 시스템 구축

- 생산기관에서 생성한 해쉬, UUID 값과 연계하여, 이관 기록물에 대한 무결성·진본성 검증 프로세스 적용
- DFR, 해쉬값 등을 활용한 파일상태 자동검수 및 변경여부 검증
- 동일 내용의 기록에 대한 전자, 비전자 중복 등록 방지 방안 마련
- 시스템 간 보안이 확보된 안정적인 온라인 연계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오프라인 작업 및 비효율 제거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개발 표준 적용으로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특정 업체 종속 기술 방지

다. 비표준 전자기록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다양한 유형의 비표준 기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PAMS는 표준 전자문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수용이 곤란
- 데이터세트와 같은 전혀 다른 유형의 기록을 철·건 구조의 단일 구조로 등록·관리하고 있어, 관리 및 업무 비효율 증가
- 웹기록이 포털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나, 기록으로서의 보존·관리 프로세스가 부재

→ (개선방향)

- 철·건 구조의 획일적 관리에서 탈피하며, 각 기록 유형 및 입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이관·등록·관리 프로세스 마련 및 적용
 - * (기록유형) 문서, 시청각, 간행물, 행정박물·선물 등 / (입수유형) 등록, 수집, 구술
- 저장매체로 이관된 비규격 전자파일 기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프로세스 마련 및 적용
- 데이터세트 이관, 보존 및 이력 관리 프로세스 마련 및 시스템 구축
- 웹기록 이관·보존 관리 모델 설계 및 웹기록 변경사항 관리를 위한 기술방안 검토

라. 대통령기록 정보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 및 품질관리체계 마련

- 다양한 생산시스템 이관 및 대통령별 이관 규격 변경으로 다종의 규격의 데이터가 이관되고 있으나, DB설계 시 표준화 미비 및 맵핑 오류 등의 원인으로 데이터 오류가 지속적으로 증가

- 기록철번호, 관리번호, 기록철생산ID 등 같은 기록에 대해 여러 식별번호가 정확한 정의 없이 혼재되어 있어, 데이터 관리에 혼란 가중

→ (개선방향)

- 기록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표준 정립 및 DB 재설계
- 입수 데이터에 대한 품질검증·관리 강화 및 오류 방지 방안 마련
- 불필요한 코드값, 식별정보 도출을 통한 코드정비 및 효율적인 식별체계 마련

마. 디지털 기반의 대통령기록 서비스 모델 구축

- 제한적인 소장 기록물 목록·원문 제공과 단순 이미지형 콘텐츠만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의 다양한 기록정보의 온라인 제공이 요구
- 전직대통령 기록물 열람 시, 현장 방문 열람만 가능하여 불편 초래

→ (개선방향)

- PAMS와 포털을 연계를 통한 전자·전자화 기록물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 방안 및 프로세스 마련
- ICT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관점의 포털 콘텐츠 서비스 방안 검토
- 전직 대통령 열람을 위한 PAMS 기능 설계 및 보안을 고려한 온라인 제공 방안 마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대통령기록물 법·제도 및 생산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차기 기록물 이관의 차질 없는 수행 및 안정적인 보존·관리 가능
-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특성에 맞는 이관·등록·보존 프로세스 재정립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대통령기록물 디지털아카이브 기반 확보
- 일관성 있는 데이터 검증·관리를 통한 대통령기록 정보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 기록관리 업무 및 서비스에 최신 ICT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향후 기록관리 업무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 제시
- 중장기 정보화전략 마련과 데이터 증가, 전산자원 소요량 예측으로, 시스템 운영 위험요소에 적극 대응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 추진 내용(개선 방안)

[혁신과제 추진내용 총괄표]

목표	세세부 과제	추진방법	비고
단기 (‘18년)	①ISP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예산확보	‘18년 완료
	②ISP 사업 계획수립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내부검토	‘18년 완료(내부결재)
중기 (‘19년)	①차세대 대통령기록관리체계 모델 설계 * 「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사업」 추진	시스템개선	‘19년 8월 완료 예정
	②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시스템개선	‘19년 하반기 (계획수립/‘20년 예산확보)
장기 (‘20년~)	①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1차 고도화 추진 * PAMS / 데이터세트 보존·관리	시스템개선	‘20년
	②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2차 고도화 추진 * 포털 / 웹기록 보존·관리	시스템개선	‘21년
	③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3차 고도화 추진 * SNS 등 신규 유형 기록 보존·관리	시스템개선	‘22년

※ 단기 ①, ② 과제는 ‘18년도 종료

① (중기) 차세대 대통령기록관리체계 모델 설계

- 사업 착수(3월 중순) → 현행시스템 및 요구사항 분석, 개선방향 도출(5월) → 차세대 시스템 목표 모델 설계, 정보화전략 마련(7월)

② (중기) 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고도화 계획수립 및 ‘20년 예산확보

- ISP 결과 기재부 검토(7월) → ‘20년 고도화 예산확보 대응(~11월) → 고도화 계획수립(~12월)

③ (장기) 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1차) PAMS 고도화 및 데이터세트 보존·관리시스템 구축(‘20년)
- (2차) 포털 고도화 및 웹기록 보존·관리시스템 구축(‘21년)
- (3차) SNS 등 신규 유형 기록 보존·관리시스템 구축(‘22년)

□ 추진일정

[혁신과제 추진일정 총괄표]

세부과제명		2018		2019				2020				비고
		3	4	1	2	3	4	1	2	3	4	
단기	ISP 예산 확보											
	ISP 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											
중기	ISP 사업 추진											
	시스템 고도화 예산 확보											
	시스템 고도화 계획 수립											
장기	대통령기록 정보 시스템 고도화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

○ (장기) 대통령기록 관련 시스템간 이관규격 마련(~'20년)

- '19년도 기록관리 표준 수요조사서 제출 완료('19. 1월)

* (규격명)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 연계 기술규격 : 대통령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소요예산 집행일정 >

○ (중기) 「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사업」 추진 : 300백만원

- 사업 선금지급('19.3월) : 210백만원 / 잔금지급('19.8월) : 90백만원

□ 관계기관·부서 협조사항

○ (대통령기록관 전부서) 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개선 의견수렴('19. 3~8월)

- ISP 사업 추진 시, 담당업무 관련 프로세스 개선 및 정보화 개선 의견 제시, 각 단계별 산출물 검토 등 * ISP 업무협의회 운영 연계

3 다양한 기록유형별 등록 메타데이터 정의 및 업무방식 개선

주관부서	기록관리과	국가기록관리T/F 혁신 보고서 관련	세부과제 4-1, 4-4
담당자		관계 기관 관련 부서/팀	생산지원단, 기록서비스과, 보존복원과

□ 추진 배경

- 현행 PAMS 등록 메타데이터 체계가 전자문서에 국한되어 생산 기관으로부터 이관되는 다양한 기록유형 수용에 어려움
- 또, 메타데이터 등록 기준이 미비하여 메타의 누락·오류 등 데이터 품질이 낮아지는 상황에 대한 대책 필요
- 기록유형별 정리·등록 업무 프로세스 기준·지침 등이 미흡하고 정권별 등록완료 시점이 상이한 점 등 업무방식 개선 필요

※ 국가기록혁신 T/F 보고서 관련내용

- (세부과제 4-1) 메타데이터 관리 혁신(p.82)
⇒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일관된 메타데이터 표준 재정비
- (세부과제 4-4) 전자기록 유형별 관리체계 및 포맷정책 재설계(p.96)
⇒ 전자기록물(데이터세트, SNS, 이메일 등) 유형별 관리체계 재설계

□ 그간 추진경과

- (현황분석)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유관기관 사례 조사
 - KS X ISO 23081-1, KS X ISO 23081-2, NAK_S 8 2012(v2.0) 등
 - 국가기록원(CAMS), 국회기록보존소, 법원기록보존소 등
- (방안마련 및 관내 공유) ‘대통령기록물 등록 메타데이터 개선 방안’, ‘시청각기록물의 등록방식 개선 방안’, ‘대통령기록관 이관 간행물 등록 개선 방안’ 초안 마련 및 내부토론회 개최

□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가. 다양한 기록 유형별 등록 메타 개선

- 대통령기록관은 다양한 유형(비전자 기록·전자 기록)의 기록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관 받고 있으나, 체계적인 등록 메타데이터 미흡
 - 비전자 기록(문서·간행물·행정박물·시청각·저장매체)은 현재 엑셀파일로 일괄 등록하여 메타를 생성하고 있으나, 각 기록물 유형별 필수 메타데이터 누락·PAMS DB 허용 범위 불일치 등 오류 발생
 - (개선방향) 기록물 형태별 메타데이터 분석, 필수/선택 요소 파악, 기본 메타데이터 이외에 유연하게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 등을 고려한 메타데이터 재설계 필요
 - 전자문서는 생산기관의 각 시스템* 규격별 메타 정보를 이관 받아 MMO** 매핑을 통해 메타를 추출하고 있으나 현재 PAMS DB구조와 각 이관 규격별 메타 항목 간 불일치로 인해 메타의 누락 발생
 - * 대통령기록물 이관대상 기관은 크게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 대통령직 인수기관으로 나뉘며, 시스템 유형은 7종 이상의 유형으로 구분됨
 - ** MMO(Metadata Mapping Organizer) : 메타데이터 맵핑 도구
 - (개선방향)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사업’ 추진 과정에 개선 내용 반영
- 웹기록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기록정보자료는 기록물 생산 시스템이 다양하여 이관규격·포맷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메타데이터에 관한 현황 분석 곤란
 - (개선방향) ‘본원 BPR ISP 구축 사업(2018) 결과(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본원 표준화 과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장기 보존포맷 규격’(20년 하반기 예정) 추진 내용 참고하여 개선
- 메타데이터 연계정보·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등록 단계에 부여되어있지 않아 누락된 메타정보의 철저한 등록 곤란
 - (개선방향)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일관된 메타데이터 항목 설계, PAMS 메타 정보 관리 권한 협의

나. 다양한 기록 유형별 정리·등록 업무 방식 개선

- 생산기관에서 정리한 기록물을 이관 받지 못하여 이관 이후 기록 유형별 정리·등록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체계화가 미흡하여 업무 방식 개선이 요구됨

→ (개선방향) 정리·등록 현황 및 체계 재점검, 기 이관 기록물 분석을 통한 기관별 기록물 특성 파악 후 각 유형별 업무 지침·프로세스·매뉴얼 보완 및 재정립

□ 추진 내용(개선 방안)

[혁신과제 3 추진내용 총괄표]

목표	세세부 과제	추진방법	비고
단기 (‘18년)	① ‘대통령기록물 등록 메타데이터 개선 방안’ 초안 마련 ② ‘시청각기록물의 등록방식 개선 방안’ 초안 마련 ③ ‘대통령기록관 이관 간행물 등록 개선 방안’ 초안 마련	현황분석	
중기 (‘19년)	① 비전자 기록물 메타데이터 현황 조사 및 분석	현황분석	‘19년 상반기
	② 비전자 기록물 메타데이터 개선(안) 수립	내부검토	‘19년 3/4분기
	③ 정리·등록 업무방식 개선(안) 수립	내부검토	‘19년 4/4분기
장기 (‘20년)	① 전자 문서 정리·등록 체계 수립	내부검토	‘20년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9) 이후 추진)
	② 웹기록,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기록정보 자료 정리·등록 체계 수립	내부검토	‘20년 본원 ISP 추진 내용 및 표준화 결과 참고하여 추진

① (중기) 비전자 기록물 메타데이터 현황 조사 및 분석

- 현재 PAMS · 일괄업로드 프로그램의 비전자 기록물 메타데이터 현황 분석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NAK/S 8:2016 v2.1), 국가기록원(CAMS)·서울기록원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사례 조사·분석

② (중기) 비전자 기록물 메타데이터 개선(안) 수립

- 기록 생애주기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고 다양한 기록유형 메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이외에 유연하게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 등을 고려한 메타데이터 항목 재설계
- 메타데이터 변경 권한 · 변경 이력정보 확인 권한 등 등록 단계에서 필요한 요소를 PAMS 고도화 시 협의

③ (중기) 정리·등록 업무방식 개선(안) 수립

- 다양한 기록 유형별 정리 · 등록 업무 방식 현황 분석
- 각 유형별 업무 지침 · 프로세스 · 매뉴얼 보완 및 개선 방안 마련

④ (장기) 전자문서 등록 체계 수립

- 생산기관 RMS의 다양한 이관규격에 대한 정의가 우선적으로 필요, 이관 받은 연계정보 등의 맥락정보의 메타데이터 등록 방안 마련

*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대통령비서실) 결과에 따른 이관 규격 정의와 '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사업' 추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⑤ (장기) 웹기록,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기록정보자료 등록 체계 수립

- 다양한 유형의 비규격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등록 방안 마련

* '본원 BPR ISP 구축 사업'(2018) 결과(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본원 표준화 과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장기보존포맷 규격'(20년 하반기 예정) 추진 내용 참고하여 작성

□ 추진일정

[혁신과제 3 추진일정 총괄표]

세부과제명		2018	2019				2020				비고
		~12	3	6	9	12	3	6	9	12	
단기	현황 분석, 사례조사 및 초안 마련										
중기	비전자 기록물 메타 데이터 현황 조사 및 분석										
	비전자 기록물 메타 데이터 개선(안) 수립										
	정리·등록 업무방식 개선(안) 수립										
장기	전자문서 등록 체계 수립										
	웹기록,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등 기록정보자료 등록 체계 수립										

□ 관계기관·부서 협조사항

- (생산지원단) 이관 규격 정의, 이관 메타 기준 등에 대한 검토
- (기록서비스과, 보존복원과) 비전자 기록물 메타데이터 개선(안) 검토

4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 업무 개선

주관부서	기록관리과	국가기록관리T/F 혁신 보고서 관련	제3부 1-1, 1-2
담당자		관계 기관 관련 부서/팀	대통령비서실(기록관) 보존복원과 정보화팀

□ 추진 배경

- 대통령지정기록물관리 제도 도입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지정기록물 관리업무 절차 강화 필요
 - 그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지정기록물을 관리해야하는 대통령기록관 소속직원까지 소극적인 업무수행 불가피
 - 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부터 해제 시까지 합리적인 업무절차 마련으로 지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 그간 지정기록물 관리업무 수행 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필요
 - 비전자형태의 지정기록물의 미등록 관리, 지정기록물의 사본 반출 시 회수 방안, 지정기록물에 대한 접근 근거 미비 등 보완

※ 국가기록혁신 T/F 보고서 관련내용

- (세부과제 1-1) 정치중립화·기록전문성에 기반한 지정 재분류·해제 권한 법제화와 업무처리절차 개발(p.145)
- (세부과제 1-2)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지정기록 지정·관리·해제·열람 권한 및 절차(p.147)
⇒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련 법률·시행령 등 개정 필요

□ 그간 추진경과

- (제도개선)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및 제18조의2 개정(안) 마련*
 - (기존) 지정기록물 지정 시점 및 절차에 대한 규정만 존재
 - (변경) 생산기관에서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근거 도입 및 퇴임한 대통령이 보호 필요성이 없어진 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직접 전문위에 해제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18.12.21.)

- (업무개선) 지정해제 대상 대통령기록물 육안검수 및 지정사례 검토 중
 - '19년 상반기까지 지정해제 대통령기록물 분석 완료 예정
 - * 향후 지정기록물 보호기간 만료 시마다 분석하여 지정사례 업데이트 예정

□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가. 대통령지정기록물 선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국회·언론·소송 등을 통한 과도한 대통령기록물 지정 논란 발생
 -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 관련 1심 소송(서울행정법원) 판결 결과 지정대상이 법 제17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정의 효력 불인정
 - * 서울고등법원(2심)에서는 지정효력 인정 판결, 현재 대법원 상고 진행중
- 다만, 중요 국정운영 기록물의 온전한 이관을 위하여 해당 정부의 민감한 대통령기록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부여한 지정 권한은 계속 유지 필요

《 개선방안 》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근거 신설[제도개선]
- 대통령기록관은 既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분석하고 사례를 연구하여 해당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공[업무개선]
 -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에서 지정대상 기록물을 취합할 때 대통령 기록관 지정담당직원을 파견하여 기록관 검토 시 지원
- 대통령 퇴임 이후 보호의 필요성을 상실한 지정기록물을 전직대통령이 전문위에 보호조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제도개선]

※ 대통령지정기록물 세부기준 참고사례

- (대통령비서실) 제16대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세부기준(비공개)
- ※ 대통령기록관 비공개세부기준(공개재분류팀) 등의 형식 참고

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절차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간 국회 2/3찬성의결 또는 고법영장발부 조건 외에는 외부의 열람 및 접근이 제한되는 엄격한 보호하에 관리
 -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영 제10조제4항의 요건외에는 접근 불가

〈 *소속 직원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 ① 대통령기록물 이관업무
- ② 대통령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대책 수립·시행
- ③ 보호기간 만료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 ④ 국회·검찰 열람 시 지정기록물 열람, 사본제공 및 자료제출 관련 업무
- ⑤ 전직대통령의 출판물 및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한 지정기록물 해제
- ⑥ 전직대통령의 열람에 필요한 편의 제공
- ⑦ 지정기록물의 상태검사나 그 결과에 따른 복원 또는 보존매체 수록 등의 업무

- 지정기록물의 이관 이후 예외적 열람 및 해제를 제외하고 소속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기록물관리업무는 상태검사가 유일
 - 전자기록물의 경우 30년간 뷰어프로그램, 암호프로그램 등 관련 S/W기술의 변화가 있을 경우 열람자체가 불가
 - 저장매체의 기대수명이 테이프 10~15년, CD류 10년 내외로 보호기간 해제 시 기록물 열람 불가 우려
 -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지정PAMS에 정리·등록되지 않은 채 서고에 입고하여 서가배치 위치정보를 수동 관리
 - 지정해제 또는 예외적 열람 등으로 지정기록물의 위치나 수량이 변동될 수 있어 서가배치 정보 확인 및 정수점검 필요
 - 기록물 정리작업 미수행으로 RFID도 부착되지 않아 보안관리가 취약하며 서고반출·입 현황 파악 곤란

《 개선방안 》

- 장기간 별도보존해야하는 지정기록물의 특성상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령 제10조의 관리업무 수행 요건 추가[제도개선]
- (정리·등록)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원칙 및 통계관리, 이력관리 등 원활한 업무추진 위해 모든 지정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 필요
 - (전자) 모든 파일을 육안검수하여 오류파일 및 암호설정 파일 등 선별 및 비밀여부 등 검토 후 관련 내용을 별도항목으로 입력
 - (비전자) 미등록상태로 이관된 비전자 지정기록물은 정리(색인정리, 쪽표시, 보존용품 교체 등)하여 지정PAMS에 등록
- (보안) 기록물 정리·등록 시 각 기록물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여 향후 정수점검 및 지정기록물 이동경로·열람내역 등 관리
 - ※ 보호기간 해제 후 일반기록물로 인계 시 등록팀에서 RFID태그 재부착
- (정수점검) 지정기록물 해제 또는 제한적 열람 등으로 지정기록물의 위치 및 수량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 정수점검 추진
 - 한정된 보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수점검 후 서가재배치가 필요하며, 재배치 시 서가위치정보도 변경 필요
 - ※ 비전자 지정서고의 경우 제19대 지정기록물 이관 공간만 남아있는 상황
- (매체수록 평가) 지정기록물은 해당 정부에서 생산한 사료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록물이나 최대 30년까지 폐쇄적으로 관리하여 열람·활용에는 제한이 있다는 특징
 - 열람용보다는 안전성을 고려한 이중보존의 개념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지정기록물은 MF수록 또는 출력보존(전자) 등으로 추진
- (인력증원) 지정기록물의 보안 상 내부직원이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해야하므로 지정기록물 관리를 위한 인력증원 필요[업무개선]

다. 전직대통령의 열람 및 예외적 열람 절차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규정상 전직대통령의 열람범위에 사본제공은 포함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사본이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로 우회하여 열람신청
 - 특히 지정기록물의 경우 열람 후 사본을 즉시 파기하는 규정만 있으며 사본제공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
- ※ '08.9월 법제처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제18조의 ‘전직대통령에 의한 열람’에 사본 제공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국회 및 검찰·법원에 지정기록물 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목적달성 후 회수 및 파기에 대한 근거규정 부재
 - 검찰이 지정기록물 열람하는 경우 가급적 사본반출 없이 열람 후 압수대상 증거자료를 지정서고에 보관하고 재판 시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직접 판사에게 제출
 - 불가피한 경우 사본반출 시 인계인수서에 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 대통령기록관에 이를 반납하도록 명시
- ※ 최근 고등법원 영장에서도 사본반출 시 임의로 재사본제작 금지 및 목적달성 이후 사본을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하도록 명시

《 개선방안 》

- 전직대통령 열람 시 사본제공 및 국회·검찰 등에 대한 사본회수 관련 법적 근거 명문화[제도개선]
 - 다만 전직대통령의 열람은 ‘개별대통령기록관’ 정책의 추진방향에 따라 향후 계속 검토 및 개선 필요
- ※ '18년 법률개정사항에 ‘국회·검찰 사본회수’ 조항 포함
- 국회·검찰의 열람내역 및 사본반출 이력이 지정PAMS상에서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기능 개선 필요[업무개선]
 - 사본 또는 자료제작본 반출 시 건별 반출내역을 PAMS에서 리포트로 작성 기능 추가, 반출 이력 및 회수대상 지속 관리
- ※ 사본제작 및 열람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전자 지정기록물의 등록 및 RFID부착 관련 과제 선결 필요

라. 지정기록물 해제 및 인계절차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법률상 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해제는 전문위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기간 연장 또는 재분류에 대한 근거는 없음
 - 또한 보호기간 지정은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해제 되고 있어 업무 혼선초래
- 전직대통령이 출판물 등을 통하여 지정의 내용을 공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어떤 지정기록물에 있는지 여부는 파악 불가
 - 공표된 내용이 지정기록물건의 전체인지 일부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실제 전직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통보해주지 않는 이상 해제 불가
- 기록물관리의 단위는 ‘기록물철’이나, 지정 보호기간은 ‘기록물건’별로 책정되어 있어 개별건의 공개와 미해제건 보호간의 모순 발생
 - 일부 건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어도 해당 철에 계속 보호중인 지정 기록물이 있어 계속하여 지정서고에서 관리(전자는 기술적 한계도 고려)
 - 지정기록물철에서 해제된 지정건 일부만 인계하여 PAMS에 등록할 경우 기록물철 분리 및 원본질서 훼손
- ※ 기 해제된 지정기록물 중 약 1.1만건 정도가 지정PAMS에 있는 상황
-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수집부서로 인계한 지정기록물을 삭제하지 않고 지정서버에서 계속 관리
 - 인계 및 검수 후 지정서버의 기록물은 해제대상으로 체크 또는 삭제할 필요
- ※ 다만, 철·건별 해제이력 등은 지정PAMS에서 계속 관리 필요(시스템 개선)

《 개선방안 》

- 법률상 전문위 심의대상인 지정기록물 해제 대상 및 절차 명확화
[제도개선]
 - 현 법률의 '제17조 1항에 따른 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를 '제17조 5항에 따른...'으로 개정
 - 전직대통령이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한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에게 해제대상을 통보하는 절차 마련
 - ※ 현 법률개정안 제17조의2에서 전직대통령이 해제대상을 통보하는 규정 반영
 - 지정PAMS 업무매뉴얼에 따른 지정인계인수 절차 시범운영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업무개선]
 - '18년 보호기간 만료된 지정기록물 인계 시 시스템상의 메뉴를 모두 활용하여 시범이관 추진
 - 지정기록물 인계 시 시스템 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 개선내용은 지정PAMS ISP에도 반영하여 향후 사용될 시스템의 규격에 반영
 - 지정PAMS 서버 데이터 및 해제·이관 데이터 전수조사 추진[업무개선]
 - 인수완료한 데이터는 수집부서 등록상태 확인 후 데이터 삭제 검토
 - 시스템 상 지정기록물의 보유현황 및 해제현황 등 통계관리 현행화
 - ※ 일반PAMS에서도 지정기록물의 해제 이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지정PAMS 규격 검토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추가기능 설계·반영[업무개선]
 - 시행령 개정 시 지정기록물의 등록, 정수점검, 매체수록 평가 등이 포함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시스템 반영
 - 보호기간이 모두 도래하지 않은 지정기록물철에 대한 처리방안*은 향후 계속 검토
- * 동일한 지정기록물철에 건별 보호기간이 상이하여 낮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어도 해당 철 내의 모든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인계 불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법률 제5조 및 제17조의 혼선 ○ 지정기록물 세부기준 미비 ○ 시행령 제10조의 지정 관련업무 미비 ○ 외부반출 지정기록물 사본 회수규정 부재 ○ 보호기간 중 전직대통령의 직권 해제 조항 부재 ○ 지정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미흡	○ 법률 제5조 개정으로 명확화 ○ 지정기록물 세부기준 마련 ○ 시행령 제10조 개정 ○ 법 제17조에 사본회수조항 마련 ○ 법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전직대통령에게 지정해제 요구 권한 부여 ○ 지정기록물 시스템 등록 및 전자적 연계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과도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논란 발생 및 국민 신뢰 저하 ○ 담당직원조차 지정기록물에 접근이 곤란하여 소극적인 업무수행 ○ 외부로 반출된 지정기록물 사본에 대한 회수 곤란 ○ 지정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절차 미흡	○ 지정 세부기준 마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도입취지 실현 및 국민신뢰 회복 ○ 지정기록물 관리업무 수행 근거 확대로 지정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체계 확립 ○ 외부로 반출된 지정기록물 사본에 대한 회수로 지정 내용의 안전한 보호 ○ 지정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체계 구축

□ 추진 내용(개선 방안)

[혁신과제 추진내용 총괄표]

목표	세세부 과제	추진방법	비고
중기 (‘19년)	①대통령지정기록물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 근거 마련	법령개정	‘19년 상반기(개정안 마련, 국회통과)
	②해제된 지정기록물의 분석·연구	업무개선	‘19년 상반기(향후 계속)
	③전직대통령의 지정해제 요구 권한 부여	법령개정	‘19년 상반기(개정안 마련, 국회통과)
	④지정기록물 관리수행 업무근거 확대	법령개정	‘19년 하반기(시행령개정)
	⑤외부반출된 지정기록물 사본 회수 근거 마련	법령개정	‘19년 상반기(개정안 마련, 국회통과)
	⑥전문위의 지정해제 권한 명확화	법령개정	‘19년 상반기(개정안 마련, 국회통과)
	⑦지정기록물의 전자적 인계	업무개선	‘18년 해제 지정기록물 인계
	⑧지정기록물 및 이관데이터 전수조사	업무개선	
장기 (‘20년~)	① 미등록지정기록물 정리 및 시스템 등록	업무개선	시행령 개정 이후 인력증원 필요
	②지정기록물 열람 및 사본반출 이력 관리 등 전자적 관리 기반 마련	시스템 개선	
	③지정PAMS에 지정기록물 관리수행 업무 기능 추가 설계 및 반영	시스템 개선	PAMS ISP와 병행추진

□ 추진일정

[혁신과제 추진일정 총괄표]

세부과제명		2018		2019				2020				비고
		3	4	1	2	3	4	1	2	3	4	
중기	법률개정과제 (①,③,⑤,⑥)											
	시행령개정과제 (④)											
	해제된 지정기록물의 분석·연구											
	지정기록물 전자적 인계 추진											
	지정PAMS 데이터 전수조사 및 현행화											
장기	미등록지정기록물 정리 및 시스템 등록											
	지정기록물 관리수행 업무 시스템 추가 반영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

- (중기) 지정기록물 선정 책임성 강화 등 법률개정과제 개선(~'19.6월)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19.3월), 시행('19.6월)
- (중기) 지정기록물 관리수행업무 추가 등 시행령 개정(~'19.12월)
 - 초안 마련('19.3월) 및 내부 업무절차 마련('19.5월)
- (중기) 해제된 지정기록물의 분석 및 연구(~'19.6월)
 - 초안 마련('19.4월) 및 원내·외 전문가 의견수렴·보완('19.5월)
 - 해제된 지정기록물 분석보고서 완료('19.6월)
- (중기) 해제된 지정기록물의 전자적 인계 추진(~'19.9월)
 - 해제된 지정기록물(일반·비밀) 인계계획 수립('19.4월)
 - 지정PAMS의 인계절차 기능을 활용한 인계 추진 및 미구현 기능 보존복원과(정보화팀) 보완 요청 등 ('19.9월)
- (중기) 지정PAMS 데이터 전수조사 및 현행화('19년 하반기)
- (장기) 미등록지정기록물 정리 및 시스템 등록(20년~)
- (장기) 지정기록물 관리수행업무 시스템 추가반영(20년~)
 - 지정기록물 사본반출 이력관리, 정리·등록기능, 정수점검 기능 등

□ 관계기관·부서 협조사항

- (대통령비서실) 해제된 지정기록물 유형분석 결과 검토('19년)
- (보존복원과) 지정PAMS 기능 재설계 및 개선 협조('20년)

5 대통령기록물 평가 폐기 추진

주관부서	기록관리과	국가기록관리T/F 혁신 보고서 관련	세부과제 2-2, 2-4
담당자		관계 기관 관련 부서/팀	생산기관 지원단, 보존복원과

□ 추진 배경

- 대통령 임기 종료 후 기록물을 전량 이관함에 따라 기록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효율성 저하
- 대통령기록물 평가 폐기제도 개선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중요 기록물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록관리체계 구축

□ 그간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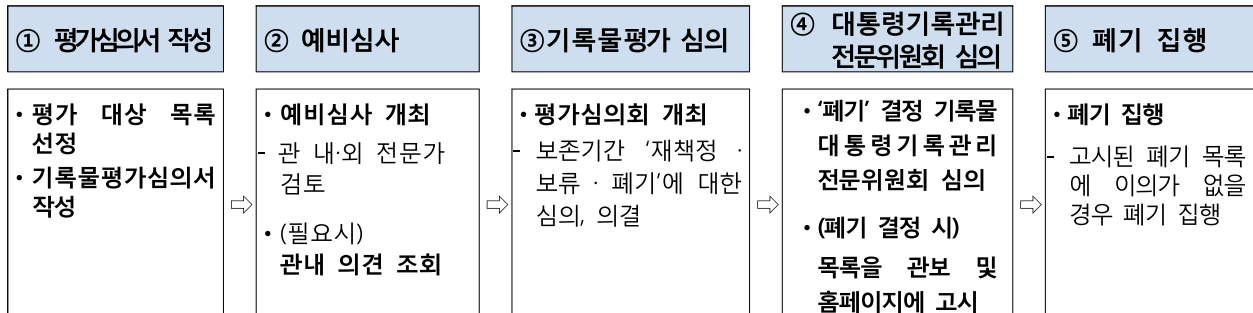
- 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10~’16.12.)
 - 총13회 개최, 22,296권 재평가 완료 ※ 【붙임】 평가심의회 개최 현황
- 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개정(‘16)
 -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보류 기록물 재평가 주기’ 조항 신설
 - ※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5년 → 30년으로 변경
- 대통령기록물 폐기 제도 개선에 대한 혁신과제 제출(‘18.12)

□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가. 현행 대통령기록물 평가 폐기 제도 현황

- 추진근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재평가 및 폐기절차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폐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평가 및 폐기)

○ 대통령기록관 평가 폐기 절차



○ 대통령기록관 재평가 현황('10~'16)

- 평가 및 폐기 관련 전문가회의(예비심사) 개최 : 총 13회
- 평가대상 : 총 22,296권

재평가	총 수량	재책정	보류	폐기 보류
합 계	22,296(100%)	13,314(59.7%)	8,873(39.8%)	109(0.5%)

○ '10~'16년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평가를 추진했으나 평가담당자의 심사에 의해 '폐기'로 결정되더라도 평가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보류'

- ① 대통령기록물법 시행 초기인 점 ②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통령기록물의 특성 ③ 보존 시설의 여유 등을 사유로 폐기 보류
- 또한, 평가를 통해 “폐기”를 결정하기보다 “재책정”이나 “보류”를 통해 영구기록물을 선별하므로써 평가 기능 약화 초래

⇒ 대통령기록물 평가 폐기제도 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

⇒ 소장 대통령기록물 유형별 우선 평가대상 선정 및 시범 폐기 추진

나. 생산기관에서의 기록물 평가현황

○ 생산기관에서는 이관주기상 보존기간 1년, 3년으로 책정된 기록물의 일부만이 폐기가 가능하나

- 생산기관의 평가 및 폐기를 담당할 인력 및 조직의 부재로 현실적 불가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대부분이 기록관 부재
 - 기록관이 없을 경우 보좌기관이 대신하도록 하나 업무과중으로 불가
- 대통령임기 종료 후 생산기관에서 선별절차 없이 한시기록을 일괄 이관하여 소장기록물 중 한시기록의 수량이 점차 증대
- 재임기간 중 폐지기관에서 박물류 등을 이관할 경우 급한 추진일정으로 선별과정 미흡

- ⇒ 대통령기록물 생산단계의 개선 및 이관시 선별 절차 정착
- ⇒ 보존기간 만료 한시기록물의 현황조사 및 이관, 정리·등록, 활용 측면 검토

다. 평가 및 폐기를 위한 체계 구축과 개선방안

[평가기준 마련]

- 한시기록물 현황 분석 및 평가 폐기기준 마련
 - 대통령별, 생산기관별, 단위과제별, 보존기간별, 기록물유형별 목록을 분석하여 평가폐기 기준 마련
- 평가폐기 기준 작성시 참고사항
 - 기관별 공통업무에 대해 기능을 분석하고 기존 평가이력을 반영하여 유형별 평가 폐기 기준 마련
 - 기관별 고유업무에 대해 기관 주요업무와 활동을 고려하여 평가 폐기 기준을 마련하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타 기관과 비교, 통일성 확보
 - 다만, 국가 주요정책, 국정과제, 주요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개별 기록물에 대한 보존가치 재평가

- 동종 대량(다수) 기록물에 대한 프로세스 점검 및 평가 폐기 기준 마련
 - 동종 대량 기록물에 대해 이관-정리-등록-활용 측면을 검토하여 동일 사례에 대한 기록물 평가 폐기 기준 마련
 - 생산기관에서 이관한 동종 간행물을 관련 절차에 따라 시범 폐기 추진
 - 생산기관에서 이관한 보존가치가 낮은 행정박물에 대한 평가 폐기 검토
 - 행정정보데이터세트에 대한 보존대상 선별 및 평가 폐기기준 마련
 - 이관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철건 구조로 PAMS에 등록, 관리하여 공개 재분류 등 기록관리 프로세스 이행에 많은 인력과 예산 소요
 - 관련 규정(지침) 검토, 기능별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 보존가치가 낮은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선별하여 폐기 검토
- ※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18. 12월 기준 3,175,858건을 재분류하였으며 향후 대상량은 792,872건에 이릅니다

[평가심의 절차 내실화]

- 개관 이래 대통령기록물의 평가 폐기 업무는 전담인력 1인으로, 적기에 평가 폐기가 불가능하여 평가대상 기록물 누적
 - ※ 현재 보존기간 만료 한시기록(문서)은 22,500여철로 대략 180만건에 이르며 매년 증가
- 기록물 확인 등 평가작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어려워 재책정, 보류 판정 비율이 높음
- 또한 평가 대상 기록물 수량이 많고 관련 영역이 매우 다양하나 심의위원은 2~3개 영역에 한정됨
- 최종 심의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우며 최종적인 판단보다는 '보류' 판정이 발생

- ⇒ 평가 폐기의 상시적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의 안정적 배치
- ⇒ 소장 대통령기록물 특성을 고려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과학 영역으로 평가위원 확충
- ⇒ 기록물 평가 폐기 검토시 심도있는 논의로 실질적인 자문 기능 강화

라. 유형별 평가 폐기대상 기록물 발굴 및 폐기 추진

- 기록물 양태에 따라 폐기절차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시범폐기 추진
- 생산기관에서 이관된 간행물 중 납본(3부) 이외의 복본 간행물에 대한 폐기 추진
- 생산기관에서 일괄 이관된 보존가치가 낮은 동종의 행정박물을 대상으로 폐기 여부 및 절차 검토
- 대통령기록관에 대량 이관되어 철건 등록되어 관리되나 보존가치가 낮은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평가 폐기 검토

※ 재임기별 보존기간이 상이하며 기능 대비 과책정 경향이 있으므로 데이터세트에 대한 전반적인 보존가치 검토 필요

- 보존가치 만료 한시기록물에 대해 우선 폐기 대상 선정 및 폐기
 - 과거 평가 심의가 선행된 동종 기록물에 대해 평가결과를 참고하되, 보존기간 책정기준을 고려하여 검토 후 폐기범위 선정
 - 신규 유형 기록물은 보존기간 준칙, 공통과제기록물 보존기간 표준, 기록관리기준표 등 現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 확인 및 검토
 - 특정분야나 주요사안에 대한 보존기간 검토를 위해 추가적 책정기준 마련

※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에 대한 현황분석으로 중장기적인 폐기일정 수립 및 안정적 평가 폐기제도 운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에 집중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중요 기록물의 선별 이관 및 효율적인 관리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대통령기록관리의 독자적 평가기준 미비로 보존관리 기반 미약	○ 대통령기록물 평가기준 마련으로 대통령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 공공기록물 평가 방식을 준용하여 보존기간 재평가 수행	○ 대통령기록물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평가 체계 확립으로 내실있는 평가 폐기
○ 평가 폐기 미집행으로 보존서고 공간 부족	○ 적절한 평가 폐기로 보존서고의 효율적 운영
○ 한시기록의 후속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의 지속적 투입	○ 한시기록에 대한 인력 및 예산 투입분을 주요 기록물 관리에 집중

□ 추진 내용(개선 방안)

[혁신과제 5 추진내용 총괄표]

목표	세세부 과제	추진방법	비고
단기 (‘18년)	① 18대 이관 간행물 등록 및 현황조사	현황분석	‘18년 완료
중기 (‘19년)	① 기록물 유형별 평가대상(범위) 조사	현황분석	‘19년 상반기
	② ‘19년 기록물 평가폐기 계획수립	현황분석	‘19년 상반기
	③ 대상 기록물 평가를 위한 회의 구성	업무개선	‘19년 상반기
	④ ‘19년 폐기 대상 기록물 선정 및 검토 회의(간행물, 데이터 세트 등)	기준마련	‘19년 상하반기
		업무개선	‘19년 상하반기
장기 (‘20년~)	⑤ 한시기록물 분석 등을 통한 평가 폐기 기준 마련	기준마련	‘19년 하반기
	① 대통령기록물 평가 폐기 계획 수립(매년)	업무개선	‘20년 상반기
	② 평가 폐기대상 선정 및 폐기 추진(매년)	업무개선	‘20년 하반기

① (중기) 기록물 유형별 평가대상 조사

-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 중 우선 평가 폐기 대상 조사
- 등록 및 미등록 기록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우선순위 선정
예) 간행물, 행정박물, 행정정보데이터세트, 한시기록물(문서) 등

② (중기) 2019년 기록물 평가 폐기 계획 수립

- 2019년 대통령기록물 평가폐기 계획 수립
- 평가 폐기 절차 점검 및 분야별 평가 폐기일정 수립

③ (중기) 대상 기록물 평가를 위한 회의 구성

-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확충한 기록물 외부 자문위원 구성
- 필요시 내부 관련 부서 검토 회의 개최

④ (중기) '19년 상하반기 폐기 대상 기록물 선정 및 검토회의

- 기록물평가검토서 작성 및 기록물 검토회의 개최
- 기록관리전문위원회 상정

⑤ (중기) 한시기록물 분석을 통한 평가 폐기 기준 마련, 집행

- 보존기간 만료된 한시기록물의 목록 추출 및 유형별 분석
- 한시기록물 평가 폐기 추진

※ 본원 관련부서(보존인수과)의 평가 폐기 기준 참조 및 협의

① (장기) 대통령기록물 평가 폐기 체계 구축

- 대통령기록물 평가 폐기기준에 따른 중장기적 폐기일정 수립
- 인력 확보로 평가 폐기제도 안정화

② (장기) 폐기대상 한시기록물 추출 및 분석

- 소장 기록물 중 우선 평가 폐기대상 추출 및 분석, 폐기 추진

□ 추진일정

[혁신과제 1 추진일정 총괄표]

세부과제명		2018		2019				2020				비고
		3	4	1	2	3	4	1	2	3	4	
단기	현황조사											
중기	평가대상 조사											
	'19년 기록물 평가폐기 계획수립											
	평가회의 구성											
	'19년 폐기 대상 선정 및 검토회의											
	한시기록물 분석 및 평가 폐기 기준 마련 집행											
장기	대통령기록물 평가 폐기계획 수립											
	평가 폐기대상 선정 및 폐기 추진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

- (중기) 대통령기록물 자문회의 운영규정 제정(~'19.5월)
 -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 자문회의 운영규정 근거 마련('19.6월)
- (장기) 대통령기록물 평가 폐기 기준 마련(~'19.12월)
 - 초안 마련('19.9.) 및 관내외 의견수렴('19.10.), 확정·운영('20.1.)

□ 관계기관·부서 협조사항

- (생산지원단) 대통령기록물 평가 폐기 기준마련시 연계 추진 검토 PAMS ISP 및 고도화시 폐기이력 등 관리체계 개선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평가폐기 기준 통보 및 생산기관 의견수렴

붙임 기록물 평가심의회 개최 현황 [‘18.12.30. 기준]

○ 기록물 평가심의회 개최 현황(제1회~제13회) : 전체 22,296권

- 심의결과: 재책정 13,314권(59.7%), 보류 8,873권(39.8%), 폐기보류 109권(0.5%)

구분	보존기간 재책정						보 류		총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소계	보류	폐기 보류	
1회 (‘10.6.16)	114	10	144	40	16	324	57	19	400
2회 (‘10.12.3)	310	55	387	277	0	1,029	955	63	2,047
3회 (‘11.6.27)	45	140	280	0	0	465	0	0	465
4회 (‘11.12.21)	389	411	1,515	237	0	2,552	0	0	2,552
5회 (‘12.7.4)	427	1	105	110	0	643	412	0	1,055
6회 (‘12.12.11)	353	1	142	129	0	625	508	0	1,133
7회 (‘13.6.25)	105	0	114	36	0	255	523	0	778
8회 (‘13.12.3)	549	0	444	289	0	1,282	536	0	1,818
9회 (‘14.6.24)	359	54	65	146	0	624	99	0	723
10회 (‘14.12.16)	167	108	38	1,281	0	1,594	156	0	1,750
11회 (‘15.9.24)	1708	205	-	-	-	1,913	2,949	0	4,862
12회 (‘16.7.29)	942	68	-	-	-	1,010	1,475	0	2,485
13회 (‘16.12.20)	915	83	-	-	-	998	1,203	(27) (*전문위원회 상정 예정)	2,228
총계(권)	6,383	1,136	3,234	2,545	16	13,314	8,873	109	22,296
비율(%)	28.6	5.1	14.5	11.4	0.1	59.7	39.8	0.5	100

6 비공개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체계 개선

주관부서	기록관리과	국가기록관리TF 혁신 보고서 관련	세부과제 자체추진*
담당자		관계 기관 관련 부서/팀	생산지원단, 기록관리과 등록팀, 보존복원과

□ 추진 배경

- 대량이관, 처리주기 누적에 따른 대상량 폭증으로 공개재분류 체계 개선 필요
 -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위탁사업 진행, 실적위주의 재분류업무에서 탈피하여 기록물 전량을 자체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
- 재분류 대상선정 및 절차 개선으로 공개재분류업무 체계 재정립 필요
 - 매년('09~'18년)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재분류 검토서 작성 및 동일 및 유사기록물에 대한 공개값 불일치 등 일관성 결여
 - 지정·비밀해제, 추가이관, 생산 30년경과 등 예측 불가능한 대상량에 대한 관행적 업무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공개재분류 필요

□ 그간 추진경과

- 공개재분류 업무프로세스 검토 및 개선점 토론(10월)
 - 공개재분류 주기, 재분류대상 범위, 미분류기록물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시 대응방안,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이력관리 등
- 공개재분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보고서 초안 마련(10월)
 - 현황 진단,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 공개재분류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혁신과제(초안) 제출(12.4)

※ '19년도 공개재분류 업무추진계획 수립시 개선안 일부 반영

□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가.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

○ 제도적 측면

- 지정·비밀해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시기 미규정에 따른 관행적 재분류
- 이관 5년경과 후 1년 이내 공개재분류의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대상범위 한정 필요
- 최초재분류후 2년 주기 재분류 규정은 현실적으로 기한내 수행곤란

- ⇒ 지정·비밀해제 기록물 등록 후 2년 이내로 재분류 시기 개선 필요
- ⇒ 최초 공개재분류 대상을 보존기간 30년 이상 또는 중요부서, 사건, 인물 등으로 한정
- ⇒ 2년주기 재분류 유예대상 범위를 1호, 2호, 6호, 7호로 확장 적용 필요

○ 기록관리적 측면

- 생산기관에서 공개재분류 미분류로 이관된 기록물은 비공개로 간주
- PAMS 기능 구축이전 철 단위로 파행적 공개재분류하여 재분류 통계수치 오류 수정 곤란(1철=10건)
- 개별업무시스템 및 시청각기록을 문서기록과 동일하게 공개재분류하여 재분류 실효성 저하

- ⇒ 이관기록 정리·등록 진행시 공개여부 미분류 기록에 대한 공개값 책정 선행 실시
- ⇒ 16대 비전자기록물 철단위 재분류 공개값 건단위 현행화 후 통계수치 오류 수정
- ⇒ 개별업무시스템 및 시청각기록물(사진) 공개재분류 대상 범위 제외

○ 운영적 측면

- 한시기록물 등록 및 평가 폐기 절차 미수행 등 비정상적 관리 프로세스로 인한 공개재분류 대상량 증가
- 추가 이관기록물 수시 등록에 따른 재분류 대상량 변동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코드 적용불가 및 세부항목의 중복 적용 등의 모호성

⇒ 한시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평가폐기절차 선행 후 재분류 대상 선정
 ⇒ 추가 이관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시기는 등록 후 2년 이내로 조정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코드, 적용례 수정 및 추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공개재분류 대상 광범위 ○ 지정·비밀, 추가이관기록물 재분류 시점 모호 ○ 비공개대상정보 일부 세부기준 및 코드 모호	○ 문서류로 공개재분류 대상 범위 축소 ○ 지정·비밀, 추가이관기록물 등 대상별 재분류 시점 명확 ○ 중복항목, 적용불가 세부기준 및 코드 개선으로 적확성 제고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법정시한 준수를 위한 위탁사업 등 실적위주 재분류로 품질에 대한 신뢰도 저하 ○ 재분류 시점 모호 기록의 관행적 재분류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중화된 재분류 절차	○ 대상량 축소 및 전량 자체처리 방식 전환으로 품질 제고 및 직원 전문성 향상 ○ 재분류 시점 명확화로 체계적 재분류 가능 ○ 재분류 작업 단계 조정 및 핵심데이터 작성 등 재분류 절차 온라인 일원화

□ 추진 내용(개선 방안)

[혁신과제 5 추진내용 총괄표]

목표	세세부 과제	추진방법	비고
단기 (‘18년)	① 비공개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현황 조사 및 검토	현황분석	‘18년 완료* * 혁신보고서 초안
중기 (‘19년)	① 비공개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자체 수행 전환	업무개선	‘19년도 공개재분류 추진계획안 보고(1.29)
	② 공개재분류 세부기준 정비	기준개정	‘19년 하반기(세부기준 개정)
	③ 공개재분류 작업절차 단계 간소화	업무개선	‘19년 하반기(PAMS 기능개선 고도화 사업시 반영 요청)
장기 (‘20년~)	④ 비공개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공개 강화	업무적용	‘20년이후

※ 단기 ①, ② 과제는 ‘18년도 종료

① (중기) 비공개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자체수행 전환

- 공무원 인력확보(12명),
* ‘19년 4월 중 재분류작업 투입 예정
- 공무원 공개재분류 숙련을 위해 직원 1:1 작업내용 검토 피드백
- 주기적 전체 교육, 팀별 교차 점검 등으로 효율적 재분류 기반 마련
* 최초 및 주기별 재분류에 맞는 팀구성

② (중기) 공개재분류 세부기준 정비

-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
- 세부기준 중복항목 통합 및 새로 적용 가능한 세부코드 신설 등
-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판례조사 분석 후 적용가능 항목 추가
* 대통령기록관 자문회의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의견 수렴

③ (중기) 공개재분류 작업절차 단계 간소화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재분류 작업 방식을 온라인으로 일원화, 현 5단계의 작업절차 3단계로 축소(PAMS 기능개선 사항)
- 작업그룹 자동생성, 건별목록별검토서 세부내용 입력 항목 및 공개제한쪽 표시 등 간소화

④ (장기) 비공개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공개 강화

- 동일 또는 유사기록에 대한 공개값 불일치 검토 분석 후 공개값 조정
- 공개재분류시 공개값 결정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 자문 등을 통해 공개값 결정의 주관성 배제

□ 추진일정

[혁신과제 5 추진일정 총괄표]

세부과제명		2018		2019				2020				비고
		3	4	1	2	3	4	1	2	3	4	
단기	공개재분류 현황분석											
중기	공개재분류 자체전환											
	세부기준정비											
	작업절차 간소화											
장기	공개재분류공개강화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

- (중기)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19.7~12)
 - 세부기준 개정안 마련('19.12), 시행('20.1)

< 소요예산 집행일정 >

- (중기) 공개재분류 세부기준 정비('19.9~11) : 150만원(일반수용비)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 간담회('19.9월) : 150만원

□ 관계기관·부서 협조사항

- (보존복원과) 재분류작업절차 간소화 시스템 반영 검토('19. 7월)

7 수집기록물(구술·기증 등) 관리 체계 개선

주관부서	기록관리과	국가기록관리T/F 혁신 보고서 관련	자체발굴
담당자		관계 기관 관련 부서/팀	생산지원단(ISP분야) 보존복원과(MAM분야)

□ 추진 배경

- 전자적 업무환경에 맞는 업무절차 개선 및 공개 등 서비스 필요
 - 기록관리 환경변화(아날로그 → 디지털)에 따라 구술채록 생산방식 변경 및 전자적 기록관리 업무프로세스 확립 필요
 - 그간 축적된 역대 대통령 및 관련인사 구술채록 기록물의 분류 및 공개·열람 등 서비스 강화 필요
- 기증 기록물의 수집 범주 및 기록관리 체계의 재정립 필요
 - 다년간('09~'18년) 민간 소장 대통령 관련 기록물 발굴·수집해 왔으나, 공공 성격의 기록물 포함 등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범주 모호
 - 등록사항 미흡, 공개재분류 미수행 등 체계적인 기록관리 필요

□ 그간 추진경과

- 구술기록물 수집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 초안 마련(10월)
 -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도출
 - 기증기록물 수집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 초안 마련(10월)
 - 현황 진단, 수집 및 관리 체계의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 구술 및 기증 기록물에 대한 혁신과제(초안) 검토(10.23.) 및 보완
 - 구술 및 기증 기록물에 대한 혁신과제 제출(12.3.)
- ⇒ 대통령기록관리 혁신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개 과제(기증 및 구술) 1개 과제(수집기록물)로 통합하여 추진('19.2.19.)
- ※ '19년 1차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내부토론회에서 통합 추진 결정

□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가. 구술기록물 수집 현황과 개선방안

○ 생산 환경 측면

- 구술 대상자의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구술채록 중심으로 사업수행
- 정권별 다양한 인물의 구술채록이 추진되었으나, 결락 분석은 미흡

⇒ 구술채록 뿐만아니라, 공개 및 열람 등 서비스를 고려한 구술채록 업무 수행
 ⇒ 축적된 구술기록물의 종합 분석으로 향후 분야별 구술정책 등 로드맵 설계

○ 기록관리 측면

- '15년까지는 구술채록에 집중, '16년 이후 PAMS에 등록하였으나, 매체단위의 비전자 형태 등록·관리로 온라인 검색·활용에 근본 한계
- 구술기록물은 PAMS에 사업별/대통령별/구술자별/산출물유형별로 기록물철을 등록하고, 기록물철당 하나의 기록물건으로 등록
- 등록사항에 별도의 분류체계 없이 철/건 제목에 사업연도별/구술자별/산출물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등록

⇒ 매체 중심의 등록·관리를 탈피하고, 온라인 검색·활용 가능토록 등록방식 전환
 ⇒ 사업별/구술자별 분류방식 이외에 업무/기능/주제 등 구술기록물의 분류체계 설계
 ⇒ 구술자별 구술기록물(동영상 및 음성 등)을 구술내용별 세분화 등 등록·관리단위 재정립 및 정리·등록 프로세스 및 방식 재설계
 ⇒ 대통령별/구술자별 분류를 기반으로 한, 업무/기능/주제 등의 다양한 분류체계 적용
 ⇒ 구술채록 기록물(산출물 등)에 대한 정체성 명확화 및 기록관리 절차 마련

○ 공개·활용 등 서비스 측면

- 공개·열람을 위한 기본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기록관 구술기록 수집·관리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나, 구술기록 특성을 고려한 세부사항은 미비
- 구술채록 시 구술자별 비공개 내역서를 제출 받고 있으나, PAMS에 등록된 공개여부는 대부분 '미분류 또는 해당없음'으로 등록

-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기대수준은 온라인/실시간 방식을 기대하고 있으나, PAMS 등록 시 구술채록 전자파일은 업로드 제외
- PAMS 등록으로 연도별/대통령별/구술자별/산출물별 검색은 가능하나, 구술내용(질의답변요지, 해제 등)에 대한 검색 및 일반기록물과의 연계 활용 기반은 미비

⇒ 구술기록물 특성을 고려한 공개·열람 세부 기준, 절차 및 실행 방안 마련
 ⇒ 구술자 의견 및 구술기록물 특성이 반영된 공개세부기준에 따른 공개관리
 ⇒ 동영상·음성 파일 내에서 검색·활용이 가능(타임코드기반 내용기술)한 시스템 설계
 ⇒ 구술내용 서비스 및 일반기록물과의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계 방안 검토

○ 전자적 업무환경 측면

- 현 PAMS에는 구술기록물의 특성(구술성, 공동작업, 직접 생산·등록 등)을 고려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업무 프로세스 등 미흡
- 동영상·음성 처리(디지털화, 내용기술 등)를 위한 MAM(대용량시청각 기록물관리시스템) 연계 등 온라인 업무수행 방안 미비
- 대국민 서비스를 고려한 대통령기록포탈 연계 방안 미비

⇒ 구술기록물 특성이 반영된 전용 **구술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업무 수행
 * PAMS 내 전용 기능구현 또는 별도의 구술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 최적 방안 검토
 ⇒ 구술기록관리시스템과 MAM 연계를 통한 일원화된 **디지털영상처리기능**** 설계
 * 동영상·음성 파일에 타임코드기반 내용기술 및 저장 등의 업무처리 일원화
 ⇒ 공개 가능 구술기록물은 대통령기록포탈을 통해 온라인 대국민서비스 기반 조성

나. 기증기록물 수집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 수집대상 선별 측면

- 대통령 및 주요 인사 1인 중심의 대규모 일괄 수집에 따른 공공 기록물 등의 혼재로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범주 모호
- 주요 인사의 자택, 사무실 소장 기록물을 일괄 이송 및 정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중앙부처 생산 기록물 및 일반도서 다수 포함 및 중복 발생

- ⇒ 서고 보존환경 등을 고려하여 목록상의 자체 **선별*** 후 기증예정자와 수집 대상 협의, 조정 추진
- * 기록물의 선별 강화를 위한 안전장치로 심의회 운영 활성화
- ⇒ 기증예정 기록물에 대한 대통령기록관 소장 여부 사전 파악으로 기록물 중복 수집 예방

○ 공개관리 측면

- 기록물의 중요도·민감도에 따라 기증자의 비공개 기간 장기화 요구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07) 이전 생산 기록에 대한 공개시기 적용 근거의 입법 미비로 공개 관련 관리조건 협의 제약
- 공개재분류(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미분류) 프로세스의 미적용으로 체계적인 기록관리 미흡

* 총 129,843건 등록('18.6. 기준), 비공개(미분류 포함)가 80,361건(62%) 차지하고, PAMS 등록 시 공개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미분류로 조치

- ⇒ 비공개 기간의 상한 시기를 내부적으로 지정·운영하여 기록물 보존의 안정성과 활용성 확보
- ⇒ 중·장기적 추진계획 하에 8만여 건의 공개재분류 추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구술채록 중심과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처리 수행	○ 대통령기록관 구술기록관리가 공개·활용 중심의 디지털 업무처리 방식으로 전환
○ 오프라인 방식의 열람 서비스	○ 디지털 기반의 구술 아카이브 구축
○ 대통령기록과 공공기록의 혼재 및 중복 발생	○ 보존가치가 높은 원본 중심의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
○ 기증기록물의 기록관리 사각	○ 기증기록물에 대한 기록관리 절차 적용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구술채록 중심의 아날로그 업무처리 방식으로 업무 비효율	○ 디지털 방식의 업무처리 전환으로 업무 효율화 및 열람 등 소요시간 단축
○ 전자적 보존·활용 방안 미비로 온라인 서비스 불가	○ 디지털 구술 아카이브 구축으로 온라인 업무 활용 및 서비스 강화
○ 대통령기록과 공공기록의 혼재 및 중복 발생으로 불필요한 관리 부담	○ 보존가치가 높은 원본 대통령기록물의 수집·등록으로 관리 부담 감소
○ 기증기록물의 체계적 기록관리 미흡	○ 기증기록물의 체계적인 기록관리 가능

□ 추진 내용(개선 방안)

[혁신과제 7 추진내용 총괄표]

목표	세세부 과제	추진방법	비고
단기 (‘18년)	①구술채록 및 등록관리 현황조사 및 검토	현황분석	‘18년 완료* * 혁신보고서 초안
	②기증기록물 수집 및 관리체계 현황분석	현황분석	‘18년 완료 * 혁신보고서 초안
중기 (‘19년)	①대통령기록관 구술 아카이브 구축 방안 수립(공개기준/업무절차/시스템구현방안)	용역사업	‘19년 (구축 방안 마련) *사업계획수립 및 계약의뢰 완료(34)
		업무개선	‘19년 하반기(업무절차 개선)
		기준마련	‘19년 하반기(기준마련)
	②기증기록물의 선별 강화(기증자와 협의)	업무적용	‘19년 (사전 선별)
장기 (‘20년~)	③대통령기록관 구술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용역사업	‘20년 (PAMS 고도화 사업과 연계 검토)
	④비공개 기증기록물의 단계적 재분류	업무적용	‘20년 이후(공개재분류 대상에 포함)
	⑤디지털 방식의 구술채록 및 데이터 전환	업무적용	‘21년 이후

※ 단기 ①, ② 과제는 ‘18년도 종료

① (중기) 대통령기록관 구술 아카이브 구축 방안 수립

- 현행 대통령기록관 구술기록 생산·관리체계 진단 및 재설계
- 구술기록 공개 및 활용을 위한 기준 마련
 - * 구술채록 매뉴얼, 분류체계 및 비공개 세부기준 마련에 활용
- 최적의 구술기록물 서비스 방안 제안
- 대통령기록관 구술 아카이브 구축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

② (중기) 기증기록물의 선별 강화

- 향후 기증기록물 수집 시 기증예정자와 협의를 통한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한 사전 선별 및 중복여부 검토 후 수집 추진
- * 기록물의 선별 강화를 위한 안전장치로 심의회 운영 강화

③ (중기) 대통령기록관 구술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 「대통령기록관 구술 아카이브 구축 방안 수립」 사업의 결과에 따라 구술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추진
- * PAMS 내 전용 기능 구현 또는 별도의 구술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 최적 방안으로 추진
- 구술기록관리시스템-MAM 연계를 통한 온라인 디지털영상처리 기능 구현
- * 구술기록을 온라인으로 등록·보존·검색·활용 등의 업무 수행가능토록 연계 구현

④ (중기) 비공개 기증기록물의 단계적 재분류

- 「대통령기록물 공재재분류 체계 개선」 과제의 세부추진 계획에 비공개 기증기록물을 대상에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⑤ 디지털 방식의 구술채록 및 데이터 전환

- 구술기록 자체의 내용검색*이 가능토록 기존 구술기록물에 대한 디지털 전환 및 구술 아카이브시스템에 탑재
- * 타임코드기반의 내용검색 기술 적용 등 (MAM 연계를 통해 자체 인력으로 추진)
- 구술채록 사업 추진 시, 디지털 기반의 내용검색이 가능토록 추진

□ 추진일정

[혁신과제 7 추진일정 총괄표]

세부과제명		2018		2019				2020				비고
		3	4	1	2	3	4	1	2	3	4	
단기	구술기록 현황분석											
	기증기록 현황분석											
중기	아카이브 구축 방안											
	기증기록 선별 강화											지속추진
장기	아카이브시스템구축											
	기증기록공개재분류											지속추진
	구술기록데이터전환											지속추진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

- (중기)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매뉴얼 개정(~'19.12.)
 - 매뉴얼 개정안 마련('19.12.), 시행('20.1. 이후)
- (중기) 구술기록물의 분류체계 및 비공개 세부기준 마련(~'20.6.)
 - 초안 마련('19.12.), 대통령기록관 내 의견수렴 및 확정('20.6.)

< 소요예산 집행일정 >

- (중기)구술 아카이브 구축 방안 수립('19.11.) : 105백만원(일반연구비)

□ 관계기관·부서 협조사항

- (생산지원단) PAMS ISP 및 고도화 시 연계 추진 검토
- (보존복원과) MAM 고도화 사업 시 연계 방안 협의 추진

8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체계 개선**- 전자매체 관리원칙 마련 및 이관·보존프로세스 재정립 -**

주관부서	보존복원과	국가기록관리TF 혁신 보고서 관련	-
담당자		관계 기관 관련 부서/팀	생산지원단, 기록관리과

□ 추진 배경

- 기록관리 체계가 전자기록물로 변화함에 따라 이관·보존에 활용되는 전자매체에 대한 관리 원칙 및 프로세스 재정비 필요

□ 그간 추진경과

- (자체연구) 오프라인 이관도구 고도화를 위한 사전 자체연구* 완료
 - 문제점 진단, 개선사항, 설계 등 이관도구 고도화 기반 마련
 - * 복원관리과 협업으로 『오프라인 이관도구 고도화 설계 및 디지털포렌식 기반 대용량 전자매체 복제SW 개발』 자체연구 추진('18.07.~12.)
- (업무개선) 배치의뢰 대통령기록물 전자매체(비전자 등록) 상태점검 추진*
 - 서고 입고 전 전자매체 열람 가능여부 등 상태점검을 통해 사전 전자매체 오류 확인으로 기록물 보존성 강화
 - * 전자매체 이관·보존 프로세스 재정립시 세부 절차 반영 예정
- (현황분석) 보존서고 내 비전자 대통령기록물 전자매체(시청각 제외) 상태점검 완료
 - 등록·보존 중인 전자매체(FD, HDD 등) 207점(245철) 실물 확인하였으나, 매체 내 기록물에 대한 관리 방안 부재
 - * 대통령기록물 전자매체 저장 파일 정보 확인(2017.11.09.)

□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 전자기록물 외에 전자매체로 이관·등록된 문서, 간행물 등 대통령 비전자 기록물(비정형 전자기록물)에 대한 이관·보존관련 프로세스 부재
 - 전자매체 내 기록물(전자파일)에 대한 이관시점 해시값 미확보로 무결성·진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후 기록물 위·변조 여부 확인 불가

- 매체 내 기록물 PAMS 업로드 등 절차 부재로 매체 노후화 및 단종에 따른 기록물 열람불가 사례 발생 가능

→ (개선방향) 전자매체 이관·보존 절차 개선(안) 마련

○ 제18대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 결과, 이관매체 사본 제작에 따른 관리 방안 미흡 및 이관도구(S/W) 오류 발생에 따른 고도화 필요

- 오프라인 이관에 따른 이관매체 및 사본이 다수 제작되고 있으나 처리 절차 등 이후 기록관리프로세스 부재
- 또한, 이관에 활용된 이관도구(S/W)는 '13년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초기모델로 변화된 IT환경에 따른 고도화 필요

→ (개선방향)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 개선(안) 마련 및 이관도구 고도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대통령기록물 전자매체 이관보존 지침 부재	○ 대통령기록물 전자매체 이관보존 지침 마련
○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 지침 미흡	○ 대통령 전자기록물 오프라인 이관 지침 개선
○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도구(S/W) 무결성·신뢰성·효율성관련 기능 고도화 필요	○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도구(S/W) 무결성·신뢰성·효율성관련 기능 고도화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전자매체 내 대통령기록물(전자파일)에 대한 이관보존 프로세스 부재로 관리 체계 미흡	○ 전자매체 내 대통령기록물(전자파일)이관보존 프로세스 마련으로 무결성·진본성 확보 등 관리방안 마련
○ 전자매체 중심의 이관 체계에서 매체 단종·이관도구(S/W)노후화에 따른 대응 미흡	○ 전자매체 내 기록물 중심 이관 절차 수립·이관도구(S/W) 고도화로 기록물(전자파일) 중심의 이관 체계 구축

□ 추진 내용(개선 방안)

[혁신과제 8 추진내용 총괄표]

목표	세세부 과제	추진방법	비고
단기 (‘18년)	①대통령기록물 전자매체(비전자) 현황 조사	현황분석	‘17년 완료* * 혁신보고서 초안
	②이관도구 고도화를 위한 사전 자체연구	현황분석	‘18년 완료(R&D결과보고*) * 복원관리과 협업
중기 (‘19년)	①대통령 비전자기록물(비정형 전자기록물) 전자매체 이관보존 절차관련 지침(안) 마련	지침마련	‘19년 하반기(지침(안) 마련)
		업무개선	‘19년 하반기(업무절차 개선)
	②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 개선(안) 지침 마련	지침마련	‘19년 하반기(지침(안) 마련)
		업무개선	‘19년 하반기(업무절차 개선)
	③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도구(S/W) 고도화	연구개발	‘19년 하반기(R&D결과보고*) * 복원관리과 협업

※ 단기 ①, ② 과제는 ‘18년도 종료

① (중기)전자매체 이관 비전자기록물(비정형 전자기록물)의 보존관리 절차 마련

- 비전자기록물의 전자매체 이관시 해시값 추출, 임시 스토리지 업로드 등 PAMS 등록 전 무결성·진본성 확보 절차* 마련

* 전자매체가 원본이 아닌 매체 내 기록물(전자파일) 원본 기초의 이관 절차 수립

- 비전자기록물의 PAMS 업로드·검수, 열람 절차, 오류 검사 등 세부 지침 및 업로드 완료 전자매체 처리(안)* 마련

* 전자매체 내 기록물 PAMS 등록 및 업로드 완료시 폐기(임시 스토리지 내 일정기간 보존)

② (중기)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 개선(안) 마련

- 전자기록물의 무결성·진본성 및 관리연속성 확보를 위한 이관 및 이력관리 절차 등 프로세스 재정비

* 전자기록물 이관도구(S/W) 고도화 사업(‘19. 복원관리과) 반영하여 절차 개선(안) 마련

- 이관매체 기준 및 이관진행에 따른 처리 절차(안) 마련

* 이관도구 내 기록물 중심의 이관 절차 개선 예정

③ (중기)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도구(S/W) 고도화

-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입각하여 인수인계 과정에서 기록물관리원칙 준수 및 업무 효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이관도구 고도화 추진
 - * 포렌식 관련 대검찰청 예규 및 TTA 표준을 검토·참고하여 신뢰성 있는 도구 고도화
- 전자기록물 이관절차 수행 소요시간 산정, 사용자 친화적인 UI 설계 등 이관 수행 담당자 업무 효율성 강화

□ 추진일정

[혁신과제 8 추진일정 총괄표]

세세부 과제		2018		2019				2020				비고
		3	4	1	2	3	4	1	2	3	4	
단기	전자매체(비전자) 현황조사											'17년 완료
	이관도구 고도화 사전 자체연구											
중기	전자매체 이관보존 절차관련 지침 마련											
	전자기록물 절차 개선											
	이관도구 고도화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

- (중기) 대통령 비전자기록물(비정형 전자기록물) 전자매체 이관·보존 절차관련 지침 마련(~'19.12.)
 - 초안 마련(~'19.9.) 및 유관부서 의견수렴 및 확정(~'19.12.)
- (중기)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 개선 지침 마련(~'19.12.)
 - 초안 마련(~'19.9.) 및 유관부서 의견수렴 및 확정('19.12.)

- (중기)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도구(S/W) 고도화(~'19.12.)
 - 사업 추진* 및 이관도구 기능 고도화 관련 TF* 운영(~'19.11.)
 - * 본원 국가기록 R&D 추진(복원관리과 협업)
 - ** 보존복원과, 생산지원단 기록관리과, 복원관리과, 전자기록관리과 등 유관업무 담당자로 구성
 - 결과 보고 및 시연('19.12.)
 - ※ 이관 담당자 사전 교육 및 업무 지원('20.1.~)

< 소요예산 집행일정 >

- (중기) 대통령 비전자기록물(비정형 전자기록물) 전자매체 이관·보존 절차관련 지침 마련(~'19.12.) : 비예산사업
- (중기)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 개선 지침 마련(~'19.12.) : 비예산사업
- (중기)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도구(S/W) 고도화(~'19.12.) : 비예산사업
 - * 본원 국가기록 R&D 예산 활용

□ 관계기관·부서 협조사항

- (이관도구 고도화 TF*) 부서간 담당자 지정('19.4.) 및 이관도구 고도화 개발현황 공유 및 개선사항 도출(비정기, ~'19.11.)
 - ** 보존복원과, 생산지원단 기록관리과, 복원관리과, 전자기록관리과 등 유관업무 담당자로 구성
- (생산지원단·기록관리과) 전자매체 이관·보존 절차 지침(안) 및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 개선(안) 검토의견 제출('19.11.)

8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체계 개선 -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공간 정비 및 효율화 -

주관부서	보존복원과	국가기록관리T/F 혁신 보고서 관련	-
담당자		관계 기관 관련 부서/팀	기록관리과, 생산기관지원단

□ 추진 배경

-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활용성 증대를 위한 공간 활용률 제고 필요
 - 서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유형별 배치·정리 기준 마련 필요
 - 서고 내 원본기록물 관리 원칙 준수철저로 보존공간 효율성 제고
 - 공간 점유현황 분석을 통한 기록물 수용량 예측 등 장기적 관점의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공간 효율화 방안 필요

□ 그간 추진경과

- (업무개선) 대통령기록물 보존서고 관리업무 개선사항 분석 및 초안 마련
 -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보고서 초안 마련('18년) 및 주요업무계획 반영('19년)

□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 기록물의 서고배치·정리 기준 미비에 따른 효율적 공간활용 방안 마련
 - 다종다양의 기록유형에 대한 세부적 배치기준 부재로 일관적인 배치·정리 미흡
 - *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대통령별, 기록물 형 태별, 출처별 등으로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도록 명시함
 - 현재 행정박물류의 서고 점유율은 수용량 대비 50%('18.12.31. 기준)이나 가구류 등 대형의 행정박물 등에 대한 서고공간은 부족한 상태로, 서고 공간 효율화 방안 필요

- 대통령기록물 평가-폐기 추진*예정에 따른 공간 재정비 기준 마련 필요
* '20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과제' 중 '5. 대통령기록물 평가-폐기 추진' 관련
- 대통령별, 기록유형별 공간점유에 대한 현황분석 통한 수용량 예측 등, 향후 이관 대비한 서고 보존공간 활용 대응방안 필요
- (개선방향) 서고배치·정리 세부기준(매뉴얼) 마련 및 대통령별, 기록유형별 서고 공간여력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 관점의 효율적 서고 공간 활용 계획 수립

○ 복본간행물 및 불필요한 관리물품의 정리 방안 마련

- 간행물의 경우 원본(보존본, 1권) 외 복본(열람·스캔본 2권)기록물, 기록물 외 진행문서파일(황화일 등)과 구 관리표지·봉투 등 관리물품이 기록물과 함께 편철되어 서고에서 보존
- (개선방향) 보존서고 내 “원본기록물 관리 원칙” 준수하여, 복본 간행물 및 기록물 외 관리물품 처리 방안 마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기록유형별 서고배치 기준 미흡	○ 기록유형별 서고배치 매뉴얼 마련
○ 원본기록물 서고 보존 원칙 준수 미흡	○ 복본 간행물 분리 및 기록물 외 관리물품 폐기
○ 공간 점유 현황분석에 따른 수요예측 분석 미흡	○ 보존서고 공간 수요량 예측에 따른 장기계획 수립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배치 세부기준 미비로 서고 내 기록물 정리 미흡	○ 서고 내 보존기록물 정리로 공간 활용 효율화
○ 원본기록물 보존 원칙 준수 미흡으로 불필요한 서고 공간 소모	○ 원본기록 보존 원칙 준수 철저히 공간 최소화 및 원본기록에 집중한 보존전문성 제고
○ 장기적 보존서고 공간 활용 계획 미비	○ 서고 공간사용 분석 및 수요량 예측으로 장기적 관점의 이관 대응 역량 확보

□ 추진 내용(개선 방안)

[혁신과제 8 추진내용 총괄표]

목표	세세부 과제	추진방법	비고
단기 (‘18년)	① 보존서고 관리업무 현황 조사	현황분석	‘18년 완료* * 혁신보고서 초안
중기 (‘19년)	① 기록유형별 서고배치 매뉴얼 마련 * ‘평가-폐기’와 연계한 공간 활용 방안 포함	현황분석	‘19년 상반기(현황분석)
		기준마련	‘19년 하반기(매뉴얼 마련)
	② 원본기록물의 보존 원칙 확립	업무개선	‘19년 하반기(원본 외 분리폐기)
장기 (‘20년~)	① 보존서고 공간 수요량 예측에 따른 공간 활용 장기계획 수립	현황분석	‘20년 상반기(현황 분석)
		업무개선	‘20년 상반기(계획 수립 및 추진)

※ 단기 ① 과제는 ‘18년도 종료

① (중기) 기록유형별 서고배치 매뉴얼 마련

- 대통령기록물 유형*별 특성 등 현황분석
* 기록매체, 형태, 재질, 수집형태 등 수집하여 보존 중인 기록물 분석
- ‘대통령기록물 폐기-평가 추진’을 반영한 서고 공간 재배치 기준 마련
- 기록물 배치정보 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의 개선 검토
- 현황분석 기초한 유형별 보관방법, 배치 세부기준 매뉴얼화

② (중기) 원본기록물의 보존 원칙 확립

- ‘원본기록물 보존 원칙’ 준수를 위해 복본간행물 분리 및 불필요 관리물품의 폐기 추진
- 간행물 정수점검 통한 실 보관현황* 파악 및 간행물 분리공간(복본 2권 보존공간) 마련(관내 협의필요) 및 분리
* 원본 1권, 복본 2권 및 납본(3권) 외 보관수량 파악하여 분리수량 및 납본 외 폐기수량 파악
- 진행문서화일(황화일 등), 구 보존표지·봉투 등 기록물 외 관리물품을 각 기록물 편철에서 분리 및 폐기

① (장기)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공간 수요량 예측에 따른 공간 활용 장기계획 수립

- 대통령별, 기록유형별 서고 공간 점유 현황조사에 따른 향후 이관 대비 소요 추이 분석
 - * 서고·서가 점유현황, 기록물 폐기 등에 따른 공백발생 현황 등 효율적 서고·서가 공간 활용을 위한 현황조사 추진
-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수요량 예측에 맞는 장기계획 수립

□ 추진일정

세세부 과제		2018		2019				2020				비고
		3	4	1	2	3	4	1	2	3	4	
단기	보존서고 관리업무 현황 조사											
중기	기록유형별 서고배치 매뉴얼 마련											
	원본기록물의 보존 원칙 확립											
장기	보존서고 장기계획 수립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

- (중기) 대통령기록물 기록유형별 서고배치 매뉴얼 마련(~'19.12월)
 - 대통령기록물 유형별 특성 등 현황분석 기초한 유형별 보관방법, 배치방법 매뉴얼 초안 마련(~'19.10월)
 - 관내 의견 수렴 및 확정(~'19.12월)

< 소요예산 집행일정 >

- (중기) 기록유형별 서고배치 매뉴얼 마련(~'19. 9월) : 비예산사업
- (중기) 원본기록물의 보존 원칙 확립(~'19. 12월) : 10백만원(일반용역비)
 - 복본간행물 분리·재배치(~'19.12월) : 5백만원
 - 기록물 외 관리물품 폐기(~'19.8월) : 5백만원
- (장기)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장기계획 수립(~'20. 6월) : 비예산사업

8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체계 개선**- 대통령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PAMS) 데이터 품질 개선 -**

주관부서	보존복원과	국가기록관리T/F 혁신 보고서 관련	-
담당자		관계 기관 관련 부서/팀	대통령기록물생산지원단, 기록관리과

□ 추진 배경

- 데이터품질 자체진단 결과('17.12.) 도출된 데이터 오류를 포함하여 다수의 데이터오류가 존재
- 향후 PAMS ISP/시스템고도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개선기반 마련까지 데이터 정비를 통하여 신뢰성 확보 필요

□ 그간 추진경과

- (업무개선) PAMS보유기록물 정수 및 무결성 점검 추진계획 보고('18.6.22.)
- 업무과정 상 발견된 오류 수시 정비, 데이터 정합성 관리
- (업무개선) MMO 품질검증강화 및 오류데이터(코드값) 보정계획 보고('18.6.29.)
- 필수값, 자릿수 체크 강화를 통한 MMO품질 검증 기능 적용
- (업무개선) PAMS보유기록물 정수점검결과 보고('18.12.5.)

□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 (현황) 이관/등록 데이터에 대한 규격검증 강화기준 최근 마련('18.6.29.) 및 PAMS 내 데이터 오류로 검색·활용에 제한요소 내재
- 비전자기록물 유형은 메타데이터 항목이 많아 직접등록이 용이하지 않음
- (개선추진 1) 이관/등록 데이터에 대한 규격검증 강화('18.6.29.)된 기준에 따라 오류정비

- 데이터 품질 분석결과(약500만건)* 및 신규분석된 오류 및 누락사항 정비
 - * '17.12월 PAMS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
- 오류유형(기록물 형태, 공개값 불일치 등)분류 후 부서별 역할 분담
- (개선추진 2)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의 역할분담, 협업
- 오류 및 누락 데이터의 변경, 수정, 보안 등을 위해 육안 확인* 또는 등록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추진(기록관리과)
 - * 데이터 품질 분석 결과를 공유하여 협업부서의 업무개선에 바탕자료로 활용
- 현재 ISP추진 중으로 생산·이관단계부터 품질 높은 데이터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ISP추진과 연계(생산지원단)

■ (국가기록원) 2019년 기록관리 표준화 계획 작성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 연계 기술규격: PAMS(대통령영구 기록물관리시스템)과의 연계(생산지원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인수 이후 육안검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에 대한 대응방안 부재 ○ 생산시스템과의 단절로 생산기록물 특성 파악 불가	○ 내재화 오류, 누락사항 정비로 품질 제고 ○ 대통령기록물 기록관리시스템과 PAMS의 데이터 항목 규칙의 연계 규격정의로 데이터 품질 관리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대통령별 메타데이터가 서로 달라 활용상 불편	○ 메타데이터 정비로 검색, 보존, 활용 기능 효율성 제고 ○ 이관단계부터 양질의 데이터 확보 가능

□ 추진 내용(개선 방안)

[혁신과제 8 추진내용 총괄표]

목표	세세부 과제	추진방법	비고
중기 (‘19년)	① 데이터 추출 및 분석	업무개선	‘19년 상반기
	② 데이터 정비, 관련부서 간 검토·협의	업무개선	‘19년 하반기(업무절차 개선)
장기 (‘20년~)	① 데이터 연계규격 마련	기준마련	‘20년 상반기(기준마련)

① (중기) 데이터 추출 및 분석

- 데이터 검증기준에 따른 데이터 추출 및 분석(‘19.3.31.)
- (기준) ① 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 비교(MMO)

② 비전자기록물 업로드 규격의 메타데이터와 비교

② (중기) 데이터의 오류 및 누락 등 유형 분류 및 관련 부서 역할 분담 후 데이터 정비

- 유형(오류, 누락)에 따라 난이도, 부서 간 협의 여부 등을 파악하여 데이터 정비 추진

* (비전자)실물확인(육안검수)후 정비 (전자) 전자여부 메타데이터의 값이 상이한 부분 정비 (이관파일 기준으로 정비)

① (장기) 고도화 후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고려하여 MMO규격 정비 방안 검토(생산지원단 협업)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리시스템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받기 위한 데이터 항목 및 규칙 등 연계 규격 등 정의

□ 추진일정

[혁신과제8 추진일정 총괄표]

세세부 과제		2018		2019				2020				비고
		3	4	1	2	3	4	1	2	3	4	
중기	데이터 추출 및 분석											
	데이터 정비											
장기	이관 규격 마련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

○ (중기) 데이터 연계 기술규격 개선

- 연계 기술규격 표준안 마련('20년)

*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재개발 완료 예정 시점

□ 관계기관·부서 협조사항

○ (기록관리과) 데이터 유형별 방침 협의 오류정정 (~'19. 12월)

○ (생산지원단) ISP추진 시 생산·이관 데이터 품질 확보방안 연계(~'19. 12월)

9 대통령기록정보 서비스 개선

주관부서	기록서비스과	국가기록관리T/F 혁신 보고서 관련	세부과제 8-3
담당자		관계 기관 관련 부서/팀	기획제도과, 기록관리과, 보존복원과

□ 추진 배경

-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의 목록·원문 등을 대통령기록포털에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대통령기록물의 연구 기능 확대
-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하여 시의성 있는 전시관 개편 및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대상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

※ 국가기록혁신 T/F 보고서 관련내용

- (세부과제 8-3) 기록정보서비스 강화(p.127)
 - 기록의 디지털화 정책 수집 및 원문서비스 정책개선,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콘텐츠·기술 서비스 개선
- ⇒ 대통령기록물 목록·원문 공개, 연구 활성화 및 전시·견학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 그간 추진경과

- (업무개선) 포털 및 콘텐츠 개선관련 현황조사 및 자문 등 추진
 - 대통령기록포털 만족도 및 개선의견 설문조사 및 기록포털 콘텐츠 활용방안 자문회의 개최
- (확대운영) 개관시간 연장, 안내프로그램 확대 등 관람편의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 및 다양한 기획전시** 추진
 - * 일반 단체, 학생 등 전국에서 전시관 방문('18년 149,937명)
 - ** 남북정상회담 순회전시 및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 특별전 공동주관 등
- (확대운영) 연령·계층별로 다양한 대통령기록문화 체험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 대통령기록문화 체험교실(초등), 진로탐색(중·고등), 세종시선관위 연계 체험(대학생·성인), 기록문화 초청 프로그램 운영
 - * '18년 총 166회, 4,078명(78개 기관) 추진('17년 참가인원 대비 35%, 1,063명 증가)

□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가. 대통령기록물 목록·원문 서비스 강화 및 포털 정비

- 현재 포털은 소장기록물의 5%의 목록만 제공하고 있어 기록물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인 검색에 한계
 - (개선방향)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목록의 공개 절차·비실명화 프로세스 구축 및 포털 업로드 추진
- 포털내 기 구축 콘텐츠의 현행화 미흡 및 필수 정보 누락 콘텐츠 다수
 - (개선방향) 기 구축 콘텐츠의 보완 및 주요기록물 발굴·소개
 - 기본 데이터 추가·내용 검증 등 오류 수정, 내용 보완 등 현행화 추진
 - 대통령기록관 주요기록물 발굴·소개 및 Case Study 추진

나. 전시기본계획 마련 및 교육·체험 강화

<대통령기록전시관 기본계획 수립 및 전시콘텐츠 개선>

- 기존 전시관('16.1월 개관)은 장기간 내용변경이 없었고 공통적 개관적 콘텐츠를 구성하여
 - 대통령별 정책·성과 등 특색을 드러내기에 한계
 - 다양한 기록물을 볼 수 없어 관람객 흥미 저하
- (개선방향) 대통령별 정책·성과가 드러나고 대통령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전시콘텐츠 보완

<대통령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통령기록물 등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참가 대상 확대
 -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시청각기록물 등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하여 양방향 소통의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필요
- (개선방향) 대통령기록물 등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참여대상이 초·중학생에 집중되었고, 교육대상 지역을 세종, 대전 및 충청권역에 제한(~'18)
- (개선방향) 연령·계층별로 교육 기회를 균등배분하고, 교육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다. 대통령기록 연구 지원 확대

- 대통령기록물법 제24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나,
 - 연구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 방식 등에 관한 규정 미비
 → (개선방향) 기존 열람실, 도서실 기능 일부를 연구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고, 별도의 연구지원센터 운영규정 마련
- 대통령기록물법 제28조(연구활동 등 지원)에 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 연구비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연구비 관리 등에 대한 세부규정 미비로 ‘연구비 지원사례’ 전무
 → (개선방향)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비 지원 세부규정 마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소장기록물 목록 제공 미흡 (5% 제공) ○ 대통령기록 포털 내 부정확한 정보 다수, 콘텐츠의 현행화 미흡 ○ 5년 임기 마친 시점에 전시관 개편 ○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미비 ○ 인근지역의 초·중생에 집중된 프로그램 운영 ○ 법률 22조, 24조, 시행령 12조 1항 미비 ○ 법률 28조 미비	○ 소장기록물 목록 제공 확대(100% 제공, 254,406철/7,583,496건) 및 원문서비스 ○ 대통령기록 포털 내용 현행화 및 검색 체계 등 기능개선, 주요 기록물 소개·Case Study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시콘텐츠 개편 ○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에 제한 없는 연령·계층별 균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 ○ 연구지원센터 운영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내부규정 제·개정 ○ 법률 28조에 근거한 시행령 신설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목록 및 원문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들의 대통령기록에 대한 활용 및 관심 저하	○ 대통령기록의 이용 가치 확장, 기록의 접근과 활용도 제고
○ 전시컨셉의 무미건조 지속으로 전시 효과 반감	○ 생동감과 감동을 주는 기록체험장으로 전환
○ 인근지역의 초중생 위주로 운영되었으며 기록관련 단순 강의 형식, 대통령기록물 활용 프로그램 미비	○ 연령·계층별 대통령기록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참여형 교육을 통해 대통령기록 문화 창출
○ 대통령기록물 연구비 등 지원 근거 미비	○ 연구비 지원에 기반한 연구단체, 학회 등과 대통령기록물 연구교류 강화
○ 대통령기록물 연구지원 전담기구 미설치	○ 대통령기록물 활용 학술연구 활성화

□ 추진 내용(개선 방안)

[혁신과제 추진내용 총괄표]

목표	세부 과제	추진방법	비고
단기 (‘18년)	① 대통령기록포털 및 콘텐츠 개선관련 설문조사 및 자문회의	현황분석	‘18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자문
	② 개관시간 연장, 안내프로그램 확대 등 전시 관람 편의 확대 제고/ 연령·계층별로 다양한 대통령기록문화 체험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현황분석	누적관람객 471,228명 * ‘18년 149,937명 18년 총 166회, 4,078명 추진 (‘17년 참가인원 대비 35%증가)
중기 (‘19년)	① 소장기록물 목록 제공추진 및 프로세스 개선, 포털 기 구축콘텐츠 보완 등 개선방안 마련	기준마련 업무개선	‘19년 상반기(업무절차 개선, 목록 및 콘텐츠 관련 사례연구) ‘19년 하반기(업무절차 개선)
	② 대통령기록전시관 기본계획 수립 및 전시 콘텐츠 개편/ ‘대통령 의전’ 주제로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 등 대상 시민강좌 프로그램 개설	업무개선	‘19년 상반기(전시기본계획 수립,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업무개선	총 2회 운영(상·하반기)
	③ 연구지원센터 운영 규정 마련	기준마련	19년 하반기(업무절차 개선)
장기 (‘20년~)	① 소장기록물 원문서비스 제공 및 포털내 주요 기록물 소개, Case Study ② 대통령기록전시관 운영규정 마련 및 기본 계획에 의거 매년 1개층씩 전시관 개선/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③ 교육연구단체 등 연구비 지원 방안 마련	업무개선 법령개정	‘20년 상반기(주요기록물 소개) ‘20년 하반기(원문 서비스) ‘20년 상반기(운영규정 마련, 시행, 전시관3층 개선) ‘20년 상반기(개정안 마련)

① (중기) 대통령기록물 목록·원문 서비스 강화 및 포털 정비

- 소장기록물 목록 공개범위, 절차, 방법, 비실명화 프로세스 구축 및 PAMS ISP 반영 등 검토
- 소장기록물 목록의 신속한 포털 반영
 - * 대상목록 : 254,406철/7,583,496건
- 대통령기록포털의 내용검토·메타데이터 수정·현행화 및 포털 정비*
 - * 웹로그 분석도구(애널리틱스)를 통한 주요키워드, 검색 및 탐색 경로, 이용자 접속 환경 등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대통령기록포털 고도화 추진

② (중기) 전시기본계획 마련 및 교육·체험 강화

- 전시기본 계획 수립으로 장기적 개편시 층별 전시콘텐츠 흐름과 구성을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전시관 조성
- 역사성 희소성 대표성을 가진 대통령별 기록물 발굴 및 전시 콘텐츠의 연차적 보완
- ‘대통령 의전’ 주제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 등 대상으로 시민강좌 프로그램 개설

③ (중기) 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마련

- 대통령기록물 전문관리기관으로써의 위상강화를 위해 대통령기록물 연구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연구지원센터 설치
 - * ‘11년 ‘대통령기록물관리 선진화 연구(대통령기록연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 추진
- 현재의 열람실 및 도서실 운영규정을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하여 재검토하고, 필요시 연구지원센터 운영규정으로 통합방안 마련
 - * ‘열람’에 대한 법률상 용어정의, 연구지원을 위한 기록정보 제공 범위 및 방법, 연구 지원 프로그램 등 검토

④ (장기) 대통령기록물 목록·원문 서비스 강화 및 포털 정비

- 소장기록물 비실명화 완료후 원문 공개를 통한 풍부한 기록정보 제공
- 대통령기록관 소장 주요 기록물 발굴·소개·Case Study

⑤ (장기) 전시기본계획 마련 및 교육·체험 강화

- 현재의 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예규 제38호)의 미비점을 검토 보장하여 '대통령기록전시관 운영규정' 마련
- 대통령기록물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⑥ (장기) 교육연구단체 등 연구비 지원 방안 마련

- 「대통령기록물법」 제28조에 의한 '연구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관련 법규정 제개정 추진
- * 교육연구기관의 범위, 연구비 지원 절차, 재원마련 방안, 연구지원센터와의 관계 등 선행연구 단계적 추진

□ 추진일정

[혁신과제9 추진일정 총괄표]

세부과제명		2018		2019				2020				비고
		3	4	1	2	3	4	1	2	3	4	
단기	원문서비스 포털정비											
	전시 및 교육체험 강화											
중기	원문서비스 포털정비											
	전시 및 교육체험 강화											
	연구지원 확대											
장기	원문서비스 포털정비											
	전시 및 교육체험 강화											
	연구지원 확대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

- (중기) 소장기록물 비실명화 및 목록 서비스 프로세스 구축 (~'19. 12월)
- (중기) 연구지원센터 운영규정 마련(~'19. 12월)
 - 열람실 및 도서실 운영규정을 연구지원센터 운영규정으로 통합
- (장기) 대통령기록전시관 운영규정 마련(~'20. 6월)
 - 초안 마련('20.4월), 관련부서 의견수렴('20.5월), 확정·운용 ('20.6월)
- (장기) 연구비 지원 제도 정비(~'20. 6월)
 - 시행령 개정안 마련('20.3월), 시행('20.6월)

< 소요예산 집행일정 >

- (중기)
 - 대통령기록포털 서비스 강화(~'19.12월) : 336백만원(연구용역비)
 - 주제 콘텐츠 개발(~'19.11월) : 60백만원(일반용역비)
 - 상설전시관 개편('19. 11월) : 300백만원(일반용역비)
 - 대통령기록물 연구지원제도 정비(~'19. 8월) : 10백만원(연구용역비)
 -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9.12월) : 58백만원(일반수용비 등)

□ 관계기관·부서 협조사항

- (기획제도과·기록관리과·보존복원과) 대통령기록물 목록 서비스 및 원문 비실명화 프로세스 관련 검토의견 제출('19. 6월)
- (보존복원과) 전시대상 기록물 복제 협조 및 원본 대출('19. 10월)

2018 · 2019

국가기록관리 혁신 자료집

1_총괄편

발 행 인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편집 및 교정 김형국 연구협력과장
이영도 학예연구관
서은영 사서주사

발 행 일 2020년 5월

발 행 처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연구협력과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7호
Tel. 042.481.6250 Fax. 042.481.6234

디자인·인쇄 (주)쑤애드

본 간행물의 저작권은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